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99-210019-10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소중안권리 공정안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당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목, 명지대학교 정수현, 강원대학교 임유진, 한국행정연구원 송진미)에 의뢰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 일러두기 |

각 정책연구소의 연구 개발실적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내 통합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 연구 .....	01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	99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	113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	135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 .....	161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열린민주당 열린정책연구원) .....	167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재단법인기본소득정책연구소) .....	173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시대전환 시대전환LAB) .....	179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민생당 혁신과미래연구원) .....	185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민생당 민주평화연구원) .....	195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진보당 정책연구소(원)) .....	201



#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 연구

## I. 서론

본 연구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2021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 및 운영 실적 자료를 토대로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성과와 변화를 비교 평가하고 정당과의 관계 속에서 정책연구소의 기능 강화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립과 운영은 2004년 개정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정당의 국고보조금과 관련된다. 「정당법」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정당법」 제38조 1항). 또한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정당법」 제38조 2항)는 조항을 통해 정책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로 마련하는 한편,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에 사용할 것을 제도화했다(「정치자금법」 제28조 2항).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정당법」 제35조 3항)하고 있다.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개발 연구 활동을 통해 정당의 정파적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정책 정당으로의 발전을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각 정당은 당헌 등의 규정을 통해 정책연구소에게 각 정당의 중앙당과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 정책연구소는 설립과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정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함께 친밀성이라는 양면적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2021년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아래 <표 1-1>의 11개 정책연구소를 대상으로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연간활동실적을 분석함으로써 정당 정책연구소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그림 1-1> 참고).

<표 1-1> 2021년 정책연구소 현황

	정책연구소	법인등록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2008.09.04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2004.11.26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2012.12.11
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	2020.06.29
열린민주당	열린정책연구원	2020.07.08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	2020.10.27
시대전환	시대전환LAB	2020.12.27
민생당	혁신과미래연구원	2018.10.30
민생당	민주평화연구원	2018.03.15
우리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	2018.12.11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2018.01.1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nec/ex/bbs/List.do?cblidx=1241>).

첫째, 2021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정당 정책연구소의 활동 및 운영실적을 분석한다. 제도적 차원에서 정당 정책연구소의 설립 근거와 중앙당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각 정당의 당헌 및 당규, 정책연구소의 자체 운영 규정 등을 통해 정당 정책연구소가 독립적인 연구기관의 위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실제 운영 차원에서 2021년 정당 정책연구소의 활동 및 운영실적을 비교 분석하고 지난 5년 간(2017~2021년) 정당 정책연구소의 활동 및 운영실적과의 비교를 통해 정당 정책연구소의 변화 추세를 시계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정당 정책연구소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정당정책연구소의 실제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대면 인터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당 정책연구소의 핵심 인사 및 실무진에 대한 서면 심층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정당의 정책결정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정당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한계 등 구조적 현황 등 실제적 차원을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 정책연구소의 운영 현황과 내부 인터뷰, 그리고 기존에 축적되어온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당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싱크탱크로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당의 명칭변경 또는 합당 및 분당 등 정당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정당 정책연구소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 그리고 나아가 정책정당으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II. 정당정책연구소의 조직과 2021년 활동 실적

한국에서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정당은 정책의 개발 및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며(『정당법』 제38조),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제28조).

그러나 정당들의 이합집산과 신생정당의 출현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에서 정당 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의 수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왔다. 특히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병립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요 정당의 위성 정당을 포함한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정당들이 대거 창당되면서 2021년에는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정당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11개의 정당이 정당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활동 실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고 이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온 정당정책연구소는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에 불과하며, 정의당은 2012년 창당 이후 진보정의연구소, 미래정치센터, 정의정책연구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정책연구소를 운영해왔다. 2020년 새롭게 창당된 기본소득당 소속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시대전환 소속 시대전환LAB이 설치, 운영되었다. 이외에 민생당 소속 혁신과미래연구원, 우리공화당 소속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진보당 소속 진보정책연구원, 친박신당 소속 미래한국사회연구원 등 11개의 정당정책연구소가 운영되었다(<표 2-1> 참고).

<표 2-1> 정책연구소의 변화(2013~2021)

정당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더불어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2008.9.4.)		민주연구원 (2016.11.4.)							
국민의 힘	여의도연구원 (2013.10.10.)									
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 (2012.12.11)		미래정치센터 (2015.8.24)		정의정책연구소 (2017.11.7)					
국민의 당								국민미래연구원 (2020.6.29.)		
열린민주당								열린정책연구원 (2020.7.8)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 (2020.10.27)		
시대전환								시대전환LAB (2020.12.27)		
민생당				국민정책연구원 (2016.3.9)		바른미래연구원 (2018.10.30)		혁신과미래연구원 (2020.4.1)		
민생당					바른정책연구소 (2017.4.7.)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2018.1.12)				
우리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 (2018.12.11)				
친박신당								미래한국사회연구원 (2020.10.27)		

본 장에서는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11개 정당의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과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당정책연구소의 조직, 재정 등 기본적인 현황과 함께 연구와 정책개발, 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개최실적, 교육과 연수 활동, 정책홍보, 자료발간 등의 활동과 실적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 1. 정당정책연구소의 조직

## 1) 설립 및 운영 근거

2021년 활동실적을 보고한 11개의 정당정책연구소는 「정당법」에 근거하여 당헌에 중앙당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며,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표 2-2>에 나타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 민생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 5개 정당은 별도의 당규 없이 당헌에 근거하여 정당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별도의 당규가 없더라도 민생당 등 중앙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당규에서 연구소장 혹은 부소장의 권한을 규정한 경우들도 존재한다. 당규로 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정당 가운데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별도의 정책연구소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중앙조직 규정 가운데 하나로 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2-2> 정당정책연구소 관련 각 정당의 당헌 및 당규 규정

	당헌		당규
더불어민주당	[제57조] 정책연구소	(개정) 2022.8.26.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연구소는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의 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③ 연구소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⑤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국민의힘	[제46조] 정책연구소	(개정) 2022.9.05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0.2.17.
	①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 정책연구소 (개정) 2022.9.17.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li> <li>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li> <li>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li> <li>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li> </ul>	제11호 정책연구소 제정 2012.11.09 개정 2019.05.04
국민의당	<p>제84조(정책연구원의 설치와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과 전략의 수립,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p> <p>제85조(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① 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가진다. ② 삭제&lt;2020.10.5.&gt; ③ 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당과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p>	중앙조직규정 제정 2020.10.5.
열린민주당	[제38조] 정책연구소 (제정) 2020.3.8. (전면 개정) 2020.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li> <li>②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되, 연구소에 대하여는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li> <li>③ 연구소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li> <li>④ 이사회 구성과 연구소의 직제,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li> </ul>	제2호 「중앙조직 규정」 제정 2020.11.16.
기본소득당	[제29조] 정책연구소 (개정) 2021.1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li> <li>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li> <li>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li> <li>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li> </ul>	제12호 정책연구소 규정 제정 2020.6.20
시대	[제45조] 정책연구소 (제정) 2020.2.23. (개정) 2022.8.16.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전 환	<p>시민교육 및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p> <p>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⑤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p>	
민 생 당	<p>[제8장] 정책연구원 (제정) 2020.2.24. (개정) 2021.7.21.</p> <p>제98조(위상과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p> <p>제99조(조직과운영)</p> <p>① 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p> <p>② 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정책연구원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정책연구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p> <p>③ 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p> <p>④ 정책연구원의 명칭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p>	
우 리 공 화 당	<p>[제50조] 정책연구소 (개정) 2022.8.29.</p> <p>① 국가발전 및 당의 정강정책 이행과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p> <p>③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겸임하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p> <p>④ 연구소의 구성·운영 및 연구소장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p>	
진 보 당	<p>[제45조] 정책연구소 (제정) 2017.10.15. (개정) 2021.9.05</p> <p>① 당의 정강정책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둔다.</p> <p>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p> <p>③ 연구소의 이사장은 상임 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상임 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p>	제13호 정책연구소 규정 [제정2017.11.1]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친 박 신 당	[제31조] 정책연구원	(제정) 2020.2.25.
	①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2) 조직

정당정책연구소의 조직은 중앙당과 정당정책연구소와의 관계, 그리고 정당정책연구소의 자체 조직역량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했다. 당헌은 중앙당을 포함하여 정당조직 및 기구의 구성, 의사결정과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정당정책연구소의 위상과 중앙당과 정당정책연구소의 관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정당정책연구소와 관련된 당규와 연구소 정관을 통해 연구소의 조직과 내부 운영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① 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전국대의원대회 산하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당 대표 산하 기관으로서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림 2-1> 왼쪽 참고). 민주연구원의 구성 및 운영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6장, 정책연구소(당헌 제5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설치·운영”되며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당헌 제57조 1항). 또한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 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 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당헌 제57조 2항). 또한 연구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당헌 제57조 3항) 등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연구원 원장은 당헌에 근거하여 전국대의원대회(당헌 제15조), 중앙위원회(당헌 제19조), 당무위원회(당헌 제22조),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당헌 제41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의 선거인단(당규 제42조)을 구성하며,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당헌 제28조) 중앙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민주연구원의 실제 운영에서 중앙당과의 독립성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당헌을 통해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연구원장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도 많다. 현 노웅래 원장(2021~현재)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 연구원장 가운데 2년의 임기를 채운 경우는 변재일 원장(2012~2014년), 민병두 원장(2014~2016년), 김민석 원장(2017~2019년)에 불과하다. 이외에 김용익 원장(2016~2017년), 양정철(2019~2020년), 홍익표 원장(2020~2021년)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 김용익 원장의 경우 연구원에서 소위 ‘개헌저지 문건’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동아일보에 단독으로 보도되고 당 안팎에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동아일보』 2017.01.03). 그밖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원장들의 인터뷰는 정당정책연구소의 중앙당에 대한 독립성과 관련하여 정당정책연구소가 직면하는 한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제21대 총선 승리 이후 사임한 양정철 원장은 마지막 출근 당일 기자들과 만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사임한다고 밝혔으며(『매일경제신문』 2020.4.17), 홍익표 원장의 사임 이유 역시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새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관례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체”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볼 때(『한국일보』 2021.6.9.), 연구원장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2-1>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 조직도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https://theminjoo.kr/introduce/location>); 민주연구원 홈페이지(<https://idp.theminjoo.kr/ochart>) .

## ② 여의도연구원

여의도연구원은 국민의힘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1995년 여의도연구소로 설립된 이후 2013년 여의도연구원으로 명칭 변경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정당정책연구소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산하에 위치하며, 사무총장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그림 2-2> 참고). 여의도연구원은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당헌 제46조 1항),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있다(당헌 제46조 2항). 2020년 2월 17일에 제정된 당규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당 대표가 겸임”하며(규정 제5조 2항), 연구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한다(규정 제6조 2항).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 중에서 연구원의 목적과 활동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사로 선임하며, 그 임기를 보장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규정 제6조 3항). 여의도연구원은 연구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규정 제6조 4항). 그러나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원장이 중앙당에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기보다는 “연구원의 운영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규정 제12조 1항). 또한 “연구원의 연차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 감사결과, 기타 당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며(규정 제12조 2항),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사무총장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규정 제15조 4항).



<그림 2-2>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 조직도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party.kr/renewal/about/organization.do>).

여의도연구원의 오랜 역사와 연구원장의 임기보장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연구원장 임기를 채운 원장은 이주영 원장(재임 2013.5~2015.6)과 지상욱 원장(재임 2020.06~2022.06)이 유일하다.<sup>1)</sup> 이주영 원장과 지상욱 원장을 제외한 모든 원장들은 가장 짧게는 4개월(추경호 원장, 2017.3~2017.7)에서 1년 내외의 짧은 기간만 근무하는 등 실제로는 원장의 임기가 짧으며 원장의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최근의 신문기사 등을 확인해보면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병준 교수가 부임한 직후 당 혁신을 위해 김대식 원장(재임 2017.07 ~ 2018.07)을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곧바로 김원장은 사임하였다. 김세연 前원장(재임 2019.03 ~ 2019.12) 역시 당내에서 교체설이 제기된 후 석 달여가 지나서 원장직을 사임하였다. 물론 원장의 잦은 교체가 중앙당에 대한 종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sup>2)</sup>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당의

1) 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ydi.or.kr/history?id=0>

2)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당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했던 시기 연구소장의 임기가 상대적으로 길었다. 예컨대, 윤영오 소장(1996.2~1998.5), 유승민 소장(2000.2~2003.9)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 개발 및 연구 활동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연구 활동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 ③ 정의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는 정의당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당헌 제46조 1항) 설립되었으며, “중앙당에 별도 법인”(당헌 제46조 2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당헌 제46조 3항).

정의정책연구소는 다른 정당들의 정당정책연구소와 비교해 중앙당과의 관계가 상당히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다른 정당들의 경우 당 대회 산하에 정당정책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정의정책연구소는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다(<그림 2-3> 참고). 또한 정의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당규 제11호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정의정책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당규 제11호 제5조). 이는 당대표가 당연직으로 연구원의 이사장을 겸임하고 이사장(당 대표)가 연구원장을 지명하는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과는 다르게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당 대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셋째, 정의정책연구소의 소장과 부소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대표가 승인”하며(당규 제11호 제11조 2항), 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당규 제11호 제11조 3항). 실제로도 2015년 미래정치센터에 현 손호철 이사장이 취임했으며, 정의정책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2017년과 2019년 연임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또한 김정진 소장(2016.8.25.~2019.11.6.)과 김병권 소장(2019.11.6.~ 현재) 모두 임기를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소의 연구와 운영의 연속성이 실제로도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정책연구소의 소장으로 하여금 “당 대회의 개최 전까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전국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당헌 제18조 2항), 정당정책연구소가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의정책연구소는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2인)으로 구성되는 임원의 자격을 “우리 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당규 제

11호 제8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정당정책연구소에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규정이다.

<그림 2-3> 정의당 조직도



출처: 정의당 홈페이지(<https://www.justice21.org/newhome/about/info05.html>).

#### ④ 국민미래연구원

국민미래연구원은 (구) 국민의당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과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 법인”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당헌 제84조 1항).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가진다(당헌 제85조 1항). 국민의당은 2020년 1월 29일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창당했으나, 2022년 5월 국민의힘

과합당되었다. 지난 5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흡수합당이 공고되면서 실질적, 형식적으로 합당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 따라서 위 조직의 규정을 상세히 분석하지 않도록 한다.

#### ⑤ 열린미래연구원

열린정책연구원은 열린민주당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당헌 제38조 1항). 열린정책연구원은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며”(당헌 제38조 2항), 연구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당헌 제38조 3항). 이외에 열린정책연구원 원장은 당헌에 따라 당연직 대의원(제12조 3항)에 포함되며, 당규 제2호 중앙조직규정에 의해 정책위원회(제24조 2항)와 사무직당직자 인사위원회(제37조 2항)를 구성하며, 최고위원회(제15조 2항)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 당헌 및 당규를 통해 중앙당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 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2년 2월 3일자로 흡수합당이 공고된 바 있다.

#### ⑥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기본소득당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당헌 제29조 1항)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당헌 제29조 2항).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은 <당규 제12호 정책연구소 규정>에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정의정책연구소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가 중앙당에서 당원총회 산하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며(<그림 2-4> 참고), 당대표가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결정”(당규 제12호 제5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장 및 부소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승인”하며(당규 제12호 제11조 2항), 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당규 제12호 제11조 3항)하는 등 정당정책연구소가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다.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와 유사하게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2인)으로 구성되는 임원의 자격에 있어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 당의 당원에 한정”하고 있다(당규 제12호 제8조). 현재, 2020년 6월 5일 제2대 지도부가 구성되어 신지혜 당 대표가 상임대표로서 기본소득당을 이끌고 있으며, 2020년 10월 27일 설립된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이사장도 겸하고 있다.

<그림 2-4> 기본소득당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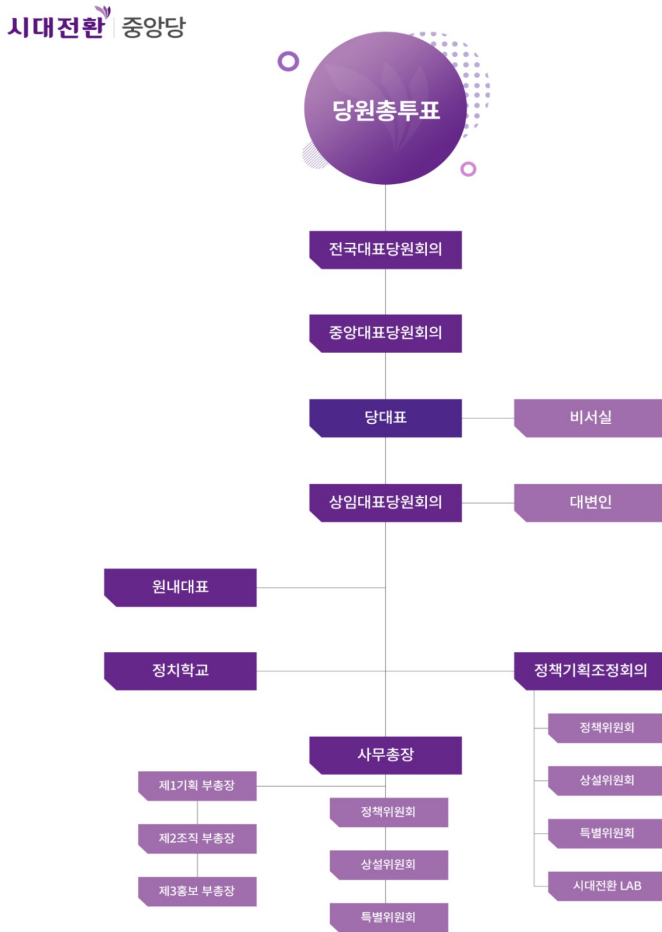


출처: 기본소득당 홈페이지(<https://www.basicincomeparty.kr/about/structure>)

### ⑦ 시대전환 LAB

시대전환LAB은 시대전환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시민교육 및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당헌 제45조 1항). 시대전환LAB은 다른 정당정책연구소들과는 다르게 정책기획조정위 산하의 기구로서 위치하고 있으며(<그림 2-5> 참고),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당헌 제45조 2항) 점에서 연구원장과 연구원의 운영에 있어 중앙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2-5> 시대전환의 조직도



출처: 시대전환 홈페이지(<https://www.transition.kr/home/sub02.php>)

그러나 연구원장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당헌 제45조 3항), 시대전환LAB 소장과 부소장은 중앙대표당원회의를 구성하며(당헌 제16조 2항), 소장은 정책위원회의 ‘정책기획조정회의’에 참석(당헌 제23조 6항)하도록 하는 등 중앙당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당에 대해 독립성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시대전환LAB 홈페이지는 개설되지 않았으며, 시대전환 홈페이지(<https://www.transition.kr/>)에서도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정관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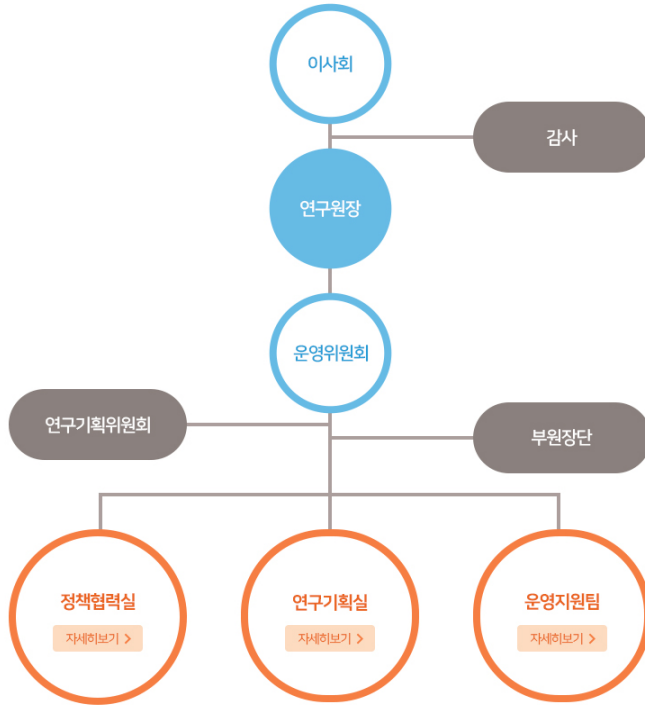
## ⑧ 혁신과미래연구원

‘혁신과미래연구원’은 민생당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운영된다(당헌 제98조). 2020년 2월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합당되어 민생당이 된 이후에도 민주평화당의 정당정책연구소였던 민주평화연구원도 함께 운영되었으나 통합 이후 민주평화연구원의 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혁신과미래연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당헌에서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당헌 제99조 1항). 또한, 당규 중 ‘중앙조직 규정’을 살펴보면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당무조정회의에 참석하며(81조 3항),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82조 1항) 연구원의 위상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책연구원 내 인사문제에 대하여 정책연구원 인사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것을 명시하여(82조 6항) 인사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민생당 홈페이지(<http://www.minsaengdang.kr/>)에서 정당의 조직도가 나타나지 않아 혁신과미래연구원의 위상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웠다. 다만 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담당하고 정책연구위원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당헌 제99조 2항), 연구원장의 구체적인 임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중앙당과의 관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그림 2-6> 참고). 4대 현 원장인 홍승태 원장과 3대 박상병 원장을 제외하고 제1대 홍경준 원장(2018.10~2020.4.)과 제2대 이수봉 원장(2020.4.~2020.6) 모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연구활동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림 2-6> ‘혁신과미래연구원’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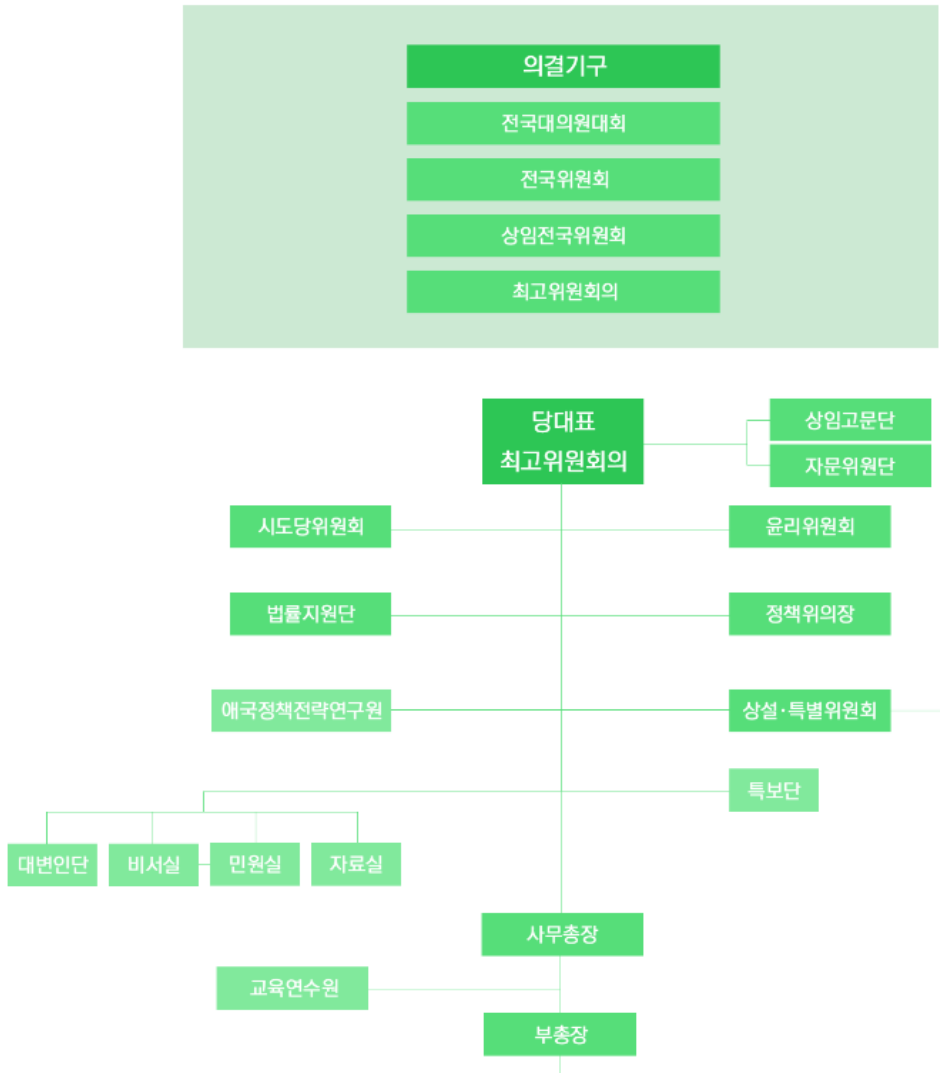
출처: 혁신과미래연구원 홈페이지(<http://iif.or.kr/html/15>)

### ⑨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우리공화당의 정당정책연구원으로서 “국가발전 및 당의 정강정책 이행과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 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당헌 제50조 1항). 우리공화당 정당조직도에서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최고위원회의 산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림 2-7> 참고),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겸임하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당헌 제50조 3항). 더욱이 최고위원회 등 중앙당의 정책결정과정에 정당정책연구원장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현재 조원진 당대표가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2018년 창립 이후 이주천 원장이 재임 중이다.



<그림 2-7> 우리공화당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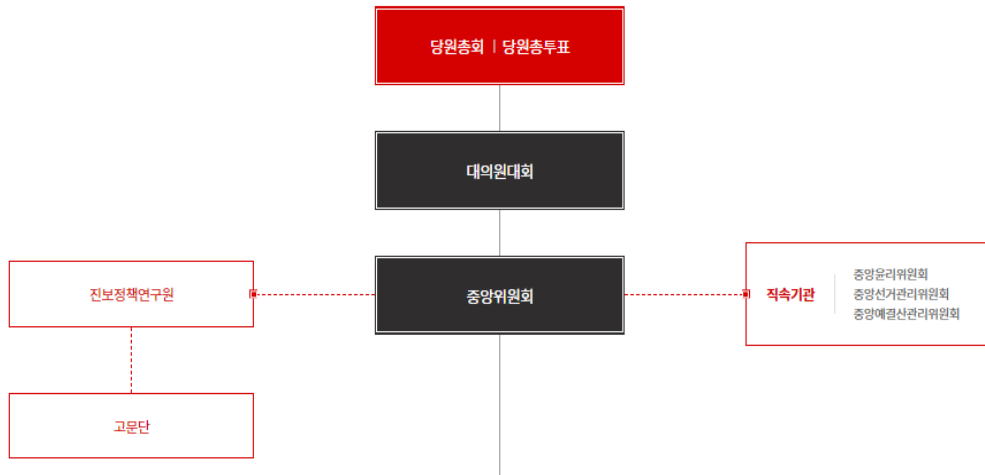
출처: 우리공화당 홈페이지([http://www.orp.kr/main/sub\\_menu/sub\\_01\\_org\\_chart6.php](http://www.orp.kr/main/sub_menu/sub_01_org_chart6.php)).

⑩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은 진보당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정강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당헌 제45조 1항). 연구소의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상임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했

으며(당헌 제45조 3항),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당규 제13호 정책연구소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의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담당하며(당규 제13호, 제5조), 연구원장 및 부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당규 제13호 제6조 2항),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당규 제13호 제6조 3항). 진보정책연구원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2인)로 구성되며(당규 제13호 제4조),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 이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당규 제13호 제9조)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진보정책연구원 원장이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원의 운영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승인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림 2-8> 진보당 조직도



출처: 진보당 홈페이지(<https://jinboparty.com/pages/?p=12>)

### 3) 연구원

정당정책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인 정책개발 및 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2021년 정당정책연구소의 정기보고를 제출한 정당정책연구소 전체 연구 인력의 수는 연구원 97명과 직원 74명을 합하여 171명이었다. 연구인력 중에서는 박사급 29명(30%), 석사급 33명(34%), 기타 35명(36%)로 나타났으며 직원의 경우 총 74명으로 조사되었다(<표 3> 참고). 한편, 연구인력 이외에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정책연구소는 민주연구원(50명), 여의도연구원(1명), 정의정책연구소(2명), 국민미래연구원(12명), 열린정책연구소(1명), 기본소득 정책연구소(1명), 혁신과 미래연구원(5명), 미래한국사회연구원(1명) 등으로 74명이었다. 이 가운데정의 정책연구소(1명)와 기본소득 정책연구소(1명), 미래한국사회연구원(1명)의 외부 파견을 제외한 73명은 자체고용의 형태였다.

인력구성과 관련하여 전체인력은 2020년 연구원 119명 직원 57명을 합하여 총 17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연구원이 22명 감소하고 직원은 17명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 보고에서 연구인력 중 박사급 39명(32.8%), 석사급 28명(23.5%)이었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 박사급 인력은 오히려 10명이나 감소하였다. 지난 2019년 조사에서도 박사급 연구인력이 15명이나 감소하였으므로 2년간 박사급 연구인력은 25명이 감소되었다. 석사급 연구인력의 경우 2019년 60명, 2020년 28명 2021년 33명으로 변화하였다. 작년도 조사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9년의 절반수준에 머물러있다. 연구인력이 줄어든 대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증가한 현상은 주시할만한 현상이다. 최근 정책연구소의 전체 연구 인력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박사급 연구원의 수도 함께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정책연구소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온 것으로 평가되어온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이며 이는 정책연구소의 전문성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부정적 변화라고 하겠다.

또한 <표 2-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책연구소별로 연구 인력의 규모와 구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민주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13명(70%), 석사급 연구원 6명(30%)으로 총 20명의 연구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2019년 73명, 2020년 35명을 고용했던 것과 비교해 연구 인력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6명(12%), 석사급 연구원 17명(33%), 기타 29명(52%) 등으로 전체 52명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지난 번 조사에서는 박사급 연구원 8명(16.0%), 석사급 연구원 16명(34.0%), 기타 24명(50.0%) 등 총 50명으로 신고한 바 있다. 박사급인력은 2019년 6명이던 것이 2020년 8명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6명으로 감소했다. 석사급연구원은 2019년 20명, 2020년 16명, 2021년 17명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박사급 연구원 4명(31%), 석사급 연구원 6명(46%), 기타 3명(23%) 등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번 조사와 비교하여 박사급과 석사급 인력이 각각 1명씩 증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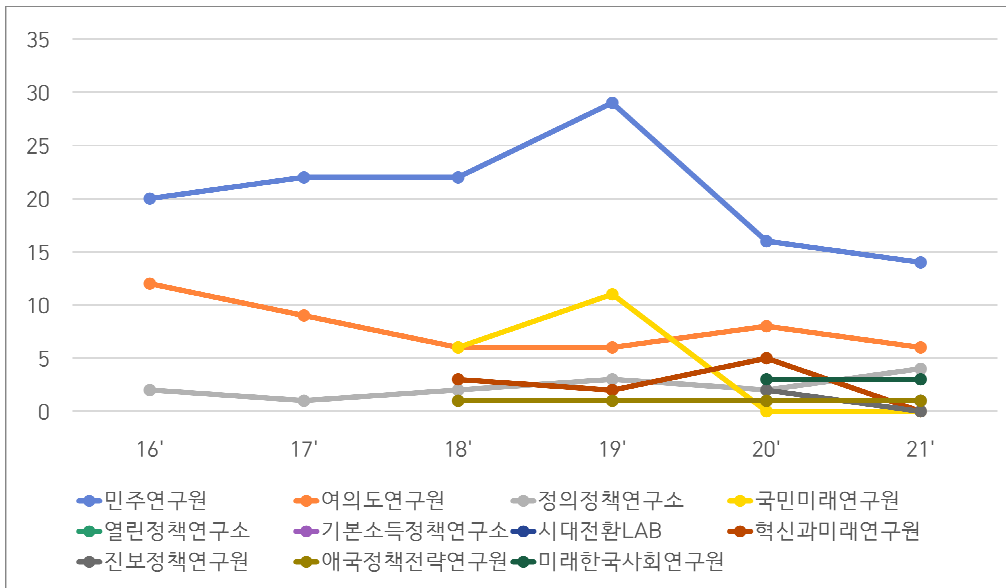
<표 2-3> 2021년 정당정책연구소 연구인력 현황

	연구원				직원		
	박사	석사	기타	합계	자체 고용	외부 파견	합계
민주연구원	14 (70%)	6 (30%)	0	20	50 (100%)	-	50
여의도연구원	6 (12%)	17 (33%)	29 (56%)	52	1 (100%)	-	1
정의정책연구소	4 (31%)	6 (46%)	3 (23%)	13	1 (50%)	1 (50%)	2
국민미래연구원	-	-	-	-	12 (100%)	-	12
열린정책연구소	-	-	-	-	1 (100%)	-	1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	1 (100%)	1	1 (100%)	-	1
시대전환LAB	1 (100%)	-	-	1	-	1 (100%)	1
혁신과미래연구원	-	3 (100%)	-	3	5 (100%)	-	5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 (100%)	-	-	1	-	-	-
진보정책연구원	-	1 (100%)	1	2	-	-	-
미래한국사회연구원	3 (75%)	-	1 (25%)	4	-	1 (100%)	1
합계	29 (30%)	33 (34%)	35 (36%)	97	71 (96%)	3 (4%)	74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1년 정기보고

이외에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작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박사급 연구인력 1명으로 고용하고 있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은 석사급 인력 3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작년도 조사에서 혁신과미래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5명(45.5%), 석사급 연구원 2명(18.2%), 기타 4명(36.4%) 등으로 11명을 고용한다고 보고한 것에 비하면 조직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지난 번과 동일하게 박사급 연구원 1명을 신고하였다. 진보정책연구원은 석사급 연구인력 1명과 기타 연구원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작년도 조사에서 박사급 연구원 2명(40.0%), 석사급 연구원 2명(40.0%), 기타 1명(20%) 등 5명을 신고한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숫자이다.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은 지난 조사와 동일하게 박사급 연구원 3명(75.0%), 기타 1명(25.0%)으로 4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9> 정당정책연구소 박사급 연구인력 수 변화(2016-2021)



다음으로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 및 연구역량과 관련하여 박사급 연구인력의 수는 중요하다. <그림 2-1>과 같이 지난 5년간 정책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인력의 수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왔다. 정기보고에서 가장 많은 박사급 연구원을 보유한 민주연구원의 경우, 2016년 20명, 2017년 22명, 2018년 22명, 2019년 29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20년 16명으로, 2021년은 14명으로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반면 여의도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의 규모는

2015년 18명에서 2016년 12명, 2017년 9명, 2018년 6명, 2019년 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0년 8명으로 증가한 후 2021년 다시 6명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정의당의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은 1~2명을 유지해오다 지난 조사에서 4명으로 증가하였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의 수가 2018년 3명, 2019년 2명, 2020년 5명으로 증가하다 작년도 조사에서는 0명으로 조사되었다. 애국미래연구원은 2018년 이후 박사급 연구원 1명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원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의 수가 3명을 유지하였다.

<표 2-4> 2021년 정당정책연구소 연구원의 경력별 분류

	경력별			
	7년 이상	2년이상 ~7년미만	2년미만	합계
민주연구원	18 (90%)	1 (5%)	1 (5%)	20
여의도연구원	38 (73%)	10 (19%)	4 (8%)	52
정의정책연구소	3 (23%)	7 (54%)	3 (23%)	13
국민미래연구원	-	-	-	0
열린정책연구소	-	-	-	0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	1 (100%)	1
시대전환LAB	1 (100%)	-	-	1
혁신과미래연구원	-	3 (100%)	-	3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 (100%)	-	-	1
진보정책연구원	-	1 (50%)	1 (50%)	2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4 (100%)	-	4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1년 정기보고

이처럼 전반적으로 정책연구소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의 총합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근 몇 년간 소규모의 정책연구소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박사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전체적으로 박사급 연구원의 수가 증가되어왔던 추세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정책연구소의 양적 증가가 박사급 연구원의 증가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박사급 연구원 수의 급격한 감소가 정당들의 정책개발 및 연구역량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 4) 재정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의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로 배분하기 시작한 이후 정책연구소는 수입의 대부분을 소속 정당으로부터 배분받는 정당보조금으로 충당해왔다. 정책연구소의 예산이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소속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정책연구소의 재정에도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2-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21년 정기보고에서 각 정책연구소의 재정 수입은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정책연구소의 수입 중 정당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통적으로 상당히 높았다.

21대 총선 승리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연구원이 88억 2천여만원의 정당지원금을 배분받았으며, 여의도연구원 63억 4천여만 원, 정의정책연구소 9억 2천여만 원 등을 지급받았다. 이외에 국민미래연구원 4억 1천여만 원, 열린정책연구소 3억 9천여만 원, 혁신과미래연구원 2억 8천여만 원, 진보정책연구원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기타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약 5천만 원, 시대전환LAB 약 8백만 원의 지원금을 소속정당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애국정책전략연구원(96%)은 정당보조금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민주연구원(80%), 정의정책연구소(83%), 국민미래연구원(76%)도 정당지원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혁신과미래연구원은 전년 이월금의 비중이 92%로 매우 높았다.

2021년 정기보고에서 각 정책연구소의 지출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많이 지출한 정책연구소는 여의도연구원로 73억 4천여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민주연구원이 69억 4천여만원을 지출하였다. 그 외에는 정의정책연구소(9억 1천여만 원), 혁신과미래연구원(8억 3천여만 원), 국민미래연구원(4억 8천여만 원), 열린정책연구소(1억 7천여만 원), 진보정책연구원(1억 3천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약 5천만 원을,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약 3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시대전환LAB은 약 3백만 원을 지

출하였다.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은 지출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정책연구소 수입 대비 지출비율은 진보정책연구원(96%), 애국정책전략연구원(94%), 국민미래연구원(90%), 기본소득정책연구소(87%), 정의정책연구소(8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의도연구원(75%), 민주연구원(63%)을 기록하였다. 열린정책연구소(32%), 시대전환LAB(28%), 혁신과미래연구원(22%)는 그 비중이 상당히 낮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5> 2021년 정당정책연구소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수입				지출	잔액
	정당 지원금	기타 수입	전년 이월금	계		
민주연구원	8,817 (80%)	2 (0%)	2,267 (20%)	11,087 (100%)	6,943 (63%)	4,144 (37%)
여의도연구원	6,336 (65%)	192 (2%)	3,210 (33%)	9,739 (100%)	7,341 (75%)	2,397 (25%)
정의정책연구 소	924 (83%)	0.05 (0%)	190 (17%)	1,114 (100%)	907 (81%)	206 (19%)
국민미래연구 원	409 (76%)	0.07 (0%)	126 (24%)	535 (100%)	482 (90%)	53 (10%)
열린정책연구 소	388 (73%)	8 (2%)	138 (26%)	535 (100%)	173 (32%)	361 (68%)
기본소득정책 연구소	20 (63%)	5 (16%)	6 (21%)	33 (100%)	28 (87%)	4 (13%)
시대전환LAB	8 (64%)	0.005 (0%)	4 (36%)	13 (100%)	3 (28%)	9 (72%)
혁신과미래연 구원	277 (8%)	2 (0%)	3,397 (92%)	3,677 (100%)	825 (22%)	2,852 (78%)
진보정책연구 원	116 (85%)	14 (10%)	6 (5%)	136 (100%)	130 (96%)	5 (4%)
애국정책전략 연구원	54 (96%)	0.08 (0%)	2 (4%)	56 (100%)	53 (94%)	3 (6%)
미래한국사회 연구원	- -	0.004 (0%)	5 (100%)	5 (100%)	- -	5 (100%)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1년 정기보고



각 정책연구소들이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과 활동경비는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표 2-6> 참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총 462억 8천 8백여만원이다. 이 중 2021년 정당연구소에 지급된 보조금 총액은 173억 5천 3백여만원이다. 「정치자금법」 제28조 2항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배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선거보조금을 제외한 경상보조금을 토대로 각 정당은 정책연구소에 대한 지원 비율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정당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당보조금 대비하여 정책연구소에 지원금을 많이 지급한 정당은 기본소득당(65%), 더불어민주당(42%), 국민의힘(34%)이었고 그 밖에 정당은 모두 법정하한선인 30%를 지급하여 정의당(30%), 국민의당(30%), 열린민주당(30%), 시대전환(30%), 민생당(30%)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21년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진보당에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표 2-6> 2021년 정당별 보조금과 정당정책연구소 지원금(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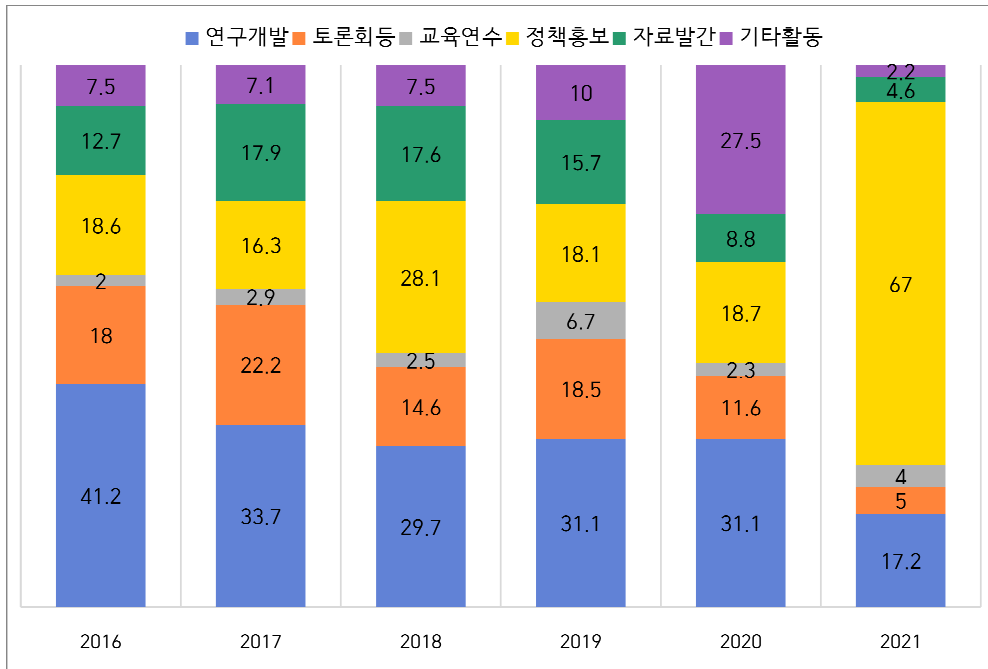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	국민의 당	열린 민주당	기본 소득당	시대 전환	민생당
정당별 국고보조금		21,059	18,500	3,074	1,363	1,294	32	27	924
정책 연구소 지원금	총액	8,817	6,336	924	409	388	20	8	277
	총액 대비 비율	42%	34%	30%	30%	30%	65%	30%	3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01-2021년 연도별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내역.”

## 2. 정당정책연구소 활동실적

2021년 활동실적을 보고한 정책연구소를 대상으로 전체 활동형태별 실적을 연구·개발, 토론회 등 개최실적, 교육·연수 활동, 정책홍보, 간행물 등 자료발간,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2021년 활동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정책홍보(67%), 이었으며 다음으로 연구·개발(17%), 토론회 등(5%), 자료발간(5%), 교육·연수(4%) 등의 순서였다.

<그림 2-10>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실적 변화(2016~2021)<sup>3)</sup>



한편, <그림 2-10>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실적의 비중은 각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형태는 연구·개발 활동이었지만 작년에는 홍보활동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연구·개발의 비중은 2016년 41.2%, 2017년 33.7%, 2018년 29.7%, 2019년과 2020년 31.1%를 기록하였다가 작년에는 17.2%로 감소하였다. 반면, 정책홍보 활동은 2016년 18.6%, 2017년 16.3%, 2018년 28.1%, 2019년 18.1%, 2020년 18.7%를 기록하다 작년에는 67.0%를

3) 본문 중 <그림 2-10>에서 <그림 2-15>의 경우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부록 1>에서 표의 형태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였다.

기록하였다. 자료발간 실적은 비중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활동형태였다. 2016년 12.7%, 2017년 17.9%, 2018년 17.6%, 2019년 15.7%을 보이다 2020년 8.8%로 작년에는 4.6%로 감소하였다. 토론회 등 개최실적은 2016년 18.0%, 2017년 22.2%로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2018년 14.6%, 2019년 18.5%, 2020년 11.6%, 2021년 5.0%로 다소 변화가 나타났다. 교육·연수 활동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실적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1) 연구·개발 활동실적

2021년 정책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실적을 수행주체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한다(<표 2-7> 참고). 2021년 11개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전체 연구는 607건이며 여의도연구원 284건, 정의정책연구원 169건, 민주연구원 101건, 진보정책연구원 26건, 혁신과미래연구원 12건, 기본소득정책연구소 9건, 열린정책연구소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미래연구원, 시대전환LAB, 애국정책전략연구원,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은 연구개발 활동이 전무하였다.

의 연구·개발 활동실적 가운데 정책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실적은 506건(83%), 외부용역 47건(8%), 자체와 외부의 공동실적 54건(7%)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점은 공동연구의 비중이 2020년 2%에서 2021년 7%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개발 실적은 정책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결과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연구소별로 연구·개발 활동 실적 주체를 분석해보자. 민주연구원은 전체 101건의 연구·개발 활동 중 자체연구 74건(73%), 외부용역 2건(2%), 공동 25건(25%)로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원은 전체 283건의 연구·개발 활동 중 자체연구 242건(85%), 외부 용역 27건(10%), 자체·외부(공동) 15건(5%)이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전체 169건의 연구·개발 활동 가운데 자체 연구 156건(92%), 외부용역 12건(7%), 자체·외부(공동) 1건(1%)으로 자체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정책연구소의 전체 활동실적 가운데 연구·개발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정책연구소 자체 연구·개발 활동의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하겠다. 진보정책연구원은 자체 13건(50%), 공동 13건(50%)로 조사되었다. 열린정책연구소의 경우 6건의 연구·개발 활동이 모두 외부용역으로 이루어졌고 기본소득정책연구소(9건)·혁신과미래연구원(12건)·진보정책연구원(13건) 연구·개발 활동이 모두 자체적으로 집행한 성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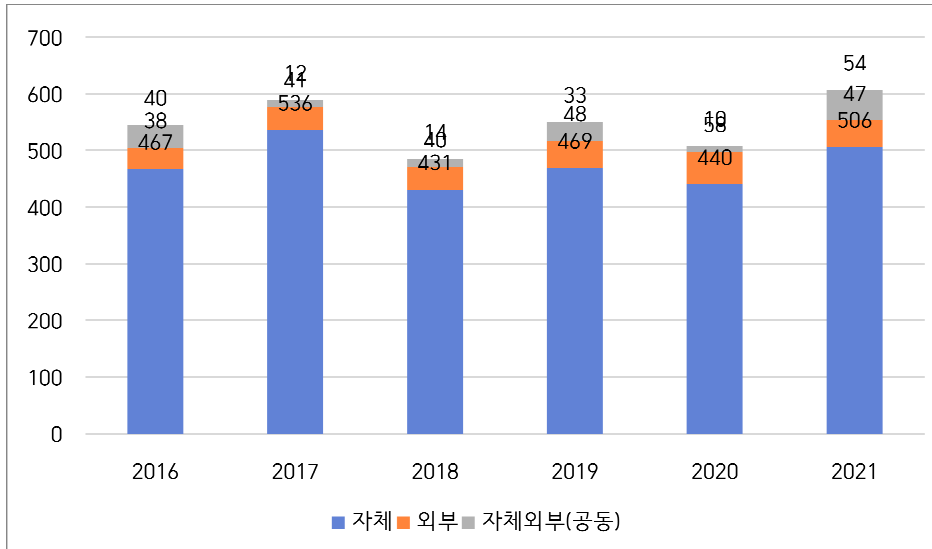
<표 2-7> 2021년 정당정책연구소 연구·개발 활동실적 주체

	자체	외부	자체외부 (공동)	계
민주연구원	74 (73%)	2 (2%)	25 (25%)	101
여의도연구원	242 (85%)	27 (10%)	15 (5%)	284
정의정책연구소	156 (92%)	12 (7%)	1 (1%)	169
국민미래연구원	-	-	-	0
열린정책연구소	-	6 (100%)	-	6
기본소득정책연구소	9 (100%)	-	-	9
시대전환LAB	-	-	-	0
혁신과미래연구원	12 (100%)	-	-	12
진보정책연구원	13 (50%)	-	13 (50%)	26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	-	0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	-	0
합계	506 (83%)	47 (8%)	54 (9%)	607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1년 정기보고

<그림 2-1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21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을 최근 5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과 비교해보면 연구·개발 활동건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연구·개발 활동 주체의 측면에서 자체 연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외부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개발 활동의 수가 증가하였다. 한정된 연구원 수로 운영되는 정책연구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연구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른 연구소 및 외부 전문가 집단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성과 공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외부용역의 수와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는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로 이해된다.

<그림 2-11> 2016-2021년 연구개발 실적 및 주체의 변화



## 2) 토론회 개최 등 활동 실적

2021년 정책연구소의 활동 실적 중 토론회 개최 등 개최활동은 178건(5%)이었다(<표 2-8> 참고). 정책연구소가 정당이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과 현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 당원, 일반국민 등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중요하다. 2021년 11개의 정책연구소 중 토론회 실적이 있는 연구소는 9곳이었다. 이들이 개최한 178건의 토론회 개최 활동 실적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활동은 간담회 105건(59%)였으며 토론회 36건(20%), 세미나 12건(7%), 여론조사 11건(6%), 포럼 7건(4%), 기타 7건(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론회 등 개최 활동실적에서 정책연구소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민주연구원이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의정책연구소 44건, 여의도연구원 32건, 국민미래연구원 21건을 수행했다. 그 밖에 혁신과미래연구원 13건, 진보정책연구소 11건, 기본소득정책연구소 3건, 시대전환LAB 1건, 열린정책연구소 1건을 수행하였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과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은 수행실적이 전무했다.

<표 2-8> 2021년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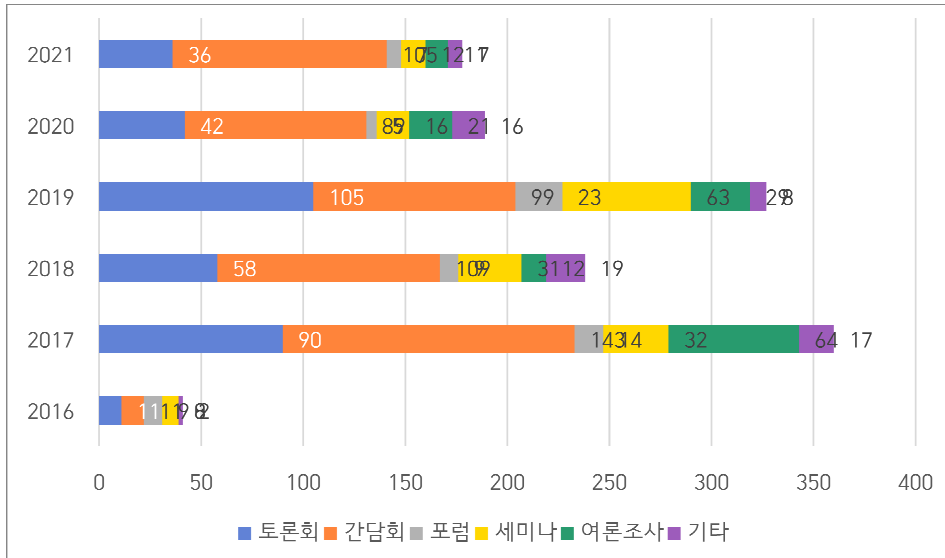
연구원	토론회	간담회	포럼	세미나	여론조사	기타	합계
민주연구원	22 (42%)	25 (48%)	-	1 (2%)	-	4 (8%)	52
여의도연구원	1 (3%)	22 (69%)	1 (3%)	8 (25%)	-	-	32
정의정책연구소	10 (23%)	26 (59%)	6 (14%)	2 (5%)	-	-	44
국민미래연구원	-	18 (86%)	-	-	3 (14%)	-	21
열린정책연구소	1 (100%)	-	-	-	-	-	1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	-	-	-	3 (100%)	3
시대전환LAB	-	-	-	1 (100%)	-	-	1
혁신과미래연구원	-	7 (54%)	-	-	6 (46%)	-	13
진보정책연구원	2 (18%)	7 (64%)	-	-	2 (18%)	-	11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	-	-	-	-	0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	-	-	-	-	0
합계	36 (20%)	105 (59%)	7 (4%)	12 (7%)	11 (6%)	7 (4%)	178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1년 정기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여준 민주연구원의 경우 전체 52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활동실적은 간담회 25건(42%)이었고, 토론회 22건(42%), 기타 4건(8%), 세미나 1건(2%) 순으로 개최되었다.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전체 44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활동실적은 간담회 26건(59%)이었고, 토론회 10건(23%), 포럼 6건(14%), 세미나 2건(5%) 순으로 개최되었다. 여의도연구소의 경우 전체 32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활동실적은 간담회 22건(69%)이었고, 세미나 8건(25%) 토론회 1건(3%), 포럼 1건(3%) 순으로 개최되었다.

<그림 2-12> 2016~2021년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한편, 2018년 이후 정책연구소들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은 변화의 폭이 크기는 하지만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2-12> 참고). 2016년 41건으로 가장 적은 개최횟수를 보인 것을 제외 하면 2017년 360건, 2018년 238건, 2019년 327건, 2020년 189건, 2021년 178건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토론회 개최의 경우 2019년 105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42건, 2021년 36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간담회의 경우는 2017년 143건에서 2020년 89건까지 줄었다가 2021년에는 105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포럼이나 세미나의 경우도 2019년 각각 23건, 63건에서 2021년에는 7건, 12건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여론조사 활동실적의 경우 2015년 169건에서 2017년 64건, 2019년 29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2020년 21건, 2021년에는 11건을 기록하였다.

### 3) 교육·연수 활동실적

정책연구소는 정당의 정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뿐만 아니라 당원과 당직자, 지지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2021년 전체 11개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교육·연수 활동은 총 143건(4%)으로 정책연구소의 활동 가운데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기보고에는 정책연구소의 교육·연수 활동의 대상자를 당직자, 당원, 청년/대학생, 시민,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1년의 경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활동이 54건(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당직자 42건(29%), 청년 및 대학생 27건(19%), 당원 17건(12%), 시민 2건(5.4%), 기타 9건(24.3%)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2-9> 참고).

정책연구소별로 2020년 교육·연수 활동 실적을 구분해보면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전체 105건의 교육·연수 활동실적을 수행하여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시민을 대상으로 45건 (43%), 청년·대학생 대상이 20건(19%)로 나타났으며 당직자를 대상으로 40건(38%)이 이루어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연 아카데미 정책 기자단 모집 운영 교육, 지방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굿소사 이어티 정책 리더 교육, 여연아카데미 대학생 인턴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민주연구원은 총5건의 교육·연수 활동 가운데 기타 3건(60.0%), 당원 2건(40%)로 가장 나타났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8건을 수행하였고 당원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옴니버스 강좌였다. 국민미래연구원과 열린정책연구소는 7건의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모두 청년·대학생 혹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시대전환LAB은 3건을 수행하였고 모두 플랫폼 정당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한 ‘퍼실리테이터 교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적이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와 진보정책연구소의 경우 각각 2건의 전체 교육·연수 활동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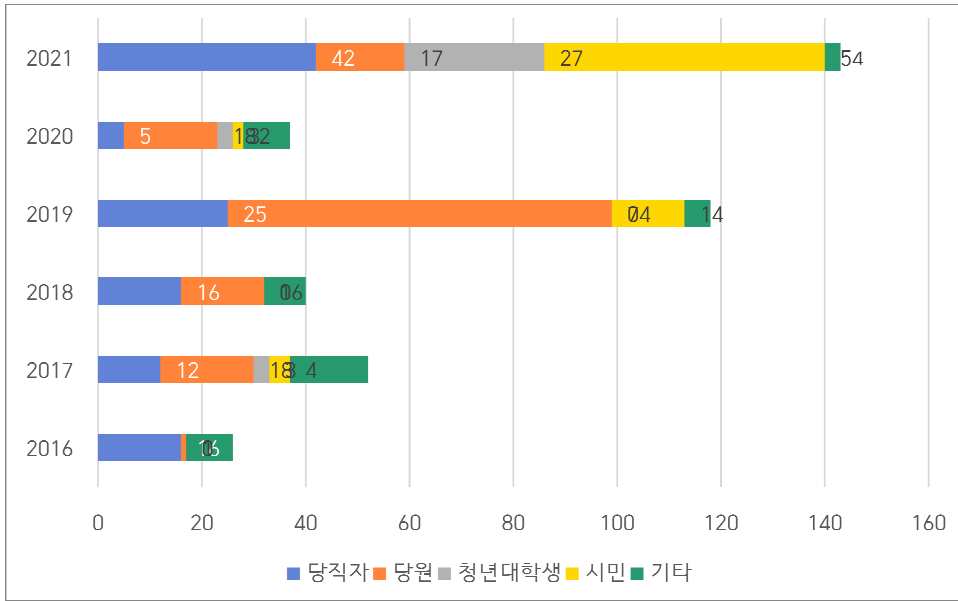


<표 2-9> 2021년 대상별 교육·연수 활동실적

	당직자	당원	청년 대학생	시민	기타	합계
민주연구원	-	2 (40%)	-	-	3 (60%)	5
여의도연구원	40 (38%)	-	20 (19%)	45 (43%)	-	105
정의정책연구소	1 (33%)	2 (67%)	-	-	-	3
국민미래연구원	-	-	-	7 (100%)	-	7
열린정책연구소	-	-	7 (100%)	-	-	7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	-	2 (100%)	-	2
시대전환LAB	-	3 (100%)	-	-	-	3
혁신과미래연구원	1 (100%)	-	-	-	-	1
진보정책연구원	-	2 (100%)	-	-	-	2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8 (100%)	-	-	-	8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	-	-	-	0
합계	42 (29%)	17 (12%)	27 (19%)	54 (38%)	3 (2%)	143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1년 정기보고

<그림 2-13> 2016-2021년 대상별 교육·연수 활동실적



한편, <그림 2-13>에서 2021년 정책연구소의 교육·연수 활동 실적을 지난 5년간 추이와 비교해보면 당직자나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활동의 비중이 높았으나 작년에는 청년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직자 대상 교육은 2019년 25건, 2020년 5건에서 작년에는 42건으로 증가하였다. 당원대상 교육·연수 활동은 2016년 1건, 2017년 18건, 2018년 16건에서 2019년 74건까지 증가했다가 다시금 2020년 18건, 2021년에는 17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활동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크게 증가하였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활동은 2017년과 2020년 3건을 제외하면 그 동안은 실적이 전무하였으나 작년도에는 2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활동도 2017년 4건, 2019년 14건, 2020년 2건에서 2021년은 5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교육활동이 기존의 당직자 및 당원 중심에서 당원이 아닌 일반적 지지층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정책홍보 활동실적

정책연구소의 정책홍보 활동은 연구 및 개발 성과를 당원과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21년 전체 11개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정책홍보 활동은 2366건(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정기보고에서는 정책연구소에 따라 정책홍보 건수와 홍보방법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났다(<표 2-10> 참고).

<표 2-10> 2021년 정당정책연구소별 정책홍보 활동실적

	사이트 게재 (SNS)	사이트 게재 (보도자료)	보도 자료	책자 배포	기타	합계
민주연구원	7 (78%)	-	-	-	2 (22%)	9
여의도연구원	2,263 (100%)	-	1 (0%)	-	-	2,264
정의정책연구소	23 (58%)	17 (43%)	-	-	-	40
국민미래연구원	-	2 (100%)	-	-	-	2
열린정책연구소	-	-	-	-	-	0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	-	-	-	0
시대전환LAB	1 (50%)	1 (50%)	-	-	-	2
혁신과미래연구원	-	23 (100%)	-	-	-	23
진보정책연구원	-	26 (100%)	-	-	-	26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	-	-	-	0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	-	-	-	0
합계	2,296 (97%)	69 (3%)	1 (0%)		2 (0%)	2,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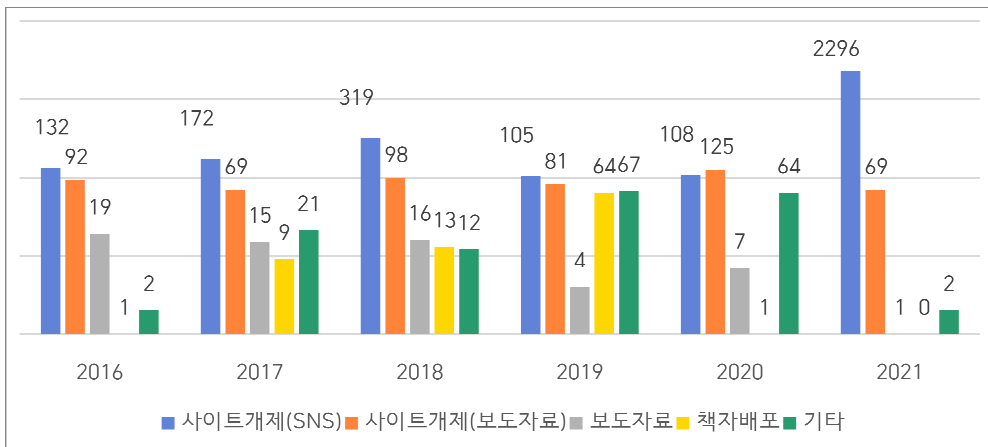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1년 정기보고

정책홍보 건수에서 여의도연구원이 2366건으로 가장 많은 활동실적을 보여주

었으며 정의정책연구소 40건, 진보정책연구소 26건, 혁신과미래연구원 23건, 민주연구원9건의 정책홍보가 이루어졌다. 국민미래연구원과 시대전환LAB은 2건을 수행하였다. 한편, 열린정책연구소,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애국정책전략연구원,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의 정책홍보 활동실적은 전무했다.

가장 많은 활동건수를 기록한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정책기사 1,046건 및 게시물 863건을 여연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생 및 청년 서포터 혹은 인턴 프로그램 참여자이 만든 정책 카드뉴스 및 동영상도 66건을 기록하였다.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40건 중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평을 담은 ‘정책논평’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었다. 진보정책연구원은 총 26건의 정책홍보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23건은 주요 의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담은 ‘정책과 논점’을 발행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SNS에 게재하는 것이었다. 나머지 3건은 정책보고서로 한반도 평화, 기후 문제 등을 다루었다. 민주연구원의 경우 9건 중 7건이 유튜브를 활용한 토론회 및 발표회 영상 공유의 성격이었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은 23건 모두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와 SNS에 게재하는 것이었다.

<그림 2-14> 2016~2021년 정책홍보 방법 비교



한편, <그림 2-14>에서 2021년 정책연구소의 정책홍보 활동 실적을 지난 5년간 추이와 비교해보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SNS와 보도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 이미 대세로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NS를 활용한 정책홍보는 전년도에 비해 20배 이상 급증하였다. 반면, 책자배포와 보도자료 활용 등 전통적인 정책홍보 방식은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 5)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

2021년 전체 11개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자료발간 활동실적은 161건(5%)였다. <표 2-1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체 161건의 간행물 등 발간실적에서 자료집 76건(47%), 보고서 41건(25%), 연구논문 30건(19%), 기관지 10건(6%), 기타 4건(2%) 등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각 정책연구소별로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의 전체 자료발간 실적 84건 가운데 자료집 63건(75%), 자료집 17건(20%), 연구논문 4건(5%)이며 여의도연구원은 전체 18건 가운데 보고서 12건(67%), 기관지 6건(33%)이었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은 19건의 자료발간 활동실적 모두 자료집이었고 진보정책연구소는 26건의 자료발간 실적 모두 연구논문이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5건의 자료발간 실적 가운데 보고서 1건(20%), 기관지 4건(80%)이다. 열린정책연구소 5건 중 자료집 1건, 기타 4건이었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3건과 시대전환 LAB의 1건은 모두 자료집이었다. 한편, 국민미래연구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의 자료발간 활동실적은 전무했다.

<표 2-11> 2021년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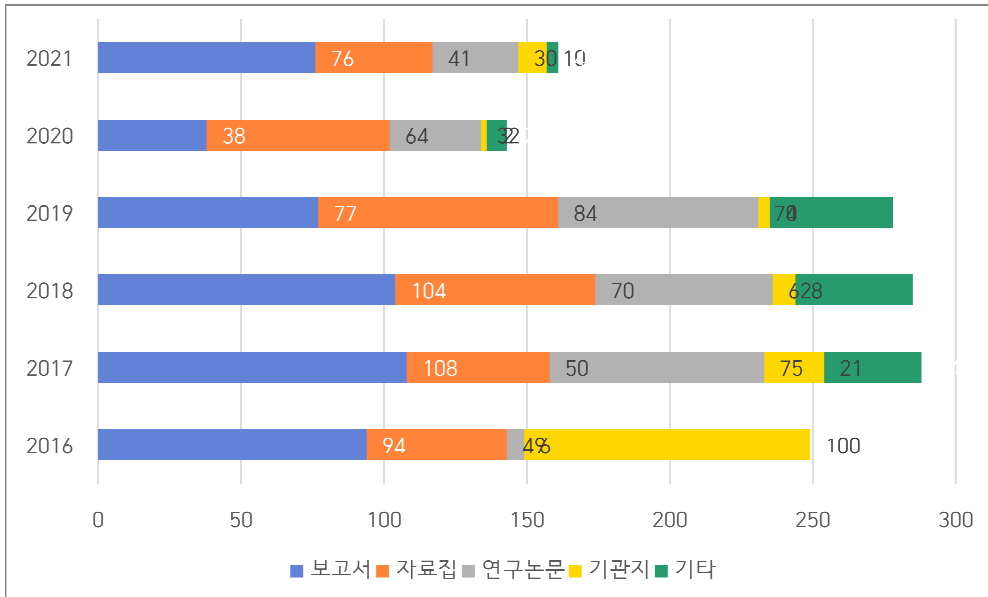
	보고서	자료집	연구 논문	기관지	기타	계
민주연구원	63 (75%)	17 (20%)	4 (5%)	-	-	84
여의도연구원	12 (67%)	-	-	6 (33%)	-	18
정의정책연구소	1 (20%)	-	-	4 (80%)	-	5
국민미래연구원	-	-	-	-	-	-
열린정책연구소	-	1 (20%)	-	-	4 (80%)	5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3 (100%)	-	-	-	3
시대전환LAB	-	1 (100%)	-	-	-	1
혁신과미래연구원	-	19 (100%)	-	-	-	19
진보정책연구원	-	-	26 (100%)	-	-	26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	-	-	-	-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	-	-	-	-
합계	76 (47%)	41 (25%)	30 (19%)	10 (6%)	4 (2%)	161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1년 정기보고

구체적으로 각 정책연구소별로 주요한 자료발간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의 경우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의 동향의 조사 내용을 정리한 ‘여론조사 이슈정리’를 38호까지 발간하였고 주요 현안에 대한 내부 연구자료인 ‘현안과 이슈’를 23호까지 발간하는 등 연속기획물 성격의 발간물이 많았던 것이 특징적이다. 진보정책연구원의 경우 모두 자료집의 형태였는데 지방자치 단체 수준의 정책과 대신 정책제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의 경우 자

체 간담회와 연계하여 도심 숲 조성이나 암호화폐 등에 대한 간담회 자료집의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정기간행물 성격의 이슈브리프를 6회 발간하였고 정책보고서를 발행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한미동맹이나 대 중국 전략 등 외교문제에 대한 내용의 비중이 높았다.

<그림 2-15> 2016~2021년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



한편, <그림 2-15>에서 2021년 정책연구소의 자료발간 활동 실적을 지난 5년간 추이와 비교해보면 2017년 자료발간 활동실적이 크게 증가하여 2019년까지 비교적 유지되었으나 2020년 급격하게 감소했고 2021년에도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보고서의 경우 2019년 77건에서 2020년 38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에는 76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자료집의 경우는 2019년 84건 이후 2020년 64건, 2021년 4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연구논문의 경우 2019년 70건에서 2020년 32건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30건을 기록하였다. 기관지의 경우는 2016년 100건이 발행되었으나 2021년에는 10건을 기록하였다. 기관지의 성격의 발간물들이 보고서 형태로 대체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 Ⅲ.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과 개선사항

이번 장에서는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들의 정당과의 연계성과 주요 활동, 운영방식과 더불어 개선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2022년 10월 15일에 11개 정당연구소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서면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답변 마감일이었던 11월 4일에 이르기까지 6개 정당연구소들이 서면 인터뷰를 작성해서 보내왔다. 서면인터뷰에 답변한 정책연구소와 응답자의 직급은 <표 4-1>과 같다. 서면인터뷰에 답변을 보내지 않은 정책연구소의 수가 절반 정도이며 응답자의 직급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서면인터뷰 결과가 전체 정책연구소의 운영 현황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제2장에서 정량 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한 각 정책연구소들의 운영과 사업 실적을 보완하는 참고 내용으로는 적잖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표 3-1> 서면인터뷰 응답자 현황

	소장	부소장	연구기획 실장	연구위원	기타
민주연구원	-	-	-	1	
정의정책연구소	-	-	-	1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	-	1	
시대전환LAB	-	-	-	-	1(전 부소장)
진보정책연구원	-	-	-	1	
혁신과미래연구원	-	-	-	-	1(선임연구원)
합계	0	0	0	4	2

서면 인터뷰는 1)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정당 정책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연구소의 운영과 사업활동, 3) 2021년 정책연구소 핵심 사업과 중앙당과의 협의 절차, 4) 정책연구소의 개선방안에 관한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아래서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로 서면인터뷰 문항의 순서와 본 장의 분석의 순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1.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정당 정책에 미치는 영향

우선 정책연구소가 정당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즉 “「정당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7조(보조금



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이었다. 대부분의 정책연구소가 스스로 연구성과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당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하였다. 다만, 흥미롭게도 혁신과미래연구원의 경우 정당과 정책연구소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갖게 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3-2>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과 법안에 미치는 영향

	응답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침
정의정책연구소	1) 정의당의 정치이념 확립과 중장기 정책개발이라는 싱크탱크의 역할, 2)새로운 정치의 기반인 정치인력 풀 형성이라는 정책네트워크의 역할, 3)당원 교육연수의 장이라는 정책공동체(최근, 교육연수기능은 중앙당 교육연수원에서 맡고 있음) 등 3가지의 역할을 맡음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시대전환LAB	선거 공약 등 정책결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임.
진보정책연구원	진보당의 정책 결정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대표적으로 진보정책연구원은 ‘2021년 20대 대선 선거, 지방선거 공약자료집’을 발간함. 진보정책연구원의 ‘2022년 대선 선거 공약’은 그 자체로 진보당의 당론이자 대표적 정책이 되었음
혁신과미래연구원	당의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당 내부적으로 정책위 등의 정책부서가 존재하는 경우, 그 역할이 상당수 중복되는 부분도 존재.

<표 3-3> 정책연구소의 목표와 역할

	응답
민주연구원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
정의정책연구소	현재 기후 위기라는 초유의 지구문명의 종말적 위기 상황 속에서 기존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체제 전환이 필요. 또한 한국사회는 총체적 차원에서 극단적인 양극화 및 일상이 안전하지 않은 중대재해, 즉 재난이 일상화된 사회가 되었는데, 문제는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것임. 낡고 낡은 양당제 정치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바, 정의정책연구소는 다당제 협의민주주의의 비전과 대안을 바탕으로 양당제 정치를 종식하고 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실천을 계속할 것임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사회 전반의 재구성을 위한 수단 혹은 지향으로서의 기본소득 정책을 연구하고, 이에 수반되어야 할 제도적 변화들을 연구함
시대전환LAB	주4일제 등 곧 도래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의 개발. 또한 교육 재정 배분과 같이 국가균형발전과 교육 부문 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발. 그리고 이를 선거 시 공약으로 조정·반영
진보정책연구원	○ 지향 -진보집권의 청사진 제시 ○ 목표 -미래 사회의 대안 의제 개발 및 당면 선거에서 정책 공약 개발 ○ 역할 - 1)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2)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대안 의제 개발 3) 주요 선거 정책 공약 개발 4) 주요 정책 교육 5) 주요 단체외 정책네트워크 구성
혁신과미래연구원	혁신과미래연구원은 민생당의 싱크탱크로서 민주주의가 계속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기득권 타파에 대한 도전, 민생을 안정시키는 민생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지역·계층·세대·성별의 차별이 없도록 정책을 개발하여 정책정당으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 정치를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함

다음으로 정책연구소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 및 목표,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표 3-3>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모든 응답자들은 정당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을 연구 개발, 제시, 확산하는 것을 정책연구소의 기본 목표로 자각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정의정책연구소,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시대전환 LAB은 각각 양당제의 폐지 및 다당제의 수립, 기본소득의 확대,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및 교육 시스템의 전환

이란 모정당들의 목표에 매우 부응하는 정책 관련 역할들을 제시하였다. 민주 연구원은 민주시민과 당원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를 위한 교육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앞 설문 문항에서 정의정책연구소 또한 이 부분을 명시한 바 있다. 한편, 민주연구원과 진보정책연구소의 경우, 정책 및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을 주된 역할로 명시하였다. 또한 정의정책연구원 역시 앞 설문 문항을 통해 정책네트워크 기능을 제시한 바 있다.

## 2. 정책연구소의 업무와 운영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를 알아보기 위해 1)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시행하는 사업과 2) 연간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 사업에 관해 물어 보았다. <표 3-4>은 각 정책연구소의 선거와 비선거 시기의 사업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연구소들은 선거 시기에 정책연구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핵심 공약을 발굴·작성하고 이의 확산 및 선거 지원 업무를 수립·수행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비선거 시기에는 중장기 전략 및 연구 과제 등을 수행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비선거 시기에 중장기 차원에서 대대외적인 동향에 따른 현황 파악 및 정책 연구 및 개발을 넘어, 외부 전문가 등과의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등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 4-5>는 정책연구소의 연간 사업을 정기적인 것과 비정기적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정책연구소들은 연간 정기 사업으로 정당의 정책개발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과 계간지 발간, 그리고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비정기 사업으로는 민주연구원의 당원교육을 비롯한 교육활동 및 비정기적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진보적 성향의 진보정책연구소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제로서 주거 및 청년들의 정책 관련 공약 개발 등을 별도의 비정기적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혁신과미래연구원의 경우 정기적으로 민생당 중앙당과의 협조를 통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답하였다.

<표 3-4> 정책연구소의 사업 (선거/ 비선거시기)

	선거시기	비선거시기
민주연구원	공약 작성	현안 분석보고서, 중장기적 전략과 정책 작성, 필요한 정책과 입법 사항 발굴
정의정책연구소	여론조사, 아젠다 및 담론, 의제 개발, 정책자문단 조직 등에 주력	당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및 조사에 치중하며, 그밖에 전문가 네트워크 조직 등의 사업을 수행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선거공약 개발, 정책 연구개발 등	중·단기 현안 대응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정리, 정책 연구개발 등
시대전환LAB	공약, 정책 개발 및 이의 확산	다양한 정책 아이템 및 아젠다의 근거 마련
진보정책연구원	정책공약의 개발, 교육, 발표 및 선거 지원업무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간 '정책과 논점'을 발간하고 '정책토론회'를 주관함. 당내 조직 및 외부 조직과의 '정책연대' 사업을 진행함. 또한 '정책연구용역', 정책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진보진영과의 정책교류. 정책에 대한 교육 사업으로 '정책아카데미' '광역 시도당 교육' '새 노동정책교육' 등을 수시로 진행
혁신과미래연구원	선거지형파악, 지역분석, 정당정책공약 등 선거 전략 위주의 분석. 필요시 여론조사와 연구용역 사업을 공모	현안문제에 대해 전문가 주제발표를 매달 간담회 형태로 진행. 발제도서를 선정하여 연구원 내부 세미나(직원)로 토론의 장 확대

<표 3-5> 정책연구소의 연간 사업 (정기적/ 비정기적)

	정기적	비정기적
민주연구원	중장기적 전략과 정책 작성, 필요한 정책과 입법 사항 발굴, 유권자 분석 등	현안분석, 당원 교육
정의정책연구소	계간 진보정책&이론지인 「보다 정의」 보고서, 월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등 발간, 주례 및 월례 여론조사 분석 및 정리, 연구과제 수행 등	부정기 여론조사, 토론회, 이슈 보고서, 비정기 연구보고서 발간 등
기본소득정책연구소	당원 대상 정기 강연, 정책연구	현안 관련 특강, 공약 개발
시대전환LAB	선거시기 및 비선거시기 사업 내용과 대동소이	포럼 및 토론회 진행
진보정책연구원	주간 '정책과 논점' 발행, '대선, 지방선거 정책공약 수립', '정책 현안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	의제 마련을 위한 '의제위원회 운영', '계급계층 의제 확대회의 운영', 강령제정을 위한 '강령제정위 참여', 주거권 마련을 위한 '주거권위원회 운영',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팀 운영' 등을 진행
혁신과미래연구원	전문가 주제발표 간담회가 진행, 민생당(중앙당)과의 협력을 통한 토론회 기획, 제3시대 정치시대 확장을 위해 연구 등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포스트 코로나 관련 사항 대비 연구, 보권선거를 대비한 연구원 자체 공약 개발 및 당에 제공

다음으로 정책연구소의 의사결정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1) 중앙당과의 소통 절차 혹은 의견 조율 및 협력과정과 2)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에 대한 소개를 요청하였다. <표 4-6>는 정책연구소와 중앙당과의 소통 절차와 협력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모든 정책연구소에서 중앙당은 정책연구소의 사업 결정과 운영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중앙당과의 의견 교환은 필수적이었다. 정책연구소

별 중앙당과의 협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민주연구원은 연도별 사업은 당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연구원 이사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당 관련 정책사업은 당지도부에 보고해 결정하게 된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일상 시기 및 위기 시에 공히 중앙당과 긴밀히 소통하며 연구소의 성과물을 공약 및 입법안 등에 반영해나갔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대표단 회의에 정책연구소 운영 및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안건을 제출하며,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시대전환LAB은 중앙당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중앙대표당원의 의결을 받아 연구소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시대전환LAB의 경우 정책연구소의 자율성에 관해 스스로 꽤 높다고 평가하였다.

진보정책연구소의 경우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사업 보고 및 의결 과정을 거쳐 당과 정책연구소가 일체성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정책연구소가 당 정책위원회를 겸하기도 한다. 따라서 진보정책연구소의 경우 당직자 회의에 연구원들이 참여해 업무보고 및 기획조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무에 있어 비교적 의사결정의 비중이 높은 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에서 제출하는 주간 정책과 논점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당의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정책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당 대표단 교육부처 광역시도당으로 체계적으로 전파 활용되고 있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의 경우, 대부분의 정책연구소들과 마찬가지로, 당대표가 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소장을 이사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당과의 소통이 원활한 편이다. 특히 중앙당의 필요에 따라 중앙당 정책실 파견 등을 통해 당의 정책개발을 직접 지원하기도 한다.

<표 3-6> 중앙당과의 소통 및 협력 방식

	응답
민주연구원	사업계획 등은 연구원 독자적으로 설정, 성과물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당 지도부 보고 등
정의정책연구소	일상시기에는 주간 업무조정회의,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중앙당과 소통. 위기 상황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팀장회의를 통해 중앙당과 연구소가 상시 소통. 필요하면, 기획회의나 간담회 실시. 연구소 성과의 주된 활용 방식은 각종 연구보고서를 정책과 공약, 입법안에 반영하는 것
기본소득정책연구소	대표단 회의에 향후 정책연구소의 운영과 사업집행에 관한 계획이 제출되고, 이를 검토하여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집행. 성과물은 지속적으로 중앙당 및 각 조직과 공유함
시대전환LAB	사업은 중앙당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중앙대표당원 의결을 받아 진행. 하지만 일상적으로 시의성-아젠다 중심의 정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정책연구소의 자율성은 높음. 성과물은 선거 공약, 정책에 관한 기자회견, 법안 발의, 관련 직능단체 간담회 등으로 진행
진보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의 대표단 중심으로 연구원 이사회를 구성해 당과 연구원이 일체성을 갖도록 함. 또한 원장, 부원장, 정책실장 등이 당 대표단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사업보고와 의결을 통해 사업에 대해 당적 결의를 확보함. 특히 연구소 사무실이 중앙당 내에 설치됨으로써 중앙당 각 부서와 일상적인 업무조율이 가능함</li> <li>○ 제도적으로 당 정책연구소는 정책위를 겸하고 있으며 대표단회의, 당무위, 중앙위, 대의원대회에 원장, 부원장이 참석해 정기 업무보고를 하고, 당 기획조정회의에 정책실장이, 당직자회의에 연구원 전원이 참석해 업무를 보고하며 기획 조정을 하고 있음</li> <li>○ 연구소에서 제출하는 주간 정책과 논점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당의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정책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당 대표단 교육부처 광역시도당으로 체계적으로 전파 활용되고 있음</li> </ul>
혁신과미래연구원	중앙당 당대표가 당연직 이사장이고 연구원 정관에 따라 연구원 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 중앙당과 의견 조율 및 협력은 이사장과 원장의 조율을 통해 진행되며, 매년 초 연구원 사업계획안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함으로써 중앙당과 연구원의 사업 및 정책 방향성 등을 조율. 또한, 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중앙당의 필요에 따라 중앙당 정책실 등에 파견을 통해 정책개발 등을 지원

<표 3-7>은 정책연구소의 사업결정과 집행 방식에 대한 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의사결정방식은 정책연구소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업결정 방식을 취해 결과적으로 중앙당과의 협의를 중요한 절차로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표 3-7> 정책연구소의 사업결정과 집행방식

	응답
민주연구원	정기적 사업의 경우 연구원 실장단 회의 - 원장단 회의 - 이사회 절차를 거쳐 결정. 보고서나 브리프 등을 통해 홈페이지, 언론 배포 등
정의정책연구소	이사회를 통해 연간 사업계획이 심의 의결되며 수립된 사업계획은 소장, 부소장, 연구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주간 운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안을 바탕으로 수행됨. 대표단 회의, 중앙당 전략회의를 통해 수립된 정책 성과와 대안들의 공유 및 확산
기본소득정책연구소	매주 월요일 운영회의, 매주 금요일 보고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집행과 연구소 운영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
시대전환LAB	필요시 시의성-아젠다 중심으로 소규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정책을 정리하는 방식을 취함. 성과는 주로 정책 자료집인데, 이는 선거공약, 기자회견, 토론회 자료 등으로 확산. 확산은 언론기사 등 공보 활동을 토대로 진행
진보정책연구원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전원회의에서 사업 입안- 대표단 보고 및 의결- 당무위원회 보고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걸쳐 전 당적으로 주요 정책을 확산함
혁신과미래연구원	매년 초 연구원 각 부서의 사업계획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한 해의 사업 방향성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세부적인 사안은 정관 및 세칙에 근거하여 각 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하고 집행



민주연구원의 경우, 규모가 크고 전통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추정되는데, 사업계획은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답했다. 정의정책연구원의 경우, 대표단 회의, 중앙당 전략회의를 통해 수립된 정책 성과와 대안들이 당적 계통으로 공유되고 확산된다. 진보정책연구소의 경우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전원회의에서 사업 입안-대표단 보고 및 의결을 거치고 당무위원회 보고 및 의결 등의 절차까지 거쳐 전 당적으로 주요 정책을 확산한다고 답했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매주 월요일 운영회의, 매주 금요일 보고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집행과 연구소 운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답했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은 매년 초 연구원 각 부서의 사업계획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한해의 사업 방향성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세부적인 사안들은 정관 및 세칙에 근거해 각 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하고 집행한다고 답했다.

〈표 3-8〉 정책연구소 연구인력 고용 및 총원 기준

	응답
민주연구원	○ 필수적인 분야 인원을 기본으로 수요가 있는 분야 총원 ○ 처우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인력 유인 필요
정의정책연구소	○ 채용 분야의 연구와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연구 및 결과 도출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로는 연구 성과와 사회를 통찰하는 진보적 관점과 경험 ○ 분석력을 중요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소수정당 연구소의 재정역량이 취약하니 다변화하는 한국사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안을 처방하는 역량의 한계가 존재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연구 인력 고용 및 총원의 기준: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 인력 총원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함.
시대전환LAB	○ 현재 소장 한 명과 부소장 두 명으로 운영 ○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재정
진보정책연구원	○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총원의 기준은 당원으로서 당의 정책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 ○ 연구소 재정이 부족하여 한 명의 연구원이 여러 분야의 정책 연구를 해야 하는 제한성 상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총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
혁신과미래연구원	○ 정책연구소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외정당도 적정 인원을 총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

정책연구소 연구인력의 충원에 있어서는 <표 3-8>에 기술된 것처럼 다수의 정책연구소들이 연구 전문성 및 역량을 중요시 했으며, 당의 가치와 비전 등에 대해 공감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민주연구원을 포함해 서면인터뷰에 응한 모든 정책연구소들이 연구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한편,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한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연구소와의 교류 활동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실상 정책개발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교류활동을 제대로 수행한 정책연구소는 거의 없었다. 진보정책연구원만이 당의 주요 정책 개발 과정에서 노동단체, 농민단체, 청년단체, 평화통일연구소 등 주요 사회단체들과 정책교류를 했고, 이를 통해 이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고 답했다.

<표 3-9> 2021년 정책연구소의 정책네트워크 활동

	응답
민주연구원	교류경험 없음
정의정책연구소	교류경험 없음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교류경험 없음
시대전환LAB	교류경험 없음
진보정책연구원	당의 주요 정책 개발에서 노동단체, 농민단체, 청년단체, 평화통일연구소 등 주요 사회 단체와 정책 교류를 통해 이들의 요구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혁신과미래연구원	교류경험 없음

### 3. 2021년 정책연구소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사업

<표 3-10>은 정책연구소의 2021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에 대한 각

연구소별 관계자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정책연구소들이 2022년 대선을 위한 공약 및 정책 마련을 주요 정책의제 및 사업으로 다뤘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각 당의 주요 정책에 부합하는 추가적 정책의제들 및 이에 따른 사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정의정책연구소는 플랫폼노동의 현황과 대안,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정책 등을 입안하였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기본소득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정책을 연구했다고 답했다. 시대전환LAB은 주4일제 및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책의제를 다루며 관련 데이터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진보정책연구소는 한반도평화번영, 청년, 기후위기, 노동, 노점상, 주거, 자영업자, 복지, 지방자치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정책의제들과 관련해 연구와 보고서 작성 및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표 3-10> 2021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

	응답
민주연구원	대선, 지선 공약과 정책 마련
정의정책연구소	2021년에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집중. 플랫폼노동의 현황과 대안,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정책 등을 입안. 또한 당의 대선 및 지방선거 대응에 기초 자료가 될 정세 분석 및 정치 전략, 정책 과제, 여론조사 분석 등을 담은 보고서 작성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공통부 기반의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정책 연구
시대전환LAB	주 4일제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데이터와 대안을 마련해 중앙당 및 원내대표와 협의해 진행
진보정책연구원	○ 한반도평화번영을 위한 보고서, 평화통일포럼 세미나1~4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 실천과제 연구</li> <li>- 남북합의에 기초한 평화군축의 방향과 전망</li> <li>- 군비증강의 현황과 민주적 군비통제 방안</li> <li>-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 방안</li> </ul> ○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대 능력주의 리포트, 20대 남자현상 왜 생겼나?</li> <li>- 능력주의 공정에 대한 담론, 공성성 관련 이슈 등 20대 청년들을 위한 핵심전략연구</li> <li>○ 기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의 대전환 연구</li> <li>- 기후에너지정책비전/신재생에너지사업의 문제와 해결방안</li> <li>- 노동자 중심의 기후위기대응/기후위기대응의 전환전 방향과 정치의 역할</li> </ul> </li> <li>○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위기에서 돌봄 공백 사회적 문제, 이에 따른 돌봄노동자 기본법 연구</li> <li>- 진보당이 노동중심 정당으로 기초를 정한 만큼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새로운 노동환경을 적용한 정책개발, 국가비전으로서의 분야별 정책 연구개발</li> </ul> </li> <li>○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공약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분야 - 사회적 재난에 따른 특수고용노동자 소득상실보전,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li> <li>노점상분야 - 생계형 노점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노점상 관련 법률정비</li> <li>주거분야 - 주거빈곤 및 자산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li> <li>자영업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 실질적인 구제대책연구</li> <li>복지분야 -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으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중요성 부각, 이에 따른 종합적인 복지정책 연구</li> <li>지방재정, 지방자치분야 - 제로페이, 순세계잉여금 해결 및 효율적인 행정,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를 통한 재정간막이 낮추기, 주민 발안권 실질화 등</li> </ul> </li> </ul>
<p><b>혁신과미래연구원</b></p>	<p>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10대 핵심공약 개발 및 정세분석, 여론조사 등 원외정당으로서 전 국민에게 주목받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생 중심의 정책을 제안하여 민생당의 핵심 가치와 방향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함. 또한, 다양한 주제로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매달 2-4회 진행하여 연구원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및 중장기적 민생당의 핵심 가치를 개발하고자 함</p>

#### 4. 정책연구소를 위한 개선방안

정책연구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기 위해서 1) 정당연구소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 2)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시급한 사항, 3) 정책연구소의 의사결정방식 개선, 4) 정부정책연구기관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에 비해 가지는 장단점에 관해서 물어보았다.

<표 4-10>은 정책연구소가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기관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을 정당연구소별로 정리한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이에 대한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는 당대표의 이사장, 현역의원의 소장 겸임금지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정책연구소가 민주시민 교육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였다. 한편, 민주연구원을 제외한 모든 군소정당의 정책연구소들이 연구소의 재정독립성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이슈라고 답하였다. 특히 정당을 거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직접 정책연구소에 지급할 것, 원외정당 정책연구소에도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것, 그리고 자체적인 후원 기능을 강화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

<표 3-11> 정당연구소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

	응답
민주연구원	-
정의정책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으로부터 충분한 독립성과 자율성의 보장. 당대표의 이사장, 현역의원의 소장 겸임금지. 중앙당을 거친 정당교부금 배부가 아닌 정책연구소 직접 교부 방식으로 전환. 독립 후원회 등의 허용</li> <li>○ 민주시민 교육의 대폭 허용 및 강화</li> </ul>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정책연구소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를 통한 재정지원의 강화를 통해 더욱 활발한 연구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
시대전환LAB	정책연구소가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 의석수에 기반한 정당보조금 배분이 아닌, 소수정당이 좀 더 배분을 받을 수 있는 배분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진보정책연구원	‘정책 생산을 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의 보장’이 중요하나, 진보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혀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함.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외정당이라도 정책생산 및 정책개발의 연구활동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등 혁신적 변화가 필요
혁신과미래연구원	법적, 제도적 또는 현실적 조건으로 예산의 측면에서는 선관위에서 분기별로 보조금배분정당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연구소에 배분 즉시 분배하는 것을 명문화하거나, 보조금을 직접 연구소에 지급하거나, 자체적인 후원 등의 검토가 필요

정당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시급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표 4-12>에 정리하였다. 민주연구원은 조직의 독립성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당 측에 정책과 노선을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정당연구소의 연구/전문성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 및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이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17개 국회 상임위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17명의 정책연구인력 확보 및 국고보조금 30%의 정책연구소에 대한 직접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연구소의 경우, 원내정당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판단되는데, 정책연구소의 재정자립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으며, 연구의 전문성 및 조직의 독립성 또한 모두 탄탄한 재정적 기반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고 답하였다. 시대전환LAB 또한 신생정당이자 소규모 정당으로서 현행 정당보조금만으로는 정책연구소의 재정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다당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그 전제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의 수급을 위해선 재정력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진보정책연구원은 연구 전문성 강화와 이를 위한 일정 역량을 갖춘 연구위원을 선발하기 위한 재정자립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의석수가 아닌 정당지지율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당비와 매칭펀드제로 실시하거나 비교섭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역교부세 도입하거나 연말 선관위 기탁금을 연구소 지정 기탁 등의 대책 등의 꽤 많은 대책들을 제안하였다.

〈표 3-12〉 정당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시급한 사항

	응답
민주연구원	조직의 독립성 유지: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당에 정책과 노선을 제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임
정의정책연구소	- 정의정책연구소 역할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재정적 독립 및 인사의 독립성이 필수 - 17개 상임위 대응 최소(17명) 정책연구인력 지원이 보장될 필요 -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할 필요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재정자립성이 가장 시급함. 연구의 전문성, 조직의 독립성은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음.
시대전환LAB	재정의 규모 자체가 시급한 사항임. 연구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필수적. 현행 정당보조금으로 이를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대한민국이 다당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해 소수 의석 원내정당에게 정당보조금 배분 몫이 더 지급되어야 함
진보정책연구원	○ 연구/전문성 강화와 재정자립성 확보가 시급한 사항임. 이것은 연구원의 재정 역량과 관련된 것으로, 일정 역량을 갖춘 연구위원들을 선발하려면 그에 맞는 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함.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미지급되는 상황에 의원정당 정책연구소은 재정이 미흡해 사실상 정책연구 강화의 본연의 목적을 다하기 어려움  ○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정당지지율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당비와 매칭펀드제로 하거나, 비교섭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역교부세를 도입하거나, 연말 선관위 기탁금을 연구소 지정 기탁으로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
혁신과미래연구원	조직의 독립성 유지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함. 독립성 유지가 되어야 재정 자립성(자율성)과 연구/전문성 강화가 이어지기 때문임. 정당의 연구소라는 특성상 정당의 정치행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역량 강화와 연구 방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독립성 유지가 중요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방식 개선사항과 관련해 민주연구원은 특별히 답하지 않았고, 정의정책연구소, 기본소득연구소, 시대전환LAB, 진보정책연구원은 현제가 최선이며 특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없다고 답하였다. 혁신과미래연구

원의 경우 연구원 사업에 있어 각 부서의 의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회의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 3-13> 정부 및 민간 정책연구기관과 비교되는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민주연구원	구체적인 제도 설계, 법안 설계 역량 높음. 국민체감형 정책 발굴 노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미흡. 거시적인 연구 미흡
정의정책 연구소	정당의 정책연구소로서 국회라는 현실 정치가 격돌하는 이슈를 접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입법화 한다는 강점	5년, 10년을 단위로 하는 중장기 과거, 미래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에는 한계
기본소득 정책연구소	정당의 부설 정책연구소로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연구하기 때문에 효능감이 높음	독립적으로 후원을 받는다거나 재정을 마련할 수 없음
시대전환 LAB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연구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 국책이나 민간의 경우 재원 출연자의 특정한 의도가 담기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진보정책 연구원	연구주제와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시기별로 한국사회의 주요한 의제와 과제를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 및 발표할 수 있다는 장점	단점으로는 지원금의 한계로 인하여 전문가의 연구인력 지원 등 안정적인 연구활동 등 경제적인 어려움
혁신과미래 연구원	정치 현안에 대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민첩하게 국민들의 정치 요구를 현실로 느낄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연구 활동을 폭넓게 기획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강점	단점으로는 원외 정당의 정책연구소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모두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시 부분적인 한계

끝으로 정책연구소가 정부정책연구기관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에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았다. 민주연구원은 정치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



적인 제도 설계, 법안 설계 역량 높음. 국민체감형 정책 발굴 노력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나 거시적인 연구는 미흡하다고 답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국회라는 현실 정치가 격돌하는 이슈를 접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입법화 한다는 강점이 있지만, 5년, 10년을 단위로 하는 중장기 과거, 미래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정당의 부설 정책연구소로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연구하기 때문에 효능감이 높으나, 독립적으로 후원을 받는다거나 재정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 약점이라고 설명했다. 시대전환LAB은 국책이나 민간의 경우 재원 출연자의 특정한 의도가 담기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반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연구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답했다. 진보정책연구원은 연구주제와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시기별로 한국사회의 주요한 의제와 과제를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 및 발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지원금의 한계로 인하여 전문가의 연구인력 지원 등 안정적인 연구활동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은 민첩하게 국민들의 정치 요구를 현실로 느낄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연구 활동을 폭넓게 기획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원외 정당의 정책연구소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모두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책연구소들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연구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소 조직과 재정, 연구와 정책개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실적, 교육 및 연수활동, 정책홍보, 간행물 발간 등을 분석하였다. 2020년에는 「일부 병립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주요 정당의 위성 정당을 포함한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정당들이 대거 창당하고 제21대 총선에 원내정당으로 진입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책연구소의 수가 11개로 증가하였으나 선거 이후의 정계 개편과 함께 일부 연구소는 활동의 축소된 것도 있었다.

우선, 전체 연구인력의 수는 2020년 119명에서 2021년 22명이 감소하였고 대신 행정직원의 수는 증가하였다. 특히, 박사급 연구원은 2020년에 25명이 감소된 것이 이어 작년에는 10명이 다시금 축소되었다. 지난 2019-2020년 사이에도 연구인력이 50명이나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지난 2년간의 연구인력 속

소는 정책연구소의 전문성 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 변화라고 판단된다.

둘째, 의석수에 따라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정당을 통한 지원금으로 5억 이상을 지급 받은 연구원은 총 4개로서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혁신과미래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가 각각 88억 2천여만 원, 63억 4천여만 원, 9억 2천여만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1억 이상 5천미만의 정당 지원금을 받은 정책연구소는 국민미래연구원, 열린정책연구소, 혁신과미래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으로 각각 4억 1천여만 원, 3억 9천여만 원, 2억 8천여만 원, 1억 2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시대전환LAB은 약 8천여만 원을,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5천여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은 정당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다.

셋째, 2011년 연구소의 활동실적을 분석한 결과 예전과 달리 정책홍보에서 가장 많은 실적 건수를 기록하였다. 다만, 이는 단순 홍보성 게시물 작성도 1건으로 치는 산정방식에 의한 착시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산출했으며 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개최, 자료발간, 교육 및 연수 등의 순으로 실적이 나왔다. 최근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체 연구의 비중과 외부용역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정책지원금 규모에 따라 정책연구소의 실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정책연구소 관계자에 대한 서면인터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연구소의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정책전문가와 정당연구소 관계자들과 매년 정책연구소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 중앙당을 거치는 정당보조금 교부 방식이 아닌 정책연구소에 대한 직접 교부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와 같이 정당을 통한 교부 방식은 각 정당에서 정책연구소의 국고보조금을 편법으로 활용하하는 문제가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당대표가 이사장을 겸임하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소가 운영될 시 당의 철학과 노선에 입각한 정책연구 및 역량강화보다도 현직 리더십의 정치적 손익 계산에 휘둘릴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정책연구소에 대한 지원금을 원내의석 수로 획일적으로 결정짓기 때문에 정책연구소 간의 재정이 너무 심각한 격차를 보이며 의석수가 적은 정당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금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할 수가 없다. 또한 1개의 의석이라도 있으면 정당 보조금이 지원되어 정책연구소를 설치해야 하므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날 때마다 새로 생겨나거나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연구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최소한의 전문적인 연구인력 충원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소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원내의석 수에 상관없이 최소 2번 이상의 총선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바꾸거나 지금처럼 모든 원내 정당이 정책연구소를 운영해야 한다면 연구소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저 보조금 액수를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사회연구소에 지불하는 수준인 3억 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연구소가 자체적인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연구소가 여론조사 등 선거이슈 등에 매몰된 단기적 정책과제에만 너무 에너지를 쏟는 양상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사실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당의 장기적인 가치와 비전에 걸맞은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앞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당의 정책적 입장을 준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지적들도 적지 않다. 물론 현재의 재정적인 조건 하에선 이러한 연구역량 패러다임의 변화가 쉽지 않겠으나, 해당 방향으로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정책연구소가 당원교육 나아가 전반적인 시민교육 등의 역할까지 맡을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정책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정책연구소가 본연에 대한 정책연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연구소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은 여타 정부정책연구소나 민간정책연구소에 비해 경쟁력이 한참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많은 정부정책연구소나 민간정책연구소들이 세계적으로 그 연구 성과를 인정을 받아 세계적으로 상위 혹은 중위권의 싱크탱크로 평가를 받는데 반해 아직 우리나라의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 업적이나 영향력에서 미비하며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활발한 교류실적도 별로 없다. 더욱이 서면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가장 규모가 큰 정책연구소마저도 답변을 회피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보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연구재단이 장기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같이 1년 혹은 2년 단위로 정책연구소의 사업 실적을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 정기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책연구소의 국고지원금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거나 중단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부록> 정당연구소의 6개년 활동 변화에 대한 데이터4)

<표4-1> 정당정책연구소 박사급 연구인력 수 변화(2016~2021, 단위: 건)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민주연구원	20	22	22	29	16	14
여의도연구원	12	9	6	6	8	6
정의정책연구소	2	1	2	3	2	4
국민미래연구원			6	11	0	0
열린정책연구소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시대전환LAB					1	1
혁신과미래연구원			3	2	5	0
진보정책연구원					2	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	1	1	1
미래한국사회연구원					3	3
합계	34	32	40	52	38	29

<표4-2>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실적 변화(2016~2021, 단위: %)

	연구개발	토론회등	교육연수	정책홍보	자료발간	기타활동
2016	41.2	18	2	18.6	12.7	7.5
2017	33.7	22.2	2.9	16.3	17.9	7.1
2018	29.7	14.6	2.5	28.1	17.6	7.5
2019	31.1	18.5	6.7	18.1	15.7	10
2020	31.1	11.6	2.3	18.7	8.8	27.5
2021	17.2	5.0	4.0	67.0	4.6	2.2

<표4-3> 연구·개발 활동실적 주체 변화 (2016~2021, 단위: 건)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체	467	536	431	469	440	506
외부	38	41	40	48	58	47
자체외부 (공동)	40	12	14	33	10	54

4) 본문 중 <그림2-10>에서 <그림 2-15>의 경우 수치가 작은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부록에서 표의 형태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표4-4〉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변화 (2016~2021, 단위: 건)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토론회	11	90	58	105	42	36
간담회	11	143	109	99	89	105
포럼	9	14	9	23	5	7
세미나	8	32	31	63	16	12
여론조사	0	64	12	29	21	11
기타	2	17	19	8	16	7
합계	41	360	238	327	189	178

〈표4-5〉 대상별 교육·연수 활동실적 변화 (2016~2021, 단위: 건)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당직자	16	12	16	25	5	42
당원	1	18	16	74	18	17
청년·대학생	0	3	0	0	3	27
시민	0	4	0	14	2	54
기타	9	15	8	5	9	3
합계	26	52	40	118	37	143

〈표4-6〉 정책홍보 방법 변화 (2016~2021, 단위: 건)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이트개제(SNS)	132	172	319	105	108	2296
사이트개제(보도자료)	92	69	98	81	125	69
보도자료	19	15	16	4	7	1
책자배포	1	9	13	64	1	0
기타	2	21	12	67	64	2
합계	246	286	458	321	305	2368

〈표4-7〉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 변화 (2016~2021, 단위: 건)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고서	94	108	104	77	38	76
자료집	49	50	70	84	64	41
연구논문	6	75	62	70	32	30
기관지	100	21	8	4	2	10
기타	0	34	41	43	7	4
합계	249	288	285	278	143	161

<부록2>

※ 다음은 서면 인터뷰 질문지와 각 정책연구소의 답변을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한 것이다.

##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정책연구소의 2021년 운영과 활동에 대한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본 서면설문에 응답하신 내용들은 보고서 작성과 정책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연구책임자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조 (순천대 사회교육과 교수)

○ 선생님께서 소속된 정책연구소는 어디입니까?

- ① 민주연구원
- ② 여의도연구원
- ③ 정의정책연구소
- ④ 국민미래연구원
- ⑤ 열린정책연구원
- ⑥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⑦ 시대전환LAB
- ⑧ 혁신과미래연구원
- ⑨ 민주평화연구원
- ⑩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⑪ 진보정책연구원
- ⑫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정책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소장
- ② 부소장
- ③ 연구위원
- ④ 기타 (                    )

※ 다음의 12개 항목에 대하여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정책연구소의 서면 인터뷰 내용은 정책연구소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고서에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게재됩니다.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5. 귀 정책연구소의 2021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6. 귀 정책연구소가 2021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절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총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총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2021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2021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여시재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서면 인터뷰 질문지와 각 정책연구소의 답변을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한 것이다.

##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정책연구소의 2021년 운영과 활동에 대한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본 서면설문에 응답하신 내용들은 보고서 작성과 정책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연구책임자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성조 (순천대 사회교육과 교수)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 선생님께서 소속된 정책연구소는 어디입니까?

- ① 민주연구원
- ② 여의도연구원
- ③ 정의정책연구소
- ④ 국민미래연구원
- ⑤ 열린정책연구원
- ⑥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⑦ 시대전환LAB
- ⑧ 혁신과미래연구원
- ⑨ 민주평화연구원
- ⑩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⑪ 진보정책연구원
- ⑫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정책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소장
- ② 부소장
- ③ 연구위원
- ④ 기타 (                    )

※ 다음의 12개 항목에 대하여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정책연구소의 서면 인터뷰 내용은 정책연구소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고서에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게재됩니다.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침

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

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독립성 유지: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당에 정책과 노선을 제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임

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선거시기 - 공약 작성  
비선거시기 - 현안 분석보고서, 중장기적 전략과 정책 작성, 필요한 정책과 입법 사항 발굴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기적 사업 - 중장기적 전략과 정책 작성, 필요한 정책과 입법 사항 발굴, 유권자 분석 등  
비정기적 사업 - 현안분석, 당원 교육

5. 귀 정책연구소의 2021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대전, 지선 공약과 정책 마련

6. 귀 정책연구소가 2021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절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등은 연구원 독자적으로 설정, 성과물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당 지도부 보고 등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정기적 사업의 경우 연구원 실장단 회의 - 원장단 회의 - 이사회 절차를 거쳐 결정  
보고서나 브리프 등을 통해 홈페이지, 언론 배포 등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적인 분야 인원을 기본으로 수요가 있는 분야 충원.  
처우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인력 유인 필요

9. 2021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원 후원금 모집 허용 필요

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영되고 있으나 미진함. 당과의 안정적인이고 체계적인 소통채널 미흡

11. 2021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류경험 없음

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여시재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 구체적인 제도 설계, 법안 설계 역량 높음. 국민체감형 정책 발굴 노력  
단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미흡. 거시적인 연구 미흡

※ 다음은 서면 인터뷰 질문지와 각 정책연구소의 답변을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한 것이다.

##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정책연구소의 2021년 운영과 활동에 대한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본 서면설문에 응답하신 내용들은 보고서 작성과 정책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연구책임자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성조 (순천대 사회교육과 교수)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선생님께서 소속된 정책연구소는 어디입니까?

- ① 민주연구원
- ② 여의도연구원
- ③ 정의정책연구소
- ④ 국민미래연구원
- ⑤ 열린정책연구원
- ⑥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⑦ 시대전환LAB
- ⑧ 혁신과미래연구원
- ⑨ 민주평화연구원
- ⑩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⑪ 진보정책연구원
- ⑫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정책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소장
- ② 부소장
- ③ 연구위원
- ④ 기타 (                    )

※ 다음의 12개 항목에 대하여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정책연구소의 서면 인터뷰 내용은 정책연구소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고서에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게재됩니다.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 3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소 우선 배분 등 설립 및 활동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당 정책연구소는 정책정당화를 통해 한국의 정당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서 설립됨.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는 정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정책 경쟁이 만발하는 민주정치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정책연구소 설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당 정책연구소는 기본적으로 1)정의당의 정치이념 확립과 중장기 정책개발이라는 씽크탱크의 역할, 2)새로운 정치의 기반인 정치인력 풀 형성이라는 정책네트워크의 역할, 3)당원 교육연수의 장이라는 정책공동체(최근, 교육연수기능은 중앙당 교육연수원에서 맡고 있음) 등 3가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각 정당에서 정책연구소 몫의 국고보조금을 당직자 급여 등 당 운영경비에 차용해서 쓰는 도덕적 해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당의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연구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으로부터 충분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직 독립 차원에서,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이사장이 되고, 현역의원의 정책연구소장 취임 금지 및 이사회 총원 비율 제한 등이 필요합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정책연구 전문성을 갖춘 분을 당 대표가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선출절차를 밟아 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정 독립 차원에서, 중앙당을 거친 정당교부금 배부가 아닌 정책연구소 직접 교부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연구소 독립 후원회 도입(총액 상한선 설정, 기업/법인/단체 기부 엄격 금지, 소액다수한해 허용)을 통해 재정책확장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합니다. 셋째, 현행법상 사실상 불가능한 민주시민 교육을 대폭 허용 및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현재 전 인류가 기후 위기라는 초유의 지구문명의 종말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처하려면 기존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체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사회는 총체적인 차원에서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안전해야 할 일상이 안전하지 않은 중대재해, 재난이 일상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낡고 낡은 양당제 정치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다당제 협의민주주의의 비전과 대안을 바탕으로 양당제 정치를 종식하고 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실천을 계속할 것입니다.

## 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정책연구소 역할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재정적 독립 및 인사의 독립성, 17개 상임위 대응 최소(17명) 정책연구인력 지원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상 국고보조금의 30%는 정책연구소에 귀속되지만, 정당을 통해 국고보조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의당 배정 국고보조금의 30%가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연구소 인력과 중앙당 정책인력 간 공동운영 보다는 충분히 분야별 관련 전문가 및 정책활동가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비록 20석 미만의 비교섭단체이지만, 정당비례득표율 10% 가까이 받은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교섭단체 중심의 정당보조금 배분체계 하에서는 모든 상임위를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연구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상임위별 적어도 1인, 총17인의 정책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역량 유지,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정의정책연구소는 선거 시기 여론조사, 아젠다 및 담론, 의제 개발, 정책자문단 조직 등에 주력합니다. 비선거 시기에는 당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조사에 치중하며, 그밖에 전문가 네트워크 조직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기적 사업으로는 계간 진보정책&이론지인 「보다 정의」 보고서, 월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발간, 주례 및 월례 여론조사 분석 및 정리, 연구과제 수행 등이 있습니다. 부정기적 사업으로는 각종 부정기 여론조사, 토론회, 이슈 보고서, 비정기 연구보고서 발간 등이 있습니다.

5. 귀 정책연구소의 2021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2021년에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집중하면서, 플랫폼노동의 현황과 대안,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정책 등을 입안했습니다. 또한 당의 대선 및 지방선거 대응에 기초 자료가 될, 정세 분석 및 정치 전략, 정책 과제, 여론조사 분석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6. 귀 정책연구소가 2021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절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시기에는 주간 업무조정회의, 비상대책위원회 등 위기 상황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팀장회의를 통해 중앙당과 연구소가 상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기획회의나 간담회도 실시합니다. 연구소 성과의 주된 활용 방식은 각종 연구보고서를 정책과 공약, 입법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이사회를 통해 연간 사업계획이 심의 의결되며 수립된 사업계획은 소장, 부소장, 연구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주간 운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안을 바탕으로 수행됩니다. 대표단 회의, 중앙당 전략회의를 통해 수립된 정책 성과와 대안들이 공유 및 확산됩니다.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구성원간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사업 추진 방식이 적절합니다.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용 분야의 연구와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연구 및 결과 도출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로는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를 통찰하는 진보적 관점과 경험, 분석력을 중요시합니다.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소수정당 연구소의 재정역량이 취약하다 보니 다변화하는 한국사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안을 처방하는 역량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9. 2021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출판 사업, 교육 사업, 후원회 조직 등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수정당 정책연구소들의 취약한 재정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민주당 등 거대야당 연구소 위주의 국고 보조금 배분이 아니라 소수정당 연구소 지원금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연구소 활동이 정당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를 보면, 정책연구소에서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한 의제들, 가령 플랫폼 노동, 청년 일자리 정책,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제 등이 당의 대선 및 지방선거 공약이나 정책에 일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책연구소가 더욱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30%를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연구소의 출판 활동, 교육 사업, 후원회 조직 등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1. 2021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당 정책연구소들과 교류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정당연구소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진행한 정당정책연구소 워크숍, 간담회 등도 중단되었습니다.

**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여시재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의 정책연구소이다 보니 국회라는 현실 정치가 격돌하는 이슈를 접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입법화 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5년, 10년을 단위로 하는 중장기 과거, 미래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다음은 서면 인터뷰 질문지와 각 정책연구소의 답변을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한 것이다.

##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정책연구소의 2021년 운영과 활동에 대한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본 서면설문에 응답하신 내용들은 보고서 작성과 정책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연구책임자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성조 (순천대 사회교육과 교수)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선생님께서 소속된 정책연구소는 어디입니까?

- ① 민주연구원
- ② 여의도연구원
- ③ 정의정책연구소
- ④ 국민미래연구원
- ⑤ 열린정책연구원
- ⑥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⑦ 시대전환LAB
- ⑧ 혁신과미래연구원
- ⑨ 민주평화연구원
- ⑩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⑪ 진보정책연구원
- ⑫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정책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소장
- ② 부소장
- ③ 연구위원
- ④ 기타 (                      )

※ 다음의 12개 항목에 대하여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정책연구소의 서면 인터뷰 내용은 정책연구소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고서에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게재됩니다.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의 정당 내 위상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는 각 정당의 내부사정에 달린 문제가 가깝다. 따라서 당 외부에서 달리 조정할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적 제도적 장치로써 정책연구소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를 통한 재정지원의 강화를 통해 더욱 활발한 연구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함.

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회 전반의 재구성을 위한 수단 혹은 지향으로서의 기본소득 정책을 연구하고, 이에 수반되어야 할 제도적 변화들을 연구함.

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성이 가장 시급함. 연구의 전문성, 조직의 독립성은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음.

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선거 시기: 선거공약 개발, 정책 연구·개발 등  
비선거 시기: 중·단기 현안 대응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정리, 정책 연구·개발 등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기적: 당원 대상 정기 강연, 정책연구  
비정기적: 현안 관련 특강, 공약 개발

5. 귀 정책연구소의 2021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공통부 기반의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정책

6. 귀 정책연구소가 2021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절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단 회의에 향후 정책연구소의 운영과 사업집행에 관한 계획이 제출되었고, 이를 검토하여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집행 중. 성과물은 지속적으로 중앙당 및 각 조직과 공유함.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매주 월요일 운영회의, 매주 금요일 보고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집행과 연구소 운영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의사결정방식에 큰 문제는 없음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 인력 충원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함.

9. 2021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지원금의 정치자금 비중을 늘리거나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크기를 들려야 함.

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반영됨. 매주 금요일 회의 후 보고서 수정 보완을 통해 최종편집 후 대표 및 당직자에게 공유.

11. 2021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여시재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 정당의 부설 정책연구소로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연구한다는 효능감이 높음  
단점: 독립적으로 후원을 받는다거나 재정을 마련할 수 없음

※ 다음은 서면 인터뷰 질문지와 각 정책연구소의 답변을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한 것이다.

##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정책연구소의 2021년 운영과 활동에 대한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본 서면설문에 응답하신 내용들은 보고서 작성과 정책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연구책임자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성조 (순천대 사회교육과 교수)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선생님께서 소속된 정책연구소는 어디입니까? ⑪

- ① 민주연구원
- ② 여의도연구원
- ③ 정의정책연구소
- ④ 국민미래연구원
- ⑤ 열린정책연구원
- ⑥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⑦ 시대전환LAB
- ⑧ 혁신과미래연구원
- ⑨ 민주평화연구원
- ⑩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⑪ 진보정책연구원
- ⑫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정책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③

- ① 소장
- ② 부소장
- ③ 연구위원
- ④ 기타 (                    )

※ 다음의 12개 항목에 대하여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정책연구소의 서면 인터뷰 내용은 정책연구소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고서에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게재됩니다.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21년 진보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은 진보당의 정책 결정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대표적으로 진보정책연구원은 ‘2021년 20대 대선 선거, 지방선거 공약자료집’을 발간함. 진보정책연구원의 ‘2022년 대선 선거 공약’은 그 자체로 진보당의 당론이자 대표적 정책이 되었음.

○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생산을 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의 보장’이 중요. 이는 예산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 문제는 진보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혀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함.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외정당이라도 정책생산 및 정책개발의 연구활동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등 혁신적 변화가 필요.

**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 지향 -진보집권의 청사진 제시
- 목표 -미래 사회의 대안 의제 개발 및 당면 선거에서 정책 공약 개발
- 역할 - 1)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2)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대안 의제 개발 3) 주요 선거 정책 공약 개발 4) 주요 정책 교육 5) 주요 단체외 정책네트워크 구성

**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전문성 강화와 재정자립성 확보가 시급한 사항임. 이것은 연구원의 재정 역량과 관련된 것으로, 일정 역량을 갖춘 연구위원들을 선발하려면 그에 맞는 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함. 하지만 국고보조금 미지급되는 상황에 의원정당 정책연구소는 재정이 미흡하며 사실상 정책연구 강화의 본연의 목적을 다하기 어려움.
-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정당지지율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당비와 매칭펀드제로 하거나, 비교섭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역교부세를 도입하거나, 연말 선관위 기탁금을 연구소 지정 기탁으로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 <선거 시기>에는 정책공약의 개발, 교육, 발표 및 선거 지원업무를 함.
-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간 '정책과 논점'을 발간하고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며, 당내 조직 및 외부 조직과의 '정책연대' 사업을 진행함. 또한 '정책연구용역', 정책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진보진영과의 정책교류, 정책에 대한 교육 사업도 '정책아카데미' '광역시도당 교육' '새 노동정책교육' 등 수시로 진행함.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정기적 사업>은 주간 '정책과 논점' 발행, '대전, 지방선거 정책공약 수립', '정책 현안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이 있음.
- <부정기적 사업>은 의제 마련을 위한 '의제위원회 운영', '계급계층 의제 확대 회의 운영', 강령제정을 위한 '강령제정위 참여', 주거권 마련을 위한 '주거권위원회 운영',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팀 운영' 등을 진행하였음.

**5. 귀 정책연구소의 2021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한반도평화변영을 위한 보고서, 평화통일포럼 세미나1~4회차
  -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변영 실천과제 연구
  - 남북합의에 기초한 평화군축의 방향과 전망
  - 군비증강의 현황과 민주적 군비통제 방안
  -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 방안
- 청년 - 20대 능력주의 리포트, 20대 남자현상 왜 생겼나?  
능력주의 공정에 대한 담론, 공성성 관련 이슈 등 20대 청년들을 위한 핵심전략연구
- 기후위기- 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의 대전환 연구  
기후에너지정책비전/신재생에너지사업의 문제와 해결방안  
노동자 중심의 기후위기대응/기후위기대응의 전환전 방향과 정치의 역할
- 노동 - 코로나위기에 돌봄 공백 사회적 문제, 이에 따른 돌봄노동자기본법 연구  
진보당이 노동중심 정당으로 기초를 정한 만큼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새로운 노동환경을 적용한 정책개발, 국가비전으로서의 분야별 정책 연구개발
-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공약 연구개발)  
노동분야 - 사회적 재난에 따른 특수고용노동자 소득상실보전,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  
노점상분야 - 생계형 노점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노점상 관련 법률정비  
주거분야 - 주거빈곤 및 자산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  
자영업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 실질적인 구제대책연구  
복지분야 -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으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중요성 부각,  
이에 따른 종합적인 복지정책 연구  
지방재정, 지방자치분야 - 제로페이, 순세계잉여금 해결 및 효율적인 행정,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를 통한 재정칸막이 낮추기, 주민발안권 실질화 등

**6. 귀 정책연구소가 2021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절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의 대표단 중심으로 연구원 이사회를 구성해 당과 연구원이 일체성을 갖도록 하였음. 또한 원장, 부원장, 정책실장 등이 당 대표단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당무위원회와 중앙위, 대의원대회에서 사업보고와 의결을 통해 사업에 대해 당적 결의를 확보함. 특히 연구소 사무실이 중앙당 내에 설치됨으로써 중앙당 각 부서와 일상적인 업무조율이 가능함.
- 제도적으로 당 정책연구소는 정책위를 겸하고 있으며 대표단회의, 당무위, 중앙위, 대의원대회에 원장, 부원장이 참석해 정기 업무보고를 하고, 당 기획조정회의에 정책실장이, 당 직사회회의에 연구원 전원이 참석해 업무를 보고하며 기획 조정을 하고 있음.
- 연구소에서 제출하는 주간 정책과 논점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당의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정책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당 대표단 교육부터 광역시도당으로 체계적으로 전파 활용되고 있음.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전원회의에서 사업 입안- 대표단 보고 및 의결- 당무위원회 보고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걸쳐 전 당적으로 주요 정책을 확산함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 결정 방식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음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당원으로서 당의 정책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기준으로 채용함.  
○ 연구소 재정이 부족하여 한 명의 연구원이 여러 분야의 정책 연구를 해야 하는 제한성이 있음.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

9. 2021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외/상급당부지원금으로 100% 진보당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기타수입이 없습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한 별도 사항은 없습니다.

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진보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진보당의 핵심정책과제 및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 진보정책연구소는 진보당이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켜내야 할 정책을 연구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정책과 의제를 진보당 중앙당과 진보당 소속의원들이 적극 알려내고 실현시켜내야 할 진보당의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진보당 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와 정책의제는 반드시 중앙당의 주요 선거시기에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주요 정책, 공약이 되어왔고, 그렇게 일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11. 2021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단체, 농민단체, 청년단체, 평화통일연구소 등 주요 사회 단체와 정책 교류 진행함.  
당의 주요 정책 개발에서 해당 단체의 요구 사항 및 정책 반영 목적

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여시재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연구주제와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시기별 한국사회의 주요한 의제와 과제를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 및 발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단점으로는 지원금의 한계로 인하여 전문가의 연구인력지원 등 안정적인 연구활동 경제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원외정당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용이 전혀 없기에 더욱 전문적 연구자의 지원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 다음은 서면 인터뷰 질문지와 각 정책연구소의 답변을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한 것이다.

##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정책연구소의 2021년 운영과 활동에 대한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본 서면설문에 응답하신 내용들은 보고서 작성과 정책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연구책임자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성조 (순천대 사회교육과 교수)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선생님께서 소속된 정책연구소는 어디입니까?

- ① 민주연구원
- ② 여의도연구원
- ③ 정의정책연구소
- ④ 국민미래연구원
- ⑤ 열린정책연구원
- ⑥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⑦ 시대전환LAB
- ⑧ **혁신과미래연구원** ✓
- ⑨ 민주평화연구원
- ⑩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⑪ 진보정책연구원
- ⑫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정책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소장
- ② 부소장
- ③ 연구위원
- ④ 기타 ( 선임연구원 ) ✓

※ 다음의 12개 항목에 대하여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정책연구소의 서면 인터뷰 내용은 정책연구소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고서에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게재됩니다.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의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상호보완의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방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정당은 정치행위를 하는 곳이지만, 연구소는 법인으로 존재하면서 정치행위와 정책연구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는 정책연구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정당 내부적으로 정책위 등의 정책부서가 존재하는 경우, 그 역할이 상당수 중복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연구소의 역할이 상당히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정당과의 관계에서 예산과 운영의 독립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정치행위와 정책연구라는 이중적 역할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제도적 또는 현실적 조건으로 예산의 측면에서는 선관위에서 분기별로 보조금배분정당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연구소에 배분 즉시 분배하는 것을 명문화하거나, 보조금을 직접 연구소에 지급하거나, 자체적인 후원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운영의 측면에서는 그 활동의 근거가 정치행위인 정당과 법률행위인 연구소의 명확한 차이를 인지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혁신과미래연구원은 민생당의 싱크탱크로서 민주주의가 계속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기득권 타파에 대한 도전, 민생을 안정시키는 민생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지역·계층·세대·성별 차별 없도록 정책을 개발하여 정책정당으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 정치가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독립성 유지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독립성 유지가 되어야 재정 자립성(자율성)과 연구/전문성 강화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연구소라는 특성상 정당의 정치행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자체적인 역량 강화와 연구 방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독립성 유지가 우선입니다.

**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선거시기에는 각 분야전문가, 중앙당, 지역담당자 등 정책TF팀을 구성합니다. 정책TF에서는 선거지형파악, 지역분석, 정당정책공약 등 선거 전략 위주로 분석합니다. 또한 분석에 있어 필요시 여론조사와 연구용역 사업을 공모하기도 합니다.

비선거 시기에는 이슈 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 전문가 주제발표를 매달 간담회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발제도서를 선정하여 연구원 내부 세미나(직원)로 토론의 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기적 사업으로는 전문가 주제발표 간담회가 진행되며, 민생당(중앙당)과 협력하여 토론회를 기획하기도 하며, 제3지대 정치 지대 확장을 위해 연구 중에 있었습니다.

비정기적 사업으로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보통 선거기간 동안 실시됩니다. 또한 2021년도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사업자체가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포스트 코로나 관련 사항 대비 연구, 4.7 보권선거 대비하여 연구원 자체 공약을 개발하고 이를 당에 전달하여 당의 정책 공약 개발에 협조하고자 했습니다.



**5. 귀 정책연구소의 2021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10대 핵심공약 개발 및 정세분석, 여론조사 등 원외정당으로서 전 국민에게 주목받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생 중심의 정책을 제안하여 민생당의 핵심 가치와 방향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매달 2-4회 진행하여 연구원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및 중장기적 민생당의 핵심 가치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6. 귀 정책연구소가 2021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절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미래연구소는 민생당 산하 정책연구원으로서 중앙당 당대표가 당연직 이사장이고 연구원 정관에 따라 연구원 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됩니다. 중앙당과 의견조율 및 협력은 이사장과 원장의 조율을 통해 진행되며, 매년 초 연구원 사업계획안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함으로써 중앙당과 연구원의 사업 및 정책 방향성 등을 조율합니다. 또한, 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중앙당의 필요에 따라 중앙당 정책실 등에 파견을 통해 정책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매년 초 연구원 각 부서의 사업계획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한해의 사업 방향성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세부적인 사안은 정관 및 세칙에 근거하여 각 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관에서 사업 진행 등 의사결정에 있어 각 부서장을 통해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연구원 사업에 있어 각 부서의 의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회의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민생당은 원외정당으로서 2024년 총선에서 원내정당 복귀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어 다음 총선까지 연구원 운영에 있어 최소 인원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외정당도 적정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9. 2021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소의 수입은 대부분 경상보조금 즉 정당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기타수입 또한 일부 은행이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방식 중 대부분 사업이 “정책개발비”계정 과목으로 분류 되는데 정책연구소의 연구직의 인건비 또한 정책개발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중앙선관위회계안내)

연구직의 인건비는 정책개발비 계정과목이 아니라 “인건비계정”으로 분류를 해야 실제 연구 사업 지출 금액 부분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분류 중 전년도이월금은 있는데 선거가 있을 시 당해연도 회계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연도이월금” 구분이 필요합니다.

**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당의 대표는 연구소의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연구원 내부의 회의 또는 이사회 등을 통해 전달하거나 연구원 자체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당의 당무회의 등에 안건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과미래연구원은 이사장 주재 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1. 2021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지침 모임인원 제한에 따라 인해 타 정책연구소와 정책개발·네트워크 교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여시재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의 정책연구원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민첩하게 국민들의 정치요구를 현실로 느낄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연구 활동을 폭넓게 기획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원외 정당의 정책연구소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 직원으로 모두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시 부분적 한계가 있습니다.

※ 다음은 서면 인터뷰 질문지와 각 정책연구소의 답변을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한 것이다.

##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정책연구소의 2021년 운영과 활동에 대한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202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본 서면설문에 응답하신 내용들은 보고서 작성과 정책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연구책임자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성조 (순천대 사회교육과 교수)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선생님께서 소속된 정책연구소는 어디입니까?

- ① 민주연구원
- ② 여의도연구원
- ③ 정의정책연구소
- ④ 국민미래연구원
- ⑤ 열린정책연구원
- ⑥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⑦ **시대전환LAB** ✓
- ⑧ 혁신과미래연구원
- ⑨ 민주평화연구원
- ⑩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⑪ 진보정책연구원
- ⑫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정책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소장
- ② 부소장
- ③ 연구위원
- ④ 기타 ( 전 부소장, 현 최고위원 ) ✓

※ 다음의 12개 항목에 대하여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정책연구소의 서면 인터뷰 내용은 정책연구소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고서에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게재됩니다.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수정당일수록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력풀이 제한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있으면 그 부담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인 정책개발도 하지만 자원이 적기 때문에 필요에 따른 정책개발을 합니다. 그렇기에 선거 공약 등 정책결정까지 이어지는 건이 많습니다. 정책연구소가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의석수에 기반한 정당보조금 배분이 아닌, 소수정당이 좀 더 배분을 받을 수 있는 배분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제도적 또는 현실적 조건으로 예산의 측면에서는 선관위에서 분기별로 보조금배분정당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연구소에 배분 즉시 분배하는 것을 명문화하거나, 보조금을 직접 연구소에 지급하거나, 자체적인 후원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운영의 측면에서는 그 활동의 근거가 정치행위인 정당과 법률행위인 연구소의 명확한 차이를 인지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 4일제와 같이 극히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다가와야 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재정 배분과 같이 국가균형발전과 교육 부문 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를 정책으로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대부분 선거가 되면 공약으로 조정·반영됩니다.

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규모 자체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연구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현행 정당보조금으로 이를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대한민국이 다당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면 소수 의석 원내정당에게 정당보조금 배분 몫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두 시기 모두 선거를 위한 공약-정책개발을 합니다. 차이점은 비선거 시기는 여러 아이템을 개발하고 다면적으로 아젠다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고 한다면, 선거 시기는 특정 아젠다가 발표되거나 토론회가 이어질 시 이를 보조·확산하기 위한 자료를 생성합니다.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구소의 재정 규모상 전술한 내용을 위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간혹 포럼이나 토론회를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5. 귀 정책연구소의 2021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4일제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데이터와 대안을 마련해 중앙당 및 원내대표와 협의해 진행했습니다.

**6. 귀 정책연구소가 2021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절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중앙당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중앙대표당원 의결을 받아 진행합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일상적으로 시의성-아젠다 중심의 정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정책연구소의 자율성은 높습니다. 성과물은 선거 공약, 정책에 관한 기자회견, 법안 발의, 관련 직능단체 간담회 등으로 진행됩니다.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시 시의성-아젠다 중심으로 소규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정책을 정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성과는 주로 정책 자료 집인데, 이는 선거공약, 기자회견, 토론회 자료 등으로 확산됩니다. 확산은 언론기사 등 공보 활동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내부환경 변화보다는, 정당보조금 개편 등 외부환경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소장 한 명과 부소장 두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재정입니다.

9. 2021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지원금이 의석수 기준이 아닌, 적은 의석을 가진 정당을 배려하는 배분 방식이 필요합니다.

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정기적·비정기적 회의 등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11. 2021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여시재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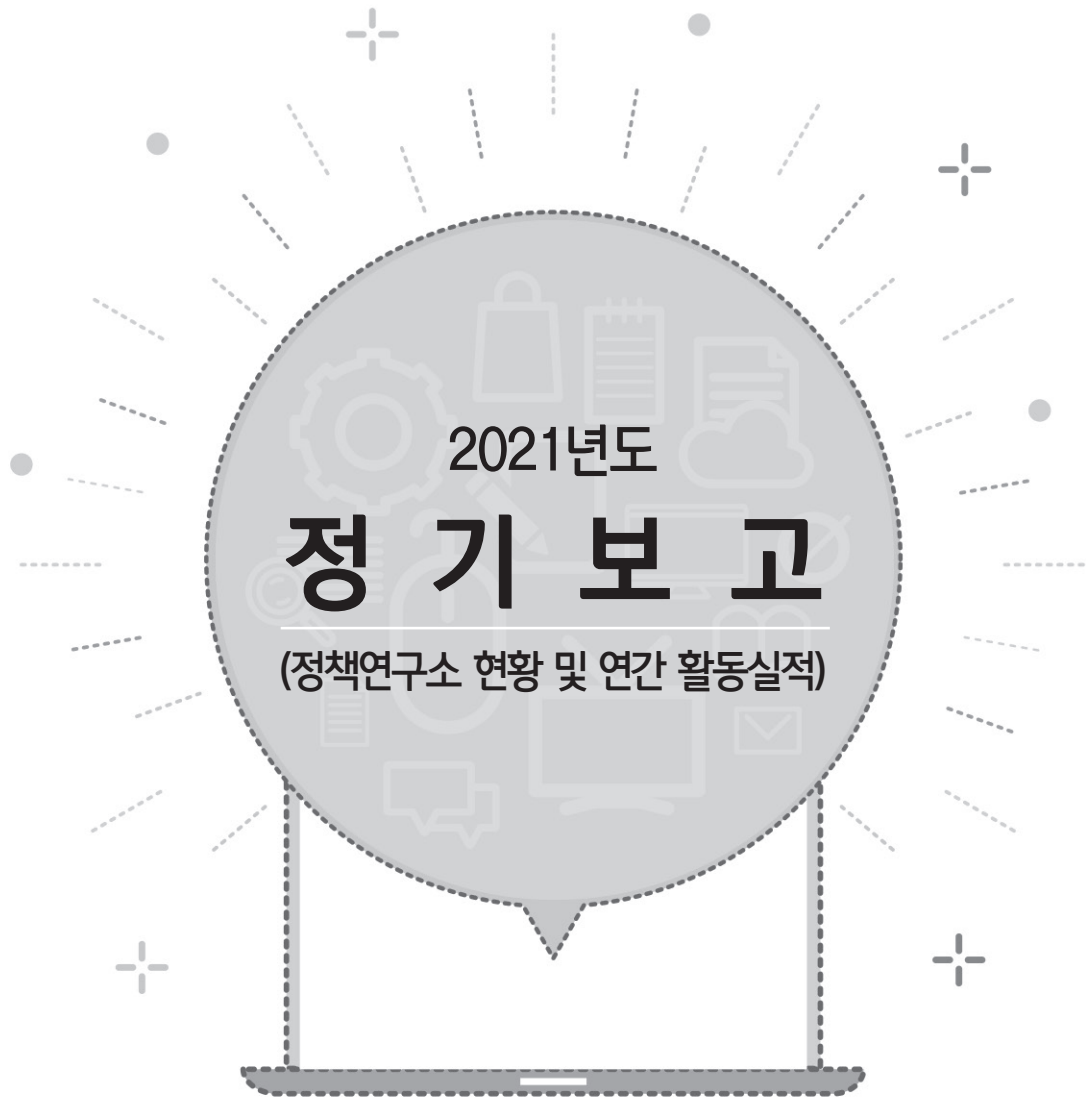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연구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입니다. 국책이나 민간의 경우 재원 출연자의 특정한 의도가 담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결과물 도출까지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이정진·임채진. 2015. “정당 정책연구소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072호.





2021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



# 민주연구원 연간활동실적

## 1. 일반현황

###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중앙당사 8층, 10층			√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14	7년 이상 :18	자체고용:50	
석사급:6	2년 이상~7년 미만 :1	외부파견:0	
기 타:	2년 미만 :1		
합 계:20	합 계 : 20	합 계:50	

- 「주」 1.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2. 경력은 정당정책연구소,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8,817,952,273	2,562,858	2,267,020,753	11,087,535,884	6,943,125,671	4,144,410,213	

- 「주」 1. 활동경비 관련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 하단에 작성합니다.  
 2.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기간 : 2021. 1. 1.~12. 31.)

## 2. 주요 활동 실적

### 가. 연구·개발실적(101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20.12.1.~3.7.	보건복지 외	포스트 코로나 신복지체제	자체, 외부전문가	230p	별첨1
1.1.~1.14.	교육(교육위)	대선 핵심아젠다 휴머노믹스	자체	13p	별첨2
1.1.~2.23.	교육(교육위)	코로나궤 교육공백 복구 로드맵	자체	11p	별첨3
1.1.~2.24.	국토위 외 종합	부산시 보궐선거 핵심공약(안)	공동	20p	별첨4
1.1.~1.26.	교육(교육위)	대선 핵심공약 아젠다 평생학습사회	자체	15p	별첨5
1.1.~1.30.	산자위	코로나이익공유제 추진방안 검토	자체	10p	별첨6
1.1~4.6	정무	서울·부산 보궐선거 선거전략지도	공동	파일	별첨7
1.2.~3.5.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라인 쇼핑 글로벌화 방안	자체	41p	별첨8
1.2.~3.15.	전 상임위	예산 메커니즘과 프로세스 개선방안	공동	54p	별첨9
1.3.~1.30.	정치행정(정무위)	대선 100대 어젠더	자체	10p	별첨10
1.3.~3.30.	사법(법사위)	권력기관개혁 시즌 2	자체	57p	별첨11
1.3.~7.30.	정치행정(정무위)	대선핵심공약-정치행정	자체	20p	별첨12
1.4.~2.3.	기획재정	확장적 재정정책과 국가부채	자체	20p	별첨13
1.5.~2.8.	교육(교육위)	코로나 미등교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 방안	자체	10p	별첨14
1.6.~1.26.	경제, 사회	코로나 불평등 해소의 정책방향	문헌연구	9p	별첨15
1.12.~1.27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협력이익공유제 확산방안	공동	6p	별첨16
2.1.~2.3.	교육(교육위)	학생성공센터 제안	자체	4p	별첨17
2.1.~2.28.	정무위	상생협력기금 조성방안 검토	자체	10p	별첨18
2.3.~3.30.	정치행정(정무위)	행정수도이전방안	자체	6p	별첨19
2.8.~2.25.	교육(교육위)	대선핵심공약 2030 뉴트렌드 공약	자체	3p	별첨20
2.8.~5.25.	교육(교육위)	대선핵심공약 2030 뉴트렌드	자체	31p	별첨21
2.8.~2.25.	교육(교육위)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교육격차	자체	5p	별첨22
2.15~3.15	정무	유권자 정치의식조사1 (1분기 정기여론조사)	공동	132p	별첨23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3.1.~4.13.	국토위 외 종합	대선핵심공약 선도지역발전전략	공동	65p	별첨24
3.3.~3.30.	정치행정(정무위)	뉴트렌드	자체	6p	별첨25
3.5.~4.5.	전 상임위	보수진보정권 경제성과 분석	공동	25p	별첨26
3.5.~4.30.	교육(교육위)	대선 핵심공약 신경제사회	자체	69p	별첨27
3.5.~4.30.	교육(교육위)	대선 핵심공약 지역혁신 발전전략	자체	68p	별첨28
3.8~3.15	정무	4·7 보궐선거 여론조사(서울)	공동	94p	별첨29
3.8~3.15	정무	4·7 보궐선거 여론조사(부산)	공동	102p	별첨30
3.16.~6.17.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자체	12p	별첨31
4.1.~4.30.	기재위	부동산 실수요자 세제지원 강화	자체	10p	별첨32
4.1.~5.31.	금융	가상자산 제도화	자체	30p	별첨33
4.1.~8.31.	기재위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재정전략과 주요과제	외부전문가	106p	별첨34
4.7.~4.22.	정치	4.7. 보궐선거 평가와 과제	전문가 자문	21p	별첨35
4.10.~4.28.	교육(교육위)	보선이후 정책변화 방향	자체	34p	별첨36
4.10.~6.11.	교육(교육위)	이슈대응 차별화 정책	자체	74p	별첨37
4.15~5.15	정무	서울시 보궐선거 사후 여론조사	공동	140p	별첨38
4.19.~4.26.	사회, 정치	백신의 정치	문헌연구	3p	별첨39
5.1.~5.20.	산업자원	그린전환	자체	30p	별첨40
5.1.~5.21.	정치	3.9. 대선의 성격과 전망	문헌연구	4p	별첨41
5.1.~5.30.	기재위	미국 주요 경제정책 분석	자체	5p	별첨42
5.1.~8.1.	전 상임위	충청남도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자체	13p	별첨43
5.1.~8.1.	전 상임위	대전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자체	12p	별첨44
5.1~8.1.	전 상임위	세종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자체	11p	별첨45
5.2.~6.29.	보건복지	전 생애주기 생활소득보장	자체	10p	별첨46
5.15.~6.7.	국토위	주택가격안정과 함께, 주거복지에 집중	자체	4p	별첨47
6.15~7.15	정무	유권자 정치의식조사2(2분기 정기여론조사)	공동	165p	별첨48
5.20.~6.20.	정치행정(정무위)	보궐선거백서	자체	20p	별첨49
5.20.~6.2.	환경노동 외	디지털 격차해소	자체	7p	별첨50
5.21.~5.26.	사회, 정치	K-비전	문헌연구	6p	별첨51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6.1.~6.23.	정치	이준석 현상과 뉴 트렌드	문헌연구	23p	별첨52
6.1.~6.28.	정치, 사회	대선 핵심공약 액션플랜	문헌연구	5p	별첨53
6.1.~6.30.	정무위	규제개혁방안 검토	자체	5p	별첨54
6.3.~7.27.	정치행정(정무위)	정부조직 개편방안	자체	20p	별첨55
6.8.~6.16.	교육(교육위)	이준석과 공정하다는 착각	자체	7p	별첨56
6.10.~6.20.	산업자원	어젠다 2022	자체	25p	별첨57
6.21.~8.6	교육(교육위)	대선 지역공약	자체	112p	별첨58
7.1.~7.26.	교육(교육위)	핵심공약 보고서 공정사다리복원	자체	7p	별첨59
7.1.~7.30.	기재위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내용 및 전망	자체	5p	별첨60
7.1.~9.5.	사회 등	핵심공약 프리젠테이션	문헌연구	9p	별첨61
7.1.~11.21.	교육(교육위)	소확행 초등학생 동시 3시하교제	자체	8p	별첨62
7.1.~7.26.	교육(교육위)	대선 이슈파이팅 핵심공약 아이템	자체	54p	별첨63
7.23~8.23	정무	부동산 정책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공동	100p	별첨64
8.1.~8.9.	교육(교육위)	컨설팅페이퍼 대학등록금 정책	자체	2p	별첨65
8.1.~9.8.	교육(교육위)	테마형 공약 공정	자체	13p	별첨66
8.1.~9.8.	교육(교육위)	테마형 공약 교육	자체	58p	별첨67
8.5.~8.16.	산업자원	탈탄소 전략	자체	10p	별첨68
8.9.~9.13.	교육(교육위)	핵심공약 취업보장 기업가형 대학	자체	22p	별첨69
8.17.~10.28.	연기금(복지위)	출산·양육 연금복지의 확대 공약	자체	8p	별첨70
8.17.~12.16.	연기금(복지위)	연금개혁	자체	10p	별첨71
8.20.~11.12.	환경노동 외	일자리공약	자체(공동)	75p	별첨72
8.23.~8.27.	교육(교육위)	핵심공약 대학무상교육 정책	자체	6p	별첨73
8.27.~10.7.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자체	4p	별첨74
9.1.~10.1.	연기금(복지위)	성장전략의 담론	자체	4p	별첨75
9.6~10.5	정무	정책 수요 조사	공동	139p	별첨76
9.13~10.15	정무	유권자 지형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공동	187p	별첨77
9.28~10.8	정무	전세자금대출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공동	44p	별첨78
9.29.~10.28.	법제사법	차별금지법 추진현황 및 방향	자체	6p	별첨79
10.1.~10.13.	교육(교육위)	굿바이 학생부종합전형	자체	10p	별첨80
10.1.~10.20.	교육(교육위)	평생학습사회 추가공약	자체	4p	별첨81
10.1.~10.20.	정치행정(정무위)	정권심판론 대응 방안	자체	6p	별첨82
10.6~11.11.	전 상임위	일자리 창출 정책 방안	공동	77p	별첨83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10.10~12.10	정무	대선 전략과 정책 수립을 위한 웹조사	공동	569p	별첨84
10.13.~10.15.	전 상임위	재추진 필요 국정과제 검토	공동	26p	별첨85
10.24.~11.23.	환경노동	주4일제 로드맵	자체	5p	별첨86
11.1~11.30	정무	가상 자산 제도화 관련 여론조사	공동	40p	별첨87
11.1~11.30	정무	여성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공동	59p	별첨88
11.1~11.30	정무	대선 전략 전화 조사(2회)	공동	143p	별첨89
11.1.~12.1.	연기금(복지위)	디지털전환경제, 주부창업시대	자체	3p	별첨90
11.1.~12.9.	연기금(복지위)	저출산·고령화 대책	자체	10p	별첨91
11.1.~12.10.	교육(교육위)	디지털전환교육 공약	자체	26p	별첨92
11.1~12.31	정무	정책 전략 정례조사(11회)	공동	340p	별첨93
12.1.~12.15.	교육(교육위)	연령별 통합 유아학교 도입	자체	3p	별첨94
12.1.~12.16.	정치	오리지널 이재명을 찾아서	문헌연구	4p	별첨95
12.1.~12.28.	연기금(복지위)	연금 노후연금자금 대부제도(연금실버론) 확대 정책	자체	2p	별첨96
12.1.~12.28.	연기금(복지위)	종교인 공적연금제도 개선 대책	자체	2p	별첨97
12.1.~12.28.	연기금(복지위)	중년1인가구 생애전환설계 지원콘텐츠 강화 대책	자체	2p	별첨98
12.10~12.31	정무	제주, 호남 고속철도사업 여론조사	공동	32p	별첨99
12.14.	교육(교육위)	정시 확대 검토	자체	4p	별첨 100
12.15.~12.30.	주거 등	서울 핵심공약	문헌연구	6p	별첨 101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101부.

### 나. 토론회 등 개최(52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웹세미나	1.15.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서울시정, 10년의 혁명	서울시정 10년 평가, 일자리·주거·코로나 대응 및 서울 미래전략	화상회의
2021전국순회 정책엑스포(부산)	1.21.	부산시당	부산 신공항 지역경제파급효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기획	
토론회	1.21.	부산시당 대회의실	부산의 비전을 제안하다!(1)	부산 신항만과 신공항의 미래	유튜브+화상회의
토론회	1.27.	서울시당 대회의실	서울의 비전을 제안하다!	서울지역 현안·의제 및 비전·정책 제안	유튜브+화상회의
부산시장 보궐선거 방송토론회	2.9.~2.10	부산시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 및 방송기획	방송기획	
토론회	2.18.	부산시당 대회의실	부산의 비전을 제안하다!(2)	부산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유튜브+화상회의

개최명	일시 (기간)	장소	주제	주요내용	비고
지역중심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3.24.	민주연구원	지역중심 경제생태계 조성 정책 방향 모색	지역특화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 되는 지역순환경제생태계 구축 방향 모색	공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간담회	4.2.	민주연구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전문가 간담회	4.22.	민주연구원 회의실	4.7. 보궐선거 평가와 과제	4.7. 보선평가와 향후 혁신방향	비공개
토론회	5.24.	전북도당 대회의실	전북의 비전을 제안하다!	전북지역 비전-정책 제안(교육, 주거, 의 료, 복지, 문화, 관광, 교통, 도시분야 등)	유튜브+화 상회의
공동토론회	5.28.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공정사회를 위한 새로운 복지	주거, 복지, 일자리 관련 정책토론	비공개
토론회	6.04.	강원도당 대회의실	강원의 비전을 제안하다!	강원지역 비전-정책 제안(교육, 주거, 의 료, 복지, 문화, 관광, 교통, 도시분야 등)	유튜브+화 상회의
토론회	6.09.	인천시당 대회의실	인천의 비전을 제안하다!	인천지역 비전-정책 제안(교육, 주거, 의 료, 복지, 문화, 관광, 교통, 도시분야 등)	유튜브+화 상회의
토론회	6.9.	인천 한빛빌딩	정책엑스포	대선준비를 위한 인천지역 공약개발	비공개
토론회	6.10.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의 비전을 제안하다!	대구지역 비전-정책 제안(교육, 주거, 의 료, 복지, 문화, 관광, 교통, 도시분야 등)	유튜브+화 상회의
주거권보장 간담회	6.10.~6.1 7.	국회본관 국토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	주거복지	공개
정책엑스포	6.11.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충남의 비전을 제안	충남의 미래비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청취	공개
토론회	6.11.	충남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충남의 비전을 제안하다!	충남지역 비전-정책 제안(교육, 주거, 의 료, 복지, 문화, 관광, 교통, 도시분야 등)	유튜브+화 상회의
간담회	6.14.	내부	이준석 현상	좌동	비공개
토론회	6.15.	충북 도시재생허브센터	충북의 비전을 제안하다!	충북지역 비전-정책 제안(교육, 주거, 의 료, 복지, 문화, 관광, 교통, 도시분야 등)	유튜브+화 상회의
토론회	6.16.	울산시당 대회의실	울산의 비전을 제안하다!	울산지역 비전-정책 제안(교육, 주거, 의 료, 복지, 문화, 관광, 교통, 도시분야 등)	유튜브+화 상회의
토론회	6.18.	세종시당 대회의실	세종의 비전을 제안하다!	세종지역 비전-정책 제안(교육, 주거, 의 료, 복지, 문화, 관광, 교통, 도시분야 등)	유튜브+화 상회의
간담회	6.18.	내부	Occupy 2030 간담회	좌동	비공개
정책엑스포	6.18.	세종시당	세종의 비전을 제안	세종의 미래비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청취	공개
정책엑스포	6.22.	대전시당	대전의 비전을 제안	대전의 미래비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청취	공개
토론회	6.22.	대전시당 대회의실	대전의 비전을 제안하다!	대전지역 비전-정책 제안(교육, 주거, 의 료, 복지, 문화, 관광, 교통, 도시분야 등)	유튜브+화 상회의
토론회	6.23.	경북 안동시청	경북의 비전을 제안하다!	경북지역 비전-정책 제안(교육, 주거, 의 료, 복지, 문화, 관광, 교통, 도시분야 등)	유튜브+화 상회의
토론회	6.24.	경남도당 대회의실	경남의 비전을 제안하다!	경남지역 비전-정책 제안(교육, 주거, 의 료, 복지, 문화, 관광, 교통, 도시분야 등)	유튜브+화 상회의



개최명	일시 (기간)	장소	주제	주요내용	비고
토론회	6.25.	경기도당 대회의실	경기의 비전을 제안하다!	경기지역 비전-정책 제안(교육, 주거, 의료, 복지, 문화, 관광, 교통, 도시분야 등)	유투브+화상회의
토론회	6.29.	제주도당 대회의실	제주의 비전을 제안하다!	제주지역 비전-정책 제안(교육, 주거, 의료, 복지, 문화, 관광, 교통, 도시분야 등)	유투브+화상회의
간담회	7.28.	내부	대학등록금 정책	좌동	비공개
간담회	8.18.	내부	산업-고용-교육 대신 핵심쟁점	좌동	비공개
정책간담회	8.19.	그랑빌딩서울 24층 회의실	SK경영경제연구소-민주연구원 정책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의 중심(ESG), 수소사업, 배터리사업, RE100	비공개
정책간담회	8.25.	위드스페이스 4층	LG경영연구원-민주연구원 정책간담회	경제현안 과제, 전기차 시장(배터리)의 성장과 LG의 역할	비공개
정책간담회	8.27.	삼성생명서초타워 31층 대회의실	삼성경제연구소-민주연구원 정책간담회	미래주력산업 육성((ICT, 바이오 등)	비공개
수출기업 및 이노비즈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9.2.	민주연구원	수출기업 및 이노비즈 활성화 정책 방향 모색	수출기업, 이노비즈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공개
간담회	9.9.	내부	대학교육 혁신	좌동	비공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9.13.	민주연구원	혁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혁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공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9.14.	민주연구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방안 모색	코트라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공개
정책간담회	9.28.	현대기아차빌딩 1층 회의실	HMG경영연구원-민주연구원 정책간담회	현대차그룹 7대 사업과 미래기술연구	비공개
간담회	9.30.	내부	대학-지역혁신사업	좌동	비공개
간담회	9.30.	내부	대선 주요 아젠다	좌동	비공개
토론회	10.5.	민주당사	전세대출 보완대책 마련	전세대출에 대한 대책 현황 및 대책	
간담회	10.8.	내부	전문대학-지역산업	좌동	비공개
간담회	10.13.	내부	SW·AI교육	좌동	비공개
간담회	10.19.	내부	인적자원개발 정책	좌동	비공개
간담회	10.19.	내부	민주시민교육 입법	좌동	비공개
간담회	11.1.	내부	평생학습	좌동	비공개
토론회	11.3.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가상자산과세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등	
토론회	11.3.	국회 의원회관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문제점 고찰 및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	11.9.	내부	고등직업교육	좌동	비공개
간담회	11.12.	내부	평생학습 아젠다	좌동	비공개

### 다. 교육·연수활동(5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5.11.~6.03.	-중앙당사 5층 화상회의실 -위드스페이스(서대문 구)	-한국경제, 한반도정책, 균형발전, 중앙·지방 예산 -현장워크숍 정책연구과제 발표	통신(화상)교육 집합교육 결합
정예당원교육	3.11	민주당 서울시당	선거전략지도 활용	
정예당원교육	3.12	민주당 부산시당	선거전략지도 활용	
충북 정치아카데미	11.18.	충북도당	자치분권과 충북공약 기획 및 연구	현지교육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11.16.~12.16	-중앙당사 5층 화상회의실 -위드스페이스(서대문 구)	-과학기술, 한반도정책, 지역혁신, 정책예산 -현장워크숍 정책연구과제 발표	통신(화상)교육 집합교육 결합

### 라. 정책홍보(9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1.1.~1.20.	국회방송	당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	연설문 내용작성 지원	
1.27.~현재	유튜브 (민주ON)	서울지역 현안 의제 및 비전·정책 발표 영상 온라인 공유	바이오헬스클러스터,상생방역 공공의료, 육아, 자영업, 민주주의, 디지털뉴딜, 탄소제로, 보육, 반려동물 등	현장 및 유튜브
2.18.~현재	유튜브 (민주ON)	부산지역 현안 의제 및 비전·정책 토론회 영상 온라인 공유	부산 신항만과 신공항의 미래	1차
2.18.~현재	유튜브 (민주ON)	부산지역 현안 의제 및 비전·정책 토론회 영상 온라인 공유	부산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2차
4.26.	방송	전당대회 합동토론회(당대표후보)	MBC 100분토론	
6.3.~현재	유튜브(민주ON) 당원교육 플랫폼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 카데미 강의 영상 연구원 유튜브 공유 및 당원 교육 플랫폼 탑재	한국경제, 균형발전, 중앙·지방 예산 등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10.5.	유튜브	전세대출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전세자금 대출규제의 현황과 과제	
11.16.~현재	유튜브(민주ON) 당원교육 플랫폼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 카데미 강의 영상 연구원 유튜브 공유 및 당원 교육 플랫폼 탑재	과학기술, 한반도정책, 지역혁신, 정 책예산 등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11.23.	유튜브	메타버스 토론회	메타버스 산업전략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	-----	----------	--------------------------	--

###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84건)

발간일자	종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21.	토론회자료집	부산의 비전을 제안하다!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1.27.	토론회자료집	서울의 비전을 제안하다!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2.18.	토론회자료집	부산의 비전을 제안하다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3.04.	결과 보고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부산 결과보고서	자체발간	100부 / 최고위 보고 시도당 배포 및 후보자 제공	
3.04.	결과 보고서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서울 결과보고서	자체발간	100부 / 최고위 보고 시도당 배포 및 후보자 제공	
3.5.	연구논문	포스트 코로나 신복지체제	도서출판	400부/국회 및 시도당 배포	공개
3.17.	연구논문	[정책브리핑] 폭넓고 촘촘한 일자리 지원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자체발간	410부/의원 정책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	
3.26.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1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4.2.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2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4.9.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3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4.19.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4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4.26.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5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5.3.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6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5.10.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7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5.17.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8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5.24.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9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5.24.	토론회 자료집	전북의 비전을 제안하다!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5.31.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10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6.4.	토론회자료집	강원의 비전을 제안하다!	자체발간	50부 / 현장배포	
6.7.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11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6.9.	토론회자료집	인천의 비전을 제안하다!	자체발간	80부 / 현장배포	
6.10.	토론회자료집	대구의 비전을 제안하다!	자체발간	50부 / 현장배포	
6.11.	토론회자료집	충남의 비전을 제안하다!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6.14.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12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6.15.	토론회자료집	충북의 비전을 제안하다!	자체발간	50부 / 현장배포	
6.16.	토론회자료집	울산의 비전을 제안하다!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6.16.	연구논문	미취업 청년의 특징 분석과 맞춤형 청년 고용정책 제안	자체발간	410부/의원 정책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	
6.18.	토론회자료집	세종의 비전을 제안하다!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6.21.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13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6.22.	토론회자료집	대전의 비전을 제안하다!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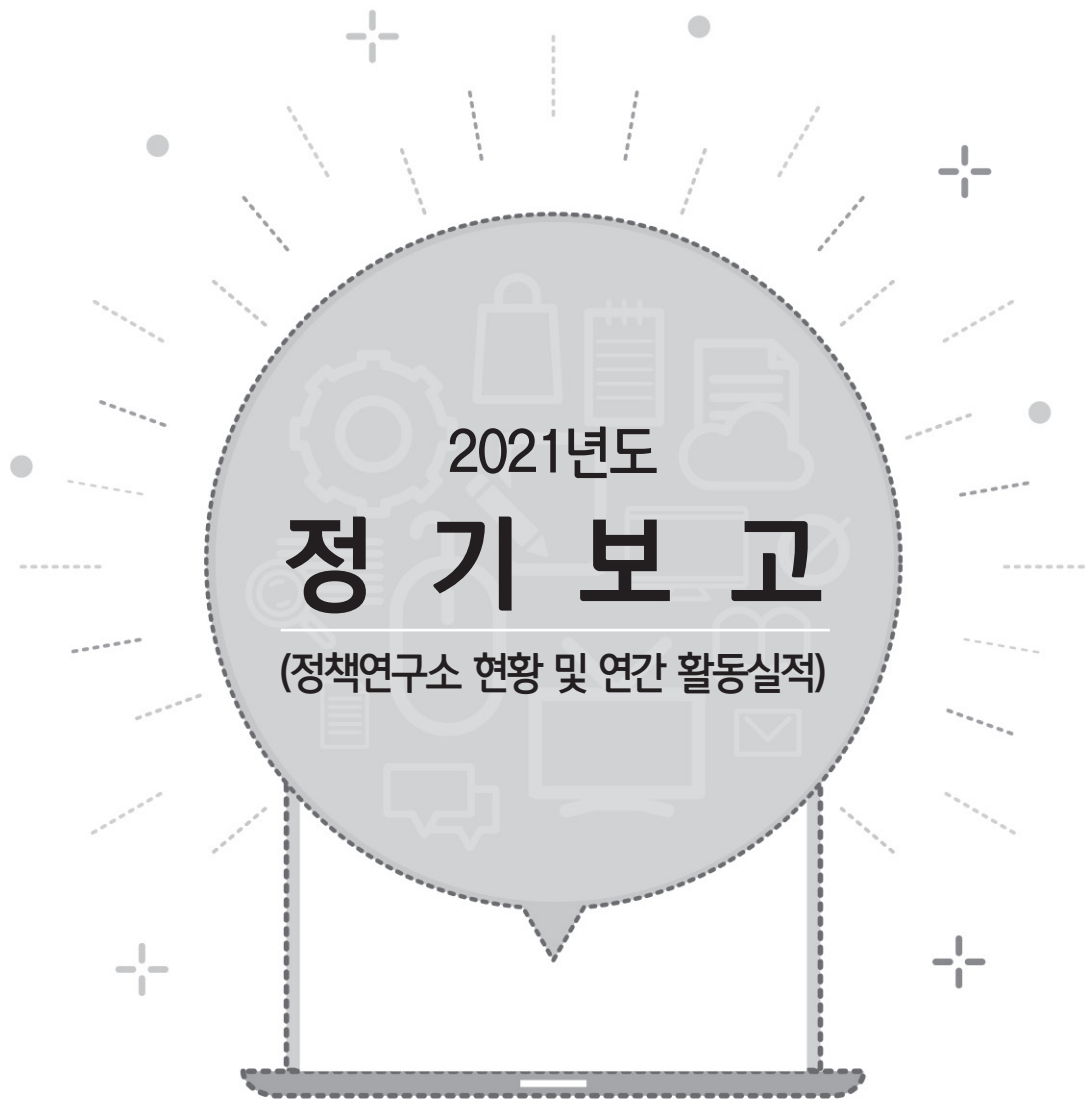
6.23.	토론회자료집	경북의 비전을 제안하다!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6.24.	토론회자료집	경남의 비전을 제안하다!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6.25.	토론회자료집	경기의 비전을 제안하다!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6.28.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14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6.29.	토론회자료집	제주의 비전을 제안하다!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7.6.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15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7.12.	보고서	현안과 이슈 1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7.13.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16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7.16.	연구논문 모음집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자체발간	100부 / 최고위 보고 시도당 및 수강생 배포	
7.19.	보고서	현안과 이슈 2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7.20.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17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7.27.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18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7.30.	보고서	현안과 이슈 3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8.3.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19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8.9.	보고서	현안과 이슈 4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8.15.	보고서	현안과 이슈 5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8.17.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20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8.22.	보고서	현안과 이슈 6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8.23.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21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8.29.	보고서	현안과 이슈 7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8.31.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22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9.5.	보고서	현안과 이슈 8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9.7.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23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9.12.	보고서	현안과 이슈 9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9.14.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24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9.26.	보고서	현안과 이슈 10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9.28.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25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0.3.	보고서	현안과 이슈 11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10.5.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26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0.9.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31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0.10.	보고서	현안과 이슈 12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10.12.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27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0.16.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32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0.17.	보고서	현안과 이슈 13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10.19.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28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0.24.	보고서	현안과 이슈 14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10.26.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29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0.31.	보고서	현안과 이슈 15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11.2.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30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1.3.	토론회자료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체발간	100~150부/배포	
11.7.	보고서	현안과 이슈 16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11.14.	보고서	현안과 이슈 17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11.22.	보고서	현안과 이슈 18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11.23.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33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1.29.	보고서	현안과 이슈 19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11.30.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34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2.5.	보고서	현안과 이슈 20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12.6.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35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2.13.	보고서	현안과 이슈 21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12.14.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36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2.20.	보고서	현안과 이슈 22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12.21.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37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2.24.	보고서	현안과 이슈 23호	자체발간	내부 연구자료로 활용
12.28.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38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 바. 그 밖의 주요활동(47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20.12.~	민주연구원	대선공약 개발 및 조정·관리	2022 대선 핵심공약 및 지역공약 개발, 대선 선대위 정책본부 기획전략 활동	
1.4.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서울비전정책토론회TF 5차 회의	서울비전정책토론회 준비사항 점검	민주연구원
1.5.	줌 화상회의	더K 서울선거기획단 회의	서울비전정책토론회 행사명, 슬로건 등 확정 논의	민주연구원 정책분과
1.7.	줌 화상회의	더K 서울선거기획단 정책분과 7차 회의	서울 정책엑스포 관련 정책 의제 발굴 등 실무점검	민주연구원 정책분과
1.11.	민주연구원 10층 소회의실	서울비전정책토론회TF 1차 실무 점검회의	서울 정책엑스포 관련 업무분장 및 리허설 일정 등 공유	민주연구원 정책분과
1.14.	줌 화상회의	더K 서울선거기획단 정책분과 8차 회의	서울 정책엑스포 관련 정책 의제 발굴 등 실무점검	민주연구원 정책분과
1.21.	부산시당 대회의실	2021 정책엑스포(부산) 지원	부산 정책엑스포 현장점검 및 실무지원	민주연구원 정책분과
1.25.	중앙당 5층 화상회의실	더K 서울선거기획단 정책분과 9차 회의	서울 정책엑스포 관련 정책제안 영상점검 및 평가	민주연구원 정책분과
1.26.	서울시당 위원장실	서울비전정책토론회TF 2차 실무 점검회의	서울 정책엑스포 관련 업무분장 점검 및 현장 리허설 진행	민주연구원 정책분과
1.27.	서울시당 대회의실	2021 정책엑스포(서울) 지원	서울 정책엑스포 현장점검 및 실무지원	민주연구원 정책분과
1.28.	줌 화상회의	더K 서울선거기획단 정책분과 10차 회의	서울 정책엑스포 경과보고 및 결과보고서 관련 기획안 마련	민주연구원 정책분과
2.18.	부산시당 대회의실	2021 정책엑스포(부산) 지원	부산 정책엑스포 현장점검 및 실무지원	민주연구원 정책분과
2.19.	민주연구원 10층 소회의실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1차 기획회의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청년 참여 및 프로그램 협력 방안	민주연구원 매칭팀
3.~6.	인천시당	지역핵심공약 개발	인천시 지역공약	
3.19.	민주연구원 10층 소회의실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2차 기획회의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청년 참여 및 프로그램 협력 방안	민주연구원 매칭팀
3.30.	지방세연구원	재정분권 간담회	재정분권 정책과제도출	
4.1.	민주연구원	재정분권 간담회	재정분권 정책과제도출	
4.14.	줌 화상회의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수강생 OT	수강방법,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작성 및 수강생 평가 등 안내	민주연구원
4.15.	중앙당 5층 화상회의실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점검회의(1차)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화상강의 시연회의 및 점검회의	민주연구원 수상협동조합
4.15.	민주연구원	자치분권 간담회	자치협치 정책과제도출	

4.20.	중앙당 5층 화상회의실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점검회의(2차)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화상강의 시연회의 및 점검회의	민주연구원 수상협동조합
4.21.	대전MBC	토론회 준비	당대표 후보 초청토론회	
4.26.	위드스페이스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현장워크숍 점검회의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현장워크숍 시연회 및 점검회의	민주연구원 매칭협
4.	중앙당	전당대회 파견업무	전당대회 방송토론편과 파견	
5.14.	서울	경기도의회 토론회 발제	ESG 정책동향 발제	
5.24.	전북도당	정책엑스포 전북	전북 지역공약 개발	
5.	민주연구원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보고서 평가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연구과제 보고서 심사	
6.4.	강원도당 대회의실	2021 정책엑스포 in 강원 지원	강원 정책엑스포 현장점검 및 실무지원	민주연구원 강원도당
6.9.	인천시당 대회의실	2021 정책엑스포 in 인천 지원	인천 정책엑스포 현장점검 및 실무지원	민주연구원 인천시당
6.10.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21 정책엑스포 in 대구 지원	대구 정책엑스포 현장점검 및 실무지원	민주연구원 대구시당
6.11.	충남 아산시 청신년교육문화센터	2021 정책엑스포 in 충남 지원	충남 정책엑스포 현장점검 및 실무지원	민주연구원 충남도당
6.15.	충북 도시재생허브센터	2021 정책엑스포 in 충북 지원	충북 정책엑스포 현장점검 및 실무지원	민주연구원 충북도당
6.16.	울산시당 대회의실	2021 정책엑스포 in 울산 지원	울산 정책엑스포 현장점검 및 실무지원	민주연구원 울산시당
6.18.	세종시당 대회의실	2021 정책엑스포 in 세종 지원	세종 정책엑스포 현장점검 및 실무지원	민주연구원 세종시당
6.22.	대전시당 대회의실	2021 정책엑스포 in 대전 지원	대전 정책엑스포 현장점검 및 실무지원	민주연구원 대전시당
6.23.	경북 안동시청	2021 정책엑스포 in 경북 지원	경북 정책엑스포 현장점검 및 실무지원	민주연구원 경북도당
6.24.	경남도당 대회의실	2021 정책엑스포 in 경남 지원	경남 정책엑스포 현장점검 및 실무지원	민주연구원 경남도당
6.25.	경기도당 대회의실	2021 정책엑스포 in 경기 지원	경기 정책엑스포 현장점검 및 실무지원	민주연구원 경기도당
6.29.	제주도당	정책엑스포 제주	제주 지역공약 개발	
7.28.	중앙당 4층 회의실	원팀 협약식 지원	제20대 대선후보 '원팀 협약식' 현장 지원	민주연구원 중앙선대본
8.1.~8.30.	서울	민간 경제연구소 토론회 참석	경제현황 토론	
8.11.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정책실무협의회의(제1차)	'민주연구원-대선 정책캠프' 정책실무협의회의	민주연구원 후보정책캠프
9.13.	줌 화상회의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기획회의	'제1기 정책 전문가 클럽' 초대 지도부 구성 및 클럽 화칙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	민주연구원
11.04.	줌 화상회의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수강생 OT	수강방법,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작성 및 수강생 평가 등 안내	민주연구원
11.	김경만 의원실	정책자문	중소기업 정책제안에 대한 자문	
12.	민주연구원	정책페스티벌 심사	정책페스티벌 정책 제안서 심사	
12.	중앙당	소확행 공약 제안 검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분야 국민제안 소확행 검토	



-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





# 여의도연구원 연간활동실적

## 1. 일반현황

###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4층			V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6	7년 이상 : 38	자체고용: 1	
석사급: 17	2년 이상~7년 미만 : 10	외부파견: 0	
기 타: 29	2년 미만 : 4		
합 계: 52	합 계 : 52	합 계: 1	

- 「주」 1.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2. 경력은 정당정책연구소,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 금	계			
6,336,775,287	192,181,759	3,210,353,720	9,739,310,766	7,341,938,884	2,397,371,882	

- 「주」 1. 활동경비 관련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 하단에 작성합니다.  
2.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기간 : 2021. 1. 1.~12. 31.)

## 2. 주요 활동 실적

### 가. 연구·개발실적(284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1~1.12	기재	인구감소시대의 정책 대전환 방향	자체	3	
1.1~1.5	기재	2020년 사상 첫 인구감소, 국정전반 패러다임 전환 계기로 삼아야	자체	3	
1.1~1.7	경제	‘공공선 자본주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자체	3	현안 보고
1.1 - 1.25	국토교통	서울시 도시대개조방안 검토	자체	22	현안 보고
1.1 - 1.25	과학기술	‘AI이루다’논란으로 본 AI의 윤리의식과 과제	자체	8	현안 보고
1.2~1.5	여성가족	정인이 사건으로 본 아동학대 대책 재점검 시급	자체	5	
1.2~2.16	교육	공교육 학력 저하 원인 및 실태 분석과 대안	외부 전문가	50	여연 정책 연구
1.3~1.5	외교안보	이란 혁명 수비대의 韓 유조선 나포 및 억류	자체	3	주간 동향
1.3~1.8	교육	무너지는 학력중산층 복원해야	자체	8	주간 동향
1.4~1.8	청년	청년주도 정당을 위한 제언	자체	10	주간 동향
1.5~1.12	대북통일	북한의 8차 당대회 개최: 현황, 평가, 전망	자체	8	이슈 브리 프
1.6	정무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양당 정책 민심〉	자체		현안 보고
1.8	보복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코로나19 방역〉	자체		현안 보고
1.11~1.17	교육	기회평등한 교육은 계층이동사다리의 통로	자체	8	주간 동향
1.13	외통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남북관계〉	자체		현안 보고
1.14	정무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재난지원금〉	자체		현안 보고
1.14~1.20	기재	외국인직접투자통계, 3년내내아전인수해석	자체	3	
1.15~1.19	외교안보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한반도 및 대북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자체	3	주간 동향
1.15~1.22	교육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일자리 해결한다	자체	10	주간 동향

1.16~1.19	행정안전	과거 20년 기록 추.한 문정부 공무원 채용	자체	4	
1.19	정무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자체		현안 보고
1.20~1.22	대북통일	文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드라이브 논란	자체	3	주간 동향
1.21~1.27	기재	자영업손실보상법이'상생법'이되려면	자체	3	
1.22	여가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양성평등〉	자체		현안 보고
1.23~1.27	교육	학교돌봄터 사업 둘러싼 학교 vs 지자체 갈등 논란	자체	5	
1.24~1.29	국내정치	부산시 4.7 재보궐 선거: 의미, 판세, 과제	자체	6	주간 동향
1.25~2.4	행정안전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외부 와 공동	6	이슈 브리 프
1.26	정무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포플리즘〉	자체		현안 보고
1.28~2.3	국토	서울주택인허가11년만에최저...문정부부동산정책실패재확인	자체	3	
1.31~2.3	보건복지	재원 마련 대책 없는 상병수당 도입 논란 재점화	자체	5	
2.1~2.4	국토교통	문정부 25차 부동산(2.4)대책 검토	자체	4	현안 보고
2.1~2.4	과학기술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향후 과제	전문 가공 동	10	이슈 브리 프
2.1~2.5	교육	공교육 학력저하 원인 및 제언	자체	8	주간 동향
2.1~3.2	교육, 보건복지	유보통합을 통한 영유아돌봄체계 개편방안	외부 전문 가	50	여연 정책 연구
2.1~4.2	교육	한국 vs 핀란드·영국·일본의 혁신교육 비교	외부 전문 가	63	여연 정책 연구
2.1~4.30	기재	포스트코로나청년·여성·고령자일자리활성화방안	외부	70	
2.1~4.30	복지	예측가능한미래,준비된사회보장	외부	50	
2.1~4.30	기재	포스트코로나시대글로벌경제선도5대정책 과제	외부	60	
2.1~4.30	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정책방향 및 신산업 육성전략	외부	80	
2.1~4.30	기재	금융 취약계층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	공동	45	

2.1~4.30	기재	뉴프론티어 재정개혁	외부	45	
2.1~4.30	복지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시스템을 개편	외부	80	
2.1~4.30	복지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돌봄체계 개편	외부	80	
2.1~4.30	교육	혁신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	외부	90	
2.1~4.30	교육	원격교육으로 인한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부진 해결방안	외부	60	
2.1~4.30	외통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외부	50	
2.1~4.30	국방	모병제 및 병역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외부	90	
2.1~4.30	국토	국민교통비 경감을 위한 수도권 선진 대중교통체계 구축	외부	80	
2.1~4.30	과방위	COVID-19 환경에서가계통신비합리화를위한정책	외부	90	
2.1~4.30	문화	COVID19 환경에서문화콘텐츠산업육성을위한정책과제	외부	80	
2.3	과방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원전〉	자체		현안 보고
2.4~2.11	기재	韓,코로나재정지출G20중14위...이게재난 지원금살포근거인가?	자체	3	
2.5	법사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법관탄핵〉	자체		현안 보고
2.10~2.25	국토교통	서울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의 도시생태재생	전문가공동연구	6	이슈브리프
2.10~3.31	보건복지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시스템 개편방안	외부 전문가	50	여연 정책연구
2.11~2.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MB정부 녹색성장 복사판, 문정부 해상풍력단지	자체	5	
2.11~2.15	대북통일	안보리 보고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체	3	주간동향
2.11~2.21	외교안보	한미동맹 현안 문제 반성과 '동맹 최적화'	자체	10	이슈브리프
2.13~2.19	교육	진보교육 10년 서울혁신교육의 반성문	자체	10	주간동향
2.14~2.17	행정안전	모두가 꺼리는 학대예방경찰관 내실화 시급	자체	5	
2.15~2.25	보건복지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재원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체	5	이슈브리프

2.16~2.17	외교안보	美조야, “한일관계 회복을 통한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 시급”	자체	3	주간 동향
2.18	환노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일자리〉	자체		현안 보고
2.19~2.24	기재	척박한 기업환경 개선과제를 던진쿠팡의 미국행 선택	자체	3	
2.21~2.26	교육	일본 유토리교육 실패 답습하는 우리나라 혁신교육 폐기해야	자체	8	주간 동향
2.22~2.24	대북통일	북한 해킹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한가?	자체	2	주간 동향
2.23~2.25	대북통일	북한인권문제 재점검	자체	2	주간 동향
2.25~3.3	기재	4·7 선거전후확진자증가전망...선거운동제한, 현금살포시대응책시급	자체	3	
2.27~3.2	보건복지	디지털 백신 여권 도입에 따른 대비책 필요	자체	5	
2.24	정무위/기재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재난지원금〉	자체		현안 보고
3.1	국토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부동산 정책〉	자체		현안 보고
3.1~3.5	환경노동	文정부 플라스틱 정책 현황과 시사점	자체	3	주간 동향
3.1~3.5	교육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교육현장 혼란 가져와	자체	10	주간 동향
3.1~3.11	국토교통	서울 특화형 SGBRCB 구축 및 개발·재생 방안	전문가공동연구	14	이슈 브리프
3.1~3.11	과학기술	국내 OTT 산업의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자체	10	이슈 브리프
3.1~3.26	기획재정	공공기관 부채 악화 현황과 개선방안	외부 전문가	10	이슈 브리프
3.2~3.11	기획재정, 보건복지	기본소득에 대한 동상이몽과 정책효과	자체	6	이슈 브리프
3.2~3.5	외교안보	한·미·일 공조체제 부활 필요성 검토	자체	3	주간 동향
3.2~4.20	보건복지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실태조사 연구	외부 전문가	230	여연 정책 연구
3.3	기재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증세〉	자체		현안

					보고
3.4~3.10	교육	코로나발(發)온라인교육시행1년교육격차 해소, 산업발전함께고려해야	자체	3	
3.5~3.12	교육	초중등 창업교육으로 창업-기부 선순환 모델 정착시켜야	자체	9	주간 동향
3.6~3.10	외교안보	제1차 쿼드(QUAD)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자체	5	현안 보고
3.8~3.12	환경노동	중국發 미세먼지 현황 및 문제점	자체	3	주간 동향
3.11~3.17	국토	정부 입맛대로 쓰는 집값통계 공시가 급등 계기로 전면 재검토	자체	3	
3.13~3.17	국토교통	공시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 세 부담 현실화	자체	5	
3.15~3.19	산업통상 자원	원전 가동 현황으로 본 에너지정책 문제점	자체	3	주간 동향
3.15~3.22	정치외교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 구축과 우리의 선택	자체	13	이슈 브리 프
3.15~4.30	여성가족	아동학대 예방과 구조적 원인 해소 연구	외부 전문가	30	여연 정책 연구
3.15~4.30	여성가족	아동권리 보호와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지역사회/가족 공동체 역할 모색	외부 전문가	30	여연 정책 연구
3.17~3.19	외교통일	한미 2+2 회의 평가	자체	3	현안 보고
3.20~3.26	외교통일	UN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문제 제기	자체	3	주간 동향
3.21~3.26	교육	교실수업 붕괴와 혁신교육	자체	10	주간 동향
3.22~3.25	산업통상 자원	연료비연동제 도입 무색... 전기료 동결 비판 포인트	자체	3	주간 동향
3.23~3.29	기재	실패한소주성설계자가KDI원장	자체	3	
3.27~3.30	보건복지	정부의 백신 확보 전략 실패에 따른 백신 수급 불안	자체	5	
3.27~4.2	교육	원격교육의 약자, 취약계층 학력부진 개선방안	자체	10	주간 동향
3.29~3.31	정치외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관련	자체	2	주간 동향
3.29~4.2	환경노동	소 잃고 외양간 리모델링... 민주당 기후환경 공약 문제점	자체	3	주간 동향
3.30~4.6	기재	서민금융강화, '금융회사동원'말고정부재정으로해결해라	자체	3	
4.1~4.16	법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외부	8	이슈

		개정 제안	전문가		브리프
4.1~4.2	정치외교	유엔대북제재 보고서에 거론된 대한민국 국회	자체	2	주간동향
4.2	과방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공영방송 편향성>	자체		현안보고
4.3	국방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모병제>	자체		현안보고
4.3~4.9	교육	수업방해율 OECD 5위, 교권추락과 수업부실로 이어진다	자체	8	주간동향
4.8~4.14	환경노동	일자리 정책 개선 방향	자체	9p	
4.8~4.16	교육	OECD 대비 한국교사 수업시수 적고 행정업무 많이 한다	자체	8	주간동향
4.10~4.13	국토교통	LH 공공임대.분양 특혜 의혹 발본색원해야	자체	5	
4.12~4.16	환경노동	日 오염수 방출, 文 정부 뒷북대응: 문제점 및 시사점	자체	4	주간동향
4.12~4.21	청년	MZ세대가 보여준 시대정신과 시사점	자체	3	현안보고
4.12~4.21	외교통일	북한 여성인권 실태와 대응방향	자체	37	이슈브리프
4.13~4.19	외교통일	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점 및 시사점	자체	11p	
4.14	국토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공시지가>	자체		현안보고
4.14~4.20	기재	쿠팡논란을 계기로 대기업규제 전면적 재검토해야	자체	3	
4.16	보복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백신>	자체		현안보고
4.20~4.27	안전행정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검토	외부공동	12p	
4.23	보복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러시아백신>	자체		현안보고
4.23~4.30	교육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전문대의 위기, 생존의 길 모색해야	자체	10	주간동향
4.24~4.27	보건복지	백신 추가 계약, 공급 및 접종까지 제대로 이어져야	자체	5	
4.28	기재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가상화폐>	자체		현안보고
4.28~5.4	기재	삼성생명법, 파급효과및부작용두루살펴야	자체	3	
4.30~5.4	법제사법	법사위원장 정상화 방안	자체	8p	
5.1~5.13	국토교통	공시가 급속인상의 문제점 진단	자체	4	정책동향

5.1~5.13	과학기술	코로나시대, 숙박, 배달, 택시 수수료 진단	자체	10	분석 현안 보고
5.1~7.30	교육	기회평등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외부 전문 가	75	여연 정책 연구
5.4	외통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대북전단〉	자체		현안 보고
5.6~5.13	기재	고용시장회복? '속빈강정'에 불과	자체	3	
5.7~5.12	국회운영	역대 정부 국정운영 방식 분석	자체	13p	
5.7~5.14	교육	우리나라 직업교육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자체	8	주간 동향
5.10~5.14	환경노동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	자체	3	주간 동향
5.10~5.20	외교통일	해외(재외)동포 참정권 활성화 방안 연구	자체	8	현안 보고
5.11	정무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자체		현안 보고
5.11~5.18	교육	전면등교와 학교 방역	자체	10	주간 동향
5.12~5.18	기재	현실화되는글로벌인플레이션과금리상승... 대비 책시급	자체	3	
5.15~5.18	국토교통	장기 보유 稅혜택 美캘리포니아 vs 징벌적 보유세 폭탄 한국	자체	5	
5.17~5.20	국내정치	거대 여당의 '입법폭주': 실상과 대응책	자체	3	주간 동향
5.17~5.21	환경노동	文정부의 K-민등산 프로젝트: 현황, 문제점, 시사점	자체	3	주간 동향
5.18	정무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40대 민심〉	자체		현안 보고
5.18~5.26	교육	미국 바이든 정부 교육정책 및 시사점	자체	9	주간 동향
5.20~5.26	기재	5천조원부채, 韓경기회복에최대위협요인	자체	3	
5.24~5.26	정치외교	비핵화와 비핵지대화 구분 못하는 외교수장	자체	3	주간 동향
5.24~5.28	청년	MZ세대 공감얻는 보수정당을 위한 보수(repair) 방안 검토	자체	2	현안 보고
5.25	외통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한미정상회담〉	자체		현안 보고
5.25~5.29	국토교통	실거주 않고 10억 차익 올린 고위공무원의 특공 재테크	자체	5	
5.26	정무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자료〉	자체		현안 보고
5.27~6.1	기재	5차재난지원금, 자영업자·소상공인·고용약	자체	3	



자지원에집중하자					
5.31~6.4	산업통상 자원	'준조세' 성격 전력기금 혈세낭비 논란과 시사점	자체	3	주간 동향
6.1	기재위/환 노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일자리〉	자체		현안 보고
6.1~6.4	국내정치	21대 국회 개원 1년 평가: 與, 역대급 입법 독주	자체	4	주간 동향
6.2~6.8	기재	G7 최저법인세합의...세수감소및기업피해대비 해야	자체	3	
6.3~6.10	교육	수석교사제 정착 문제점과 개선안	자체	8	주간 동향
6.8	국방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군문제〉	자체		현안 보고
6.8~6.12	국토교통	10년째 국토부 출신 인사가 공항공사 부사장직 독식중	자체	5	
6.8~6.12	보건복지	독일 주부연금보험의 국내 도입 시사점	자체	5	
6.10~6.16	국토	누구나집...실현가능성의문	자체	3	
6.10~6.17	교육	청년창업과 기업가형 대학	자체	8	주간 동향
6.12~6.19	교육	기업가형 대학으로 성장하는 길	자체	9	주간 동향
6.13~6.16	국내정치	친문 진영의 '개헌론'이슈 부상: 의도와 대응방안	자체	3	주간 동향
6.14~6.18	환경노동	민주당의 기후변화 비전의 허상과 현실	자체	3	주간 동향
6.15~7.3	국토교통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가중되는 임대차시장 수급 불안	자체	3	정책 동향 분석
6.17~6.23	환노	'정년연장'에대한대응전략	자체	3	
6.18	여가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여성할당제〉	자체		현안 보고
6.18~6.24	국내정치	코로나에 따른 주요국 의회의 업무방식 변화와 시사점	자체	5	주간 동향
6.21	보복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수술실 CCTV〉	자체		현안 보고
6.21	여가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차별금지법〉	자체		현안 보고
6.21~6.25	산업통상 자원	'에너지자립 제로' 만들 LNG 확대의 심각성 및 시사점	자체	3	주간 동향
6.21~6.30	법제사법	문재인 정부 검찰인사 행태 분석	자체	9p	
6.22~6.26	보건복지	전세계는 지금 델타 변이바이러스 대확산 공포	자체	5	
6.23~6.30	교육	유튜브 교사 인플루언서	자체	10	주간

6.24~6.30	기재	모처럼감세논의	자체	3	동향
6.26~30	외교통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 평가	자체	3	현안 보고
6.28~7.2	환경노동	탈탄소 비용 급증 여파와 시사점	자체	3	주간 동향
6.30~7.3	보건복지	방역모범국 뉴질랜드의 코로나 극복 비결	자체	5	
6.30~7.5	안전행정	재외선거 참정권 확대 방안	자체	8p	
7.1~7.14	외교통일	진화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자체	5	주간 동향
7.1~7.7	환경노동	이재명의 탄소세, 문제점과 대응방향	자체	3	주간 동향
7.1~7.7	교육	대학기술지주회사 현황 및 성장방안	자체	10	주간 동향
7.1~9.30	산자	탈원전과탄소중립	외부	120	
7.1~9.30	문화	독립성,공정성,문화향유권측면에서본문재인정부5년	외부	90	
7.1~9.30	국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 및 시장정상화 방안	공동	90	
7.1~9.30	보건	보건복지정책 평가 및 정책과제	외부	110	
7.1~9.30	환노	노동정책:‘속가능한포용적일자리복지	외부	90	
7.1~9.30	복지	약자와의동행을위한5대정책방향과‘국민공 동체’추진4대전략	외부	80	
7.1~9.30	외통	문정부5년통일외교안보분야평가와우리가 나아갈길	외부	100	
7.1~9.30	정무위	국민통합 방안	외부	110	
7.1~9.30	정무위	공정의관점에서본문정부5년	외부	60	
7.1~9.30	기재	미래성장동력측면에서본문재인정부5년평 가	외부	90	
7.3	외통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남북연락사무소 재개〉	자체		현안 보고
7.5~7.15	국내정치	헌법개정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자체	4	주간 동향
7.7~7.13	기재	최저임금에도‘준칙주의’도입해야할때	자체	3	
7.12~7.16	산업통상 자원	원전 활용 수소정책 사례 분석	자체	3	주간 동향
7.15~7.19	보건복지	코로나 타격에 자영업자 건보료 조정 신청은 셀프라니	자체	5	
7.15~7.21	기재	아직도사내유보금을‘기업이투자않고쌓아둔 현금’이라호도하나	자체	3	
7.15~9.30	국토교통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및 시장정상화 방안	전문 가공 동연 구	70	정책 연구 보고 서

7.15~9.30	산업통상	미래성장동력 측면에서 본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자체	78	정책 연구 보고서
7.17~7.21	정치외교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감염과 파병철군 논란	자체	3	주간 동향
7.21~7.25	보건복지	백신 교차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증폭	자체	5	
7.21~7.26	정치외교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자체	3	주간 동향
7.21~7.27	교육	한계대학 현황 및 전망	자체	9	주간 동향
7.22~7.27	외교통일	통일연구원, <2021 통일의식조사> 관련 결과분석 보고	자체	5	주간 동향
7.22~7.28	교육	학생수 감소에도 늘어나는 교육청 공무원	자체	3	
7.22~8.4	환노	'노동이사제'공공기관전면도입쟁점과시사점	자체	6	
7.23~7.30	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문제점	자체	10	주간 동향
7.26~7.30	환경노동	'그린워싱' 민주당 탄소중립 정책: 문제점 및 시사점	자체	3	주간 동향
7.27	법사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드루킹 특검 연장>	자체		현안 보고
7.28~7.31	기획재정	선별지급도 보편지급도 아닌 국민지원금 88% 지급기준 논란	자체	5	
8.1	행안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국회 세종 이전>	자체		현안 보고
8.1~8.4	군사국방	軍부실 급식 논란과 개선방안	자체	5	주간 동향
8.1~8.6	교육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자체	9	주간 동향
8.1~8.19	국토교통	문재인정부의 주택공급확대정책평가 및 시사점	자체	3	현안 보고
8.2~8.4	외교통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의 의미	자체	2	주간 동향
8.5~8.18	기재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 쟁점 및 시사점	자체	5	
8.6~8.11	외교통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정상화 방안 검토	자체	5	현안 보고
8.9~8.11	환경노동	탄소중립 위한 원전 활용 방안: 영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자체	3	주간 동향
8.9~8.11	외교통일	국제사회의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자체	3	주간 동향
8.10~8.18	군사국방	군, 성범죄 이후 연이은 피해자 자살 관련	자체	5	주간 동향

8.17~8.26	국회운영	정기국회 교섭단체연설 정책 제안	자체	10p	
8.18~8.22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연료비 상승. 탈원전 후폭풍으로 한전 적자, 전기료 인상 진퇴양난	자체	5	
8.19	환노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주 4일제〉	자체		현안 보고
8.19~9.1	기재	기본소득제, 도입가능한가?	자체	7	
8.20~8.31	군사국방	모병제 도입 관련: 필요성, 쟁점, 대책	자체	6	주간 동향
8.23~8.25	외교통일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	자체	4	주간 동향
8.23~8.27	환경노동	신재생 과속 딜레마: 누구를 위한 '재생에너지 3020'인가	자체	3	주간 동향
8.29~9.4	교육	기초학력 붕괴 현황 및 대안	자체	9	주간 동향
9.1	행안위/기 재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재난지원금〉	자체		현안 보고
9.1~9.15	군사국방	장병 복지체계 재구축 관련 3대 제안	자체	5	주간 동향
9.1~9.30	정무위	차기 정부 비전 및 핵심과제 연구	외부 전문 가연 구용 역	100 p	
9.1~12.31	기재	Change 222 세상을바꾸는핵심아젠다40	자체	250	
9.2~9.15	기재	가계부채현황에대한평가와시사점	자체	6	
9.3	법사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사형제〉	자체		현안 보고
9.6~9.8	정치외교	與·野 대선 후보 외교·안보 분야 관련 주요 발언	자체	7	주간 동향
9.10~9.19	외교통일	북한 비핵화 팩트 정리	자체	5	주간 동향
9.15~9.24	외교통일	미중갈등 양상과 우리의 선택	자체	7	현안 보고
9.16~9.29	기재	국가채무급증, 정말문제없나?	자체	6	
9.23	국토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화천대유〉	자체		현안 보고
9.25~10.7	외교통일	4차산업혁명 시대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의 선택	자체	7	현안 보고
9.27~9.29	정치외교	한일관계 전망 및 시사점	자체	5	주간 동향
9.30~10.13	기재	재정확대를겨냥한'거짓통계해석'에대한팩 트체크	자체	7	

10.1~10.20	국토교통	토지임대부 반값주택 공약 경쟁의 문제점	자체	3	YDI 정책리뷰
10.1~10.20	과학기술	디지털세 도입과 대응방안	자체		현안보고
10.7~10.13	교육	불공정한 논란 대입제도 및 시사점	자체	9	주간동향
10.15~10.21	환경노동	노동분야 현안이슈 분석 및 시사점	자체	5	현안보고
10.20~10.30	국회운영	각당 대선 후보 정치·사회 공약 분석 및 시사점	자체	15p	
10.21~11.3	기재	이재명'재난지원금추가지급'근거의문제점	자체	5	
10.25	정무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대통령 국정지지율〉	자체		현안보고
10.25~10.29	산업통상자원	탈원전 부작용 공방 팩트체크	자체	4	YDI 정책리뷰
11.1~11.4	정치외교	기시다 내각 출범에 따른 한일관계 전망 및 시사점	자체	5	주간동향
11.1~11.4	외교안보	문정권 북핵정책: 평화 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한미간 혼선초래	자체	5	주간동향
11.1~11.5	법제사법	차별금지법 주요쟁점 및 시사점	자체	4	YDI 정책리뷰
11.1~11.6	교육	우리나라 대학창업 문제점 및 대안	자체	10	주간동향
11.2	환노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주 4일제〉	자체		현안보고
11.4~11.17	기재	한국의상대빈곤율OECD4위, 원인및시사점	자체	7	
11.9	정무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2030 세대별 정책〉	자체		현안보고
11.11~11.18	기획재정	국토보유세 실효성 분석	자체	12p	
11.12	정무위/기재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재난지원금〉	자체		현안보고
11.15~11.17	정치외교	AUKUS 결성을 계기로 호주의 대중관계가 한국에 갖는 함의	자체	4	주간동향
11.15~11.19	환경노동	COP26 기후총회 주요내용 및 시사점	자체	3	YDI 정책리뷰
11.15~11.24	정치외교	외교안보 및 대북통일 대국민인식조사	자체	7	주간동향
11.16	기재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종합부동산세〉	자체		현안보고
11.18~12.1	환노	이재명의'공공부문노동이사제'주장:문제점	자체	6	

과대응방향					
11.22	정무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자체		현안 보고
11.29~12.3	환경노동	시민의식 못따라가는 탈플라스틱 정책: 현황, 문제점, 시사점	자체	4	YDI 정책 리뷰
12.1	환노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주 52시간 철폐〉	자체		현안 보고
12.1~12.8	교육	정부 대입제도 개선안 평가 및 제언	자체	10	주간 동향
12.2	외통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증전선언〉	자체		현안 보고
12.2	정무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여성 인사 영입〉	자체		현안 보고
12.3	보복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재택치료〉	자체		현안 보고
12.3	정무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공수처〉	자체		현안 보고
12.7	보복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방역패스〉	자체		현안 보고
12.8	법사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사시 부활〉	자체		현안 보고
12.9	정무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올림픽 보이콧〉	자체		현안 보고
12.9~12.14	환경노동	근로시간 단축 주52시간제 논쟁과 개선방향	자체	5	
12.9~12.17	군사국방	문정권 국방정책 5년 평가: 군기강 해이 및 군신뢰 회복 방안	자체	4	주간 동향
12.13	과방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카톡 검열법〉	자체		현안 보고
12.13~12.15	정치외교	「한반도 평화법안(H.R.3446)」 관련 주요 동향	자체	10	주간 동향
12.16	기재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양도소득세〉	자체		현안 보고
12.17~12.29	기획재정	소득 크레바스 극복 위한 개인연금 과세체계 개선방향	자체	7p	
12.20~12.30	법제사법	공수처 직무 이탈 행태 분석	자체	12p	
12.21	국토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부동산 가격〉	자체		현안 보고
12.22	산자중기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자영업자〉	자체		현안 보고
12.23	국토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공시가격〉	자체		현안 보고

12.28	기재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공공요금 인상〉	자체		현안 보고
12.28	정무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 〈2030 민심 분석〉	자체		현안 보고

## 나. 토론회 등 개최(32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소	주제	주요내용	비고
정책세미나	1.9	여의도 연구원	신안보전략 구상 3차 라운드테이블	“북한 당대회 결과 평가 및 전망”세미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7인)	
간담회	1.22	국회 본관	‘직장 내 양성평등’	직장내 양성평등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 논의를 통해 법.제도적 개선,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 방안 마련 등	
정책세미나	1.29	여의도 연구원	신안보전략 구상 4차 라운드테이블	“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복원 방안”세미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7인)	
정책세미나	3.1	여의도 연구원	신안보전략 구상 최종 발표회	5차례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내용 최종 발표 및 점검	
정책세미나	3.3	여의도 연구원	신안보전략 구상 5차 라운드테이블	“북핵미사일 관련 대응전략”세미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7인)	
간담회	3.31~ 10.25	여의도 연구원	보건의료정책 간담회	보건의료체계 혁신, 공공의료의 문제점과 대안, 커뮤니티케어 본질과 논란 등	8회
간담회	4.14	국회 본관	‘국내 산업구조 전환과 신산업 육성’	국내 산업구조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진단 및 대책 마련 등	
간담회	4.21	국회 본관	‘예측가능한 미래, 준비된 사회보장’	예측가능한 미래와 준비된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하고 대응방안 제시 등	
간담회	5.6	국회 본관	‘포스트코로나 청년.여성.고령자 일자리 활성화 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년.여성.고령자 일자리 현황 및 활성화 대책 마련 등	
간담회	5.12	국회 본관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백신 접종 실패의 문제점 진단과 확대 방안 모색 등	
간담회	5.26	국회 본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그 이후’	산업현장의 노동안전권 확보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책	

				마련 등	
정책 세미나	6.8	국회 본관 228호	타투! 예술인가 의료인가?	타투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여연 주최
2021 조선일보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6.30~7.1	온라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다 : 공존과 번영을 위해	코로나 종식을 이끌 리더십, 세계 경제 전망, 국가 생존 전략, 아시아의 미래, 테크패스트 등	
세미나	7.7	HOW's 카페	정당의 뉴미디어마케팅	정당의 뉴미디어 활용 현황 및 방향	
간담회	7.8	국회 본관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한 국민 제안'	병사의 군복무기간 중의 전반적인 생활시스템 점검 및 복지체계 재구축 방안 제시 등	
공개토론회	7.8	본청 228호	장병복지 체계구축 방안 대국민 토론회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한 대국민 약속과 제안, 믿고 맡기는 국민군대 관련 제안	
세미나	8.11	Webex 온라인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 세미나	국민의힘은 2030 여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정책간담회	8.26	여연 회의실	산업통상정책	산업통상정책 진단	
전문가간담회	8.27	온라인	남북관계 모색 1차 라운드테이블	대북통일 관련 정책공약 간담회 (남북관계 전문가 7인)	
전문가간담회	9.3	여연 회의실	남북관계 모색 2차 라운드테이블	"영변 핵단지 재가동 의미와 전망"간담회 (남북관계 전문가 7인)	
세미나	9.16	Webex 온라인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방지 정책 세미나	직장내 갑질 사례와 괴롭힘 대응방법과 대책	
전문가간담회	9.27	온라인	남북관계 모색 3차 라운드테이블	"향후 미북관계 전망과 대북제재"간담회 (남북관계 전문가 7인)	
전문가간담회	10.6	여연 회의실	남북관계 모색 4차 라운드테이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움직임"간담회 (남북관계 전문가 7인)	
전문가간담회	11.1	여연 회의실	남북관계 모색 5차 라운드테이블	"남북관계 3.0시대의 전략 및 과제"간담회 (남북관계 전문가 7인)	
전문가간담회	11.19	여연 회의실	남북관계 모색 최종 회의 및 발표	"신대북전략 구상 최종 리뷰"간담회 (남북관계 전문가	



				7인)	
--	--	--	--	-----	--

**다. 교육·연수활동(105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통신교육 (온라인)	3.2.~	Webex 온라인	여연 아카데미 정책 기자단 모집 운영 교육(연중 운영)	45회
통신교육 (온라인)	3.19.~	Webex 온라인	여연아카데미 대학생 인턴 교육(연중 운영)	12회
통신교육 (온라인)	5.4.~	Webex 온라인	굿소사이어티 정책 리더 교육(지방당직자 교육)	30회
통신교육 (온라인)	9. ~	Webex 온라인	대학생 정책 서포터즈 2기(연중 운영)	8회
연구원 집합교육	10.26.~	연구원 회의실	영상 제작 자체교육	10회

**라. 정책홍보(2264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2.17	보도자료	언론배포	〈여연정책연구 2021-1호〉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4.17~12.17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배포	외교안보 및 대북통일 일일동향(총 255회 작성)	당지도부, 당 사무처 등
연중(매일)	여연아카데미 홈페이지	정책기사 및 게시물	정책 수렴 및 일반인 정책 홍보 및 참여 / 정책기사 1046, 게시물 863 (21.12.21 기준)	1909개
연중	여의도연구 원 유튜브 및 SNS	온라인 홍보	연구원 활동 사항 영상물 제작	33개
연중	아카데미 서포터즈 SNS	대학생 및 청년 정책 제안 및 창작물 홍보	대학생 및 청년들이 만든 정책 카드뉴스 및 동영상 홍보	6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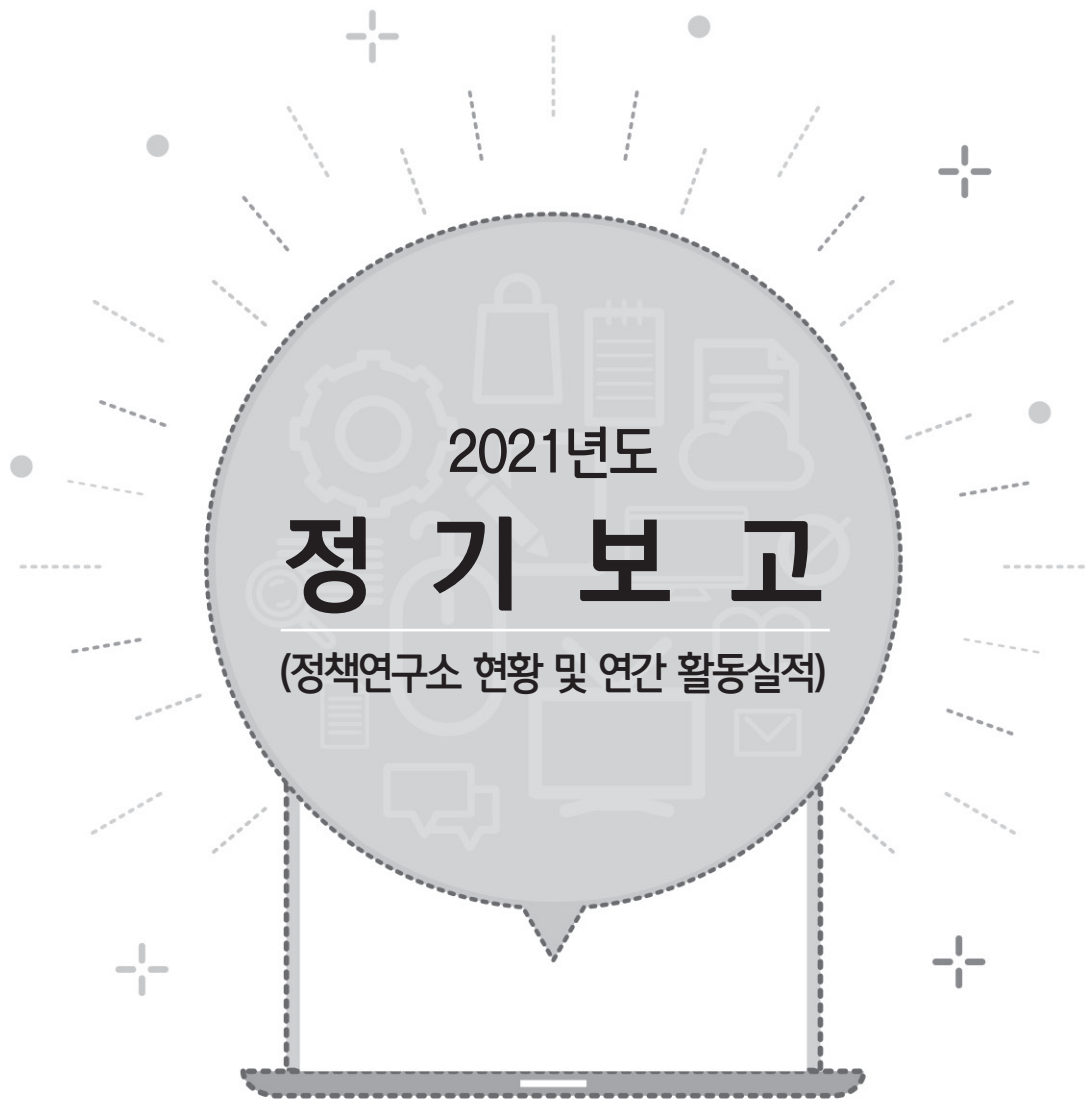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18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 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12	정책보고서(이슈브리프)	북한의 8차 노동당대회 개최: 현황, 평가, 전망	자체 발간	160부, 당 지도부 및 사무처 등 보고	
1.14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프 2021-01호	자체	160부, 주요 당직자 및 소속의원 배포	
2.2	정책보고서(이슈브리프)	외교안보 라인을 통해 본 바이든 정부 대외정책 전망	자체 발간	160부, 당 지도부 및 사무처 등 보고	
2.2	정책보고서(이슈브리프)	외교안보 라인을 통해 본 바이든 정부 대외정책 전망	자체 발간	160부, 당 지도부 및 사무처 등 보고	
2.4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프 2021-02호	자체	160부, 주요 당직자 및 소속의원 배포	
2.15	여연정책연구	여연정책연구 2021-01호	자체	10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2.21	정책보고서(이슈브리프)	한미동맹 현안문제 반성과 동맹 최적화	자체 발간	160부, 당 지도부 및 사무처 등 보고	
2.25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프 2021-03호	자체	160부, 주요 당직자 및 소속의원 배포	
3.11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프 2021-04호	자체	160부, 주요 당직자 및 소속의원 배포	
3.22	정책보고서(이슈브리프)	미국의 대중견제전략 구축과 우리의 선택	자체 발간	160부, 당 지도부 및 사무처 등 보고	
3.25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프 2021-05호	자체	160부, 주요 당직자 및 소속의원 배포	
4.15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프 2021-06호	자체	160부, 주요 당직자 및 소속의원 배포	
4.21	정책보고서(이슈브리프)	북한 여성인권 실태와 대응방향	자체 발간	160부, 당 지도부 및 사무처 등 보고	
5.1	정책보고서(이슈브리프)	해외(재외)동포 참정권 활성화 방안 연구	자체 발간	160부, 당 지도부 및 사무처 등 보고	
9.3	정책보고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및 시장정상화 방안	자체 발간	100부	
11.19	연구보고서	YDI 정책리뷰	자체	전자문서, 주요당직자 및 소속의원 배포	
12.3	연구보고서	YDI 정책리뷰	자체	전자문서, 주요당직자 및 소속의원 배포	
12.17	연구보고서	YDI 정책리뷰	자체	전자문서, 주요당직자 및 소속의원 배포	

**바. 그 밖의 주요활동(15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고
1.19	국회 본관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관련	외교안보 및 대북통일 분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작성을 위한 회의 참석	
3.4	여의도연구원	모병제 관련 청년일자리 창출	모병제 전환시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오해와 진실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6.28.~	온라인 (아카데미 이러닝 시스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온라인으로 수강신청 , 강의청취 , 평가 및 시험, 수료까지 원스톱 교육 시스템 구축	연중운영
7.16 / 7.27	여의도연구원	핵심어젠다 개발	통일외교안보 분야 핵심어젠다 개발, 자료 제출 및 회의	총2번
7.19 / 7.26 / 8.4	국회 본관 및 여의도연구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관련	통일외교안보 분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작성을 위한 회의 참석	총3번
8.16	여의도연구원	문정부 외교안보 5년 평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대안 제시	
10.14 / 10.23 / 11.1	여의도연구원	이재명 외교안보, 국방분야 공약 평가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및 국방분야 정책 공약 관련 평가 및 대안 제시	총3번
11.3	경남 창원	경남도당 제18기 여성정치아카데미	“설득력 있는 논평쓰기”란 주제로 경남도당 여성 정치인들 강연	
12.11	경기도 분당	경기도 분당구(을) 당원 교육	“최근 외교안보 현안 및 대응”이란 주제로 분당을 당원들 대상 강연	
12.16	여의도연구원	40대 과제	외교안보 및 대북통일, 군사국방 분야 40대 과제를 공약화 작업	





-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



# 정의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 1. 일반현황

###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5층 (여의도동, 동아빌딩)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 나. 인 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4명	7년 이상: 3명	자체고용: 1명	
석사급: 6명	2년 이상~7년 미만: 7명	외부파견: 1명	
기 타: 3명	2년 미만: 3명		
합 계: 13명	합계: 13명	합 계: 2명	

「주」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924,295,674	50,425	190,059,567	1,114,405,666	907,467,395	206,938,271	

「주」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2. 주요 활동 실적

### 가. 연구.개발실적(169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225 ~ 1201	산자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 고용안정방안 연구	외부	37P	
0603 ~ 1108	보건복지위	산재 발생과 산재보험 보장에서의 불평등 사례 연구	외부	42P	
1025 ~ 1115	운영위	제3당으로서 정의당의 성장전략 연구	외부	21P	
1025 ~ 1115	운영위	20대 대선에서 정의당의 정책과 전략	외부	13P	
1025 ~ 1115	운영위	20대 대선과 정의당의 정책 및 정치전략	외부	13P	
0720 ~ 1202	환노위	한국에서의 플랫폼 노동권 보장정책	외부	35P	
0720 ~ 1202	산자위	대안 플랫폼의 하나로서 공공플랫폼의 가능성과 사례	외부	30P	
0720 ~ 1202	운영위	플랫폼 경제 여론동향과 함의	외부	30P	
0901 ~ 1203	환노위	국가 일자리보장제 실현을 위한 제도 인프라 구축방안	외부	64P	
0720 ~ 1230	산자위	한국 플랫폼 경제의 보편성과 차별성	외부	39P	
0102 ~ 0305	외교통일 위원회	먹구름 낚 한반도 평화프로 세스와 해법	자체	11P	
0306 ~ 0407	외교통일 위원회	미·중 갈등과 한반도 평화	자체	6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501 ~ 0617	외교통일 위원회	한반도 평화 관련 정의당의 인식과 정책	자체	9P	
0601 ~ 0721	외교통일 위원회	한국전 종전 결의안 및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동향과 과제	자체	7P	
0901 ~ 1115	외교통일 위원회	갈등과 전환의 시대, 평화·공생 선도 중견·평화 국가	자체	20P	
0901 ~ 1231	외교통일 위원회	20대 대선 정의당 외교·국방·남북관계 분야 공약(초안)	자체	15P	
1101 ~ 1231	외교통일 위원회	TV 토론 등 각종 토론회 예상 질문 및 답변, 참고자료 (외교·국방·남북관계 분야)	자체	60P	
1101 ~ 1231	외교통일 위원회	모병제연대 등 사회단체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 질의 답변	자체	20P	
1101 ~ 1231	외교통일 위원회	중앙일보 등 언론 매체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 질의 답변	자체	15P	
0128 ~ 0225	운영위원회	정의당 전략보고서 2021	자체	3P	
0223 ~ 0303	행정안전위원 회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파장과 전망	자체	8P	
0220 ~ 0304	운영위원회	문재인 정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검토 및 청년정의당의 역할 및 과제	자체	10P	
0304 ~ 0311	운영위원회	대선 지형 분석 및 대응	자체	3P	
0322 ~ 0409	운영위원회	정의당이 극복해야 할 지점들과 대응방향	자체	8P	
0723 ~ 0730	행정안전위원 회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토론 방식	자체	3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816 ~ 0915	행정안전위원회	20대 대선 전망과 대응방향	자체	6P	
1122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선대위 선명성 경쟁	자체	2P	
1123	행정안전위원회	종부세 여진	자체	3P	
1124	행정안전위원회	코로나19 폭발 국면	자체	4P	
1125	행정안전위원회	최근 심상정 후보 지지율 하락 관련	자체	2P	
1128	행정안전위원회	대선 이슈 관련	자체	3P	
1129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선대위 동향	자체	2P	
1130	행정안전위원회	한국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자체	2P	
1201	행정안전위원회	코로나19 대확산	자체	2P	
1202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동향	자체	2P	
1206	행정안전위원회	지역구 예산 챙긴 기득권 여야 실세들	자체	3P	
1207	행정안전위원회	코로나19 방역 골든타임 놓친 듯	자체	3P	
1208	행정안전위원회	심상정 후보 관련 언론 동향	자체	2P	
1209	행정안전위원회	이재명 후보 정당혁신 행보	자체	2P	
1212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 후보 새시대준비위 출범식 참석	자체	2P	
1213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 후보 반문재인 행보 지속	자체	2P	
1214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 후보 정권교체 역설	자체	2P	
1215	행정안전위원회	이재명 후보 일정 재개	자체	2P	
1216	행정안전위원회	이재명 후보 아들 불법도박 사과	자체	2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219	행정안전위원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윤봉길 의사 89주기 추모식 참석	자체	2P	
1220	행정안전위원회	이재명 후보 보육 및 소상공인 공약	자체	2P	
1221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 후보 코로나 대응 행보	자체	2P	
1222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 후보 1박2일 호남 행보	자체	2P	
1226	행정안전위원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후폭풍		2P	
1227	행정안전위원회	안철수 후보 민주당 러브콜 거부	자체	2P	
1228	행정안전위원회	이재명 후보 청년 정책행보	자체	2P	
1229	행정안전위원회	이재명 후보 신복지 구상	자체	2P	
1230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 후보 TK 10대 공약 발표	자체	2P	
0927 ~ 1131	환노위 예결위	공공부문 온실가스감축조사	자체	7P	
0927 ~ 1231	환노위 예결위	탄소중립시나리오 문제점 및 개 선방향 연구	자체	20P	
0927 ~ 1014	국회그린뉴딜 연구회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 본 2030 NDC 목표의 문제점 조 사	자체	24P	
1005 ~ 1231	산업위 예결위	탄소중립을 위한 발전(전환)분 야의 대체비용 조사	자체	10P	
1012 ~ 1210	환노위 예결위	2022년 환경부 기후관련 사 업과 및 기후대응기금 조사	자체	10P	
1025 ~ 1126	환노위 예결위	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26) 결과 조사	자체	18P	
11 01 ~ 1203	국회그린뉴딜 연구회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검토	자체	39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103 ~ 1203	국회기후변화 포럼	탄소세 도입 필요성과 방법연 구	자체	10P	
1104 ~ 1105	환노위	요소수 가격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	자체	6P	
1115 ~ 1214	산업통상위 예결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생가능 한 에너지 전환 방법 조사	자체	10P	
1103 ~ 1203	국토교통위 예결위	그린모빌리티 정책개발	자체	10P	
0119 ~ 0125	행정안전위원 회	2021년 정의당 당원 정치인식 조사	자체	7p	
0218 ~ 0225	행정안전위원 회	정의당 조직문화 개선 당원 설문조사	자체	1p	
0222 ~ 0303	행정안전위원 회	당 지도부 보궐선거 관련 당원 여론조사	자체	60p	
0319 ~ 0331	행정안전위원 회	전 국민 현안 ARS 조사 (3월)	자체	32p	
0111 ~ 0504	행정안전위원 회	주간 정세분석 보고서	자체	197p	
0510 ~ 0513	행정안전위원 회	정의당 호감도 추이 분석 (한국갤럽 기준)	자체	5p	
0526 ~ 0531	행정안전위원 회	여론동향 브리핑 2021년 5월 월간 보고	자체	12p	
0701 ~ 0705	행정안전위원 회	여론동향 브리핑 2021년 6월 월간 보고	자체	11p	
0629 ~ 0806	행정안전위원 회	2022 대통령선거 대비 당원 여론조사 (Q방법활용)	자체	226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908 ~ 0924	행정안전위원회	당내 대선 경선 후보 이미지 컨조인트 분석조사 “우리가 원하는 대선후보는!”	자체	13p	
1016 ~ 1018	국회운영위원회	단기 타기팅 및 여론조사 동향 보고서	자체	4p	
1102	행정안전위원회	권역별 정의당 지지도 분석	자체	2p	
1119 ~ 1129	행정안전위원회	전 국민 현안 ARS 조사 (11월)	자체	4p	
1122 ~ 1215	행정안전위원회	심상찮은 일일 여론 동향 브리핑	자체	55p	
1222	행정안전위원회	심상찮은 여론 동향 브리핑	자체	5p	
1226	행정안전위원회	심상찮은 여론 동향 브리핑 (12월 4주 주간)	자체	6p	
1229	행정안전위원회	심상찮은 여론 동향 브리핑	자체	7p	
0610 ~ 0620	환경노동위원회	미국 일자리보장제 법안 연구	자체	13P	
0720 ~ 1019	환경노동위원회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잠식과 대안	자체	30P	
0801 ~ 0817	환경노동위원회	일자리보장제 실행방안	자체	23P	
1001 ~ 1130	정무위원회	청년 정책 현황 분석 및 수립	자체	15P	
1001 ~ 1130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정책 현황 분석 및 수립	자체	10P	
0303 ~ 0422	환경노동위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자체	40p	
0416 ~ 0423	환경노동위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자체	3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503 ~ 0524	환경노동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법안 비교분석	자체	20p	
0603 ~ 0705	환경노동위	화학물질 관련 법안 개정	자체	4p	
0802 ~ 0811	환경노동위	탄소중립 시나리오 분석	자체	6p	
1006 ~ 1108	환경노동위	2022년 환경노동위 예산안 검토	자체	8p	
1006 ~ 1108	산자중기위	2022년 산자중기위 예산안 검토	자체	5p	
1105 ~ 1217	환경노동위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	자체	19p	
0701 ~ 1231	환경노동위	제20대 대통령선거 생활환경·생태공약 개발	자체	11p	
0701 ~ 1231	산자중기위	제20대 대통령선거 에너지전환공약 개발	자체	9p	
0701 ~ 1231	환경노동위	제20대 대통령선거 동물복지공약 개발	자체	10p	
0128 ~ 0131	행정안전위원 회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 의미와 과제	자체	4p	
0103 ~ 0111	행정안전위원 회	2021년 정의당의 정치개혁 과제	자체	10p	
0112 ~ 0118	행정안전위원 회	공직자 취업심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체	4p	
0107 ~ 0119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동의제도 완화 추진의 문제점	자체	4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201 ~ 0228	행정안전위원회	자치경찰조례안 비교 분석	자체	10p	
0220 ~ 032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방안	자체	15p	
0303 ~ 0331	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방향	자체	14p	
0302 ~ 0311	행정안전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방안	자체	4p	
0402 ~ 0416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례개정 방안	자체	4p	
0401 ~ 0430	행정안전위원회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자체	11p	
0405 ~ 0411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별 최고임금 조례 현황과 과제	자체	4p	
0502 ~ 0605	행정안전위원회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현황	자체	12p	
0508 ~ 0521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의 필요성	자체	4p	
0602 ~ 0620	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 법제화와 모든 노동자의 쉼 권리 확보방안	자체	4p	
0630 ~ 0721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정치개혁 과제와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자체	22p	
0702 ~ 0706	행정안전위원회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기준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과제	자체	4p	
0801 ~ 0813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자체	8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731 ~ 0811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개선방안	자체	4p	
0823 ~ 0907	행정안전위원회	정기국회 입법 과제	자체	9p	
0821 ~ 0903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사직절차 개선방안	자체	4p	
0901 ~ 1002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분석	자체	11p	
1103 ~ 1231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정치개혁·정부행정·자치분권 대선공약	자체	36p	
0501 ~ 0630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의 의의와 개선방향	자체	52 P	
1101 ~ 1210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2021년 언론개혁 입법의 쟁 점과 시사점	자체	58 P	
0513 ~ 0615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현황 분석 및 관리 체계 방안 마련	자체	18P	
0210 ~ 021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의당 코로나19 대응 방향 검토	자체	7p	
0304 ~ 032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	자체	15p	
0415 ~ 0421	농림해양 축산위원회	마권 온라인 발매의 문제점	자체	5p	
0429 ~ 0505	정무위원회	가상화폐(자산) 관련 동향 및 검토의견	자체	5p	
0524 ~ 0601	산업통상 자원중기 벤처기업 위원회	코로나19 손실보상 피해지원 방안	자체	10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531 ~ 081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정부 결산안 분석	자체	15p	
0603 ~ 0609	산업통상 자원중기 벤처기업 위원회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백신희가) 검토의견	자체	6p	
0615 ~ 061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차 추경예산안 재원 마련 방안	자체	5p	
0702 ~ 072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분석 및 검토	자체	10p	
0726 ~ 0827	기획재정 위원회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검토	자체	5p	
0802 ~ 0809	보건복지 위원회	2016~2021년 시도별 국가예방무료접종 시행 현황 분석	자체	5p	
0822 ~ 1231	기획재정 위원회	20대 대선 조세분야 공약 개발	자체	15p	
0823 ~ 0827	기획재정 위원회	21대 국회 하반기 주요 입법과제 추진현황 점검 (조세 재정)	자체	20p	
0827 ~ 1101	행정안전 위원회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자체 코로나 지원금 현황 분석	자체	30p	
0903 ~ 112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22년 중앙정부 예산안 분석	자체	25p	
0903 ~ 112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22년 중앙정부 기후대응기금 사업 현황 분석	자체	20p	
0915 ~ 1105	행정안전 위원회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 분석	자체	30p	
1015 ~ 110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22년 정부 예산에 대한 정의당 요구안	자체	15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018 ~ 112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공의료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필요 예산 분석	자체	20p	
1021 ~ 1231	행정안전 위원회	20대 대선 지역균형발전 분야 공약 개발	자체	10p	
1101 ~ 111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감액 논란 이슈 정리	자체	8p	
0101 ~ 0213	산업통상	경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대안적 기업소유 모델	자체	30p	
0104 ~ 0215	환경노동, 산업통상	감시자본주의 문제와 대응방향	자체	16p	
0225 ~ 0304	기획재정	American Rescue Plan의 4대 핵심 요소	자체	4p	
0401 ~ 0415	기획재정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경제재건계획	자체	4p	
0417 ~ 0420	기획재정	American Jobs Plan이 부채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자체	2p	
0429 ~ 0504	기획재정	바이든 대통령의 American Families Plan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자체	4p	
0520 ~ 0528	기획재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국의 지원정책-실업급여, 재난지원금	자체	4p	
0617 ~ 0625	기획재정	양당 합의 인프라 계획에 있는 내용	자체	3p	
0626 ~ 0705	기획재정	초부유세 설명자료	자체	10p	
0707 ~ 0725	환경노동, 산업통상, 기획재정	미국의 일자리보장제 법안-2019년 부커 법안	자체	11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709 ~ 0727	환경노동, 산업통상	미래의 노동자 발언권과 권한	자체	57p	
0720 ~ 1019	환경노동, 산업통상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편향과 지배 문제	자체	41p	
0727 ~ 0826	환경노동, 기획재정	탄소세는 기후위기 대처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자체	17p	
0901 ~ 0916	기획재정	새로운 조세체계 만들기	자체	9p	
0917 ~ 1015	환경노동, 산업통상, 기획재정	우리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자체	9p	
0925 ~ 1103	환경노동, 산업통상	아이슬란드 노동시간 단축 실험 결과	자체	55p	
1020 ~ 1105	환경노동, 산업통상	아이슬란드 신규 근로시간 단축 계약	자체	3p	
1115 ~ 1125	환경노동, 산업통상	정의당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 공약	자체	9p	
1201 ~ 1222	환경노동, 산업통상, 기획재정	지역순환경제 실현 방법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의미 토론문	자체	10p	
0601 ~ 0630	보건복지 위원회	사회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자체	67p	
0701 ~ 0731	보건복지 위원회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시사점	자체	54p	
0920 ~ 0929	보건복지 위원회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당 정책방안	자체	10p	
1025 ~ 1210	보건복지 위원회	공적연금 및 노후소득 강화 방안	외부와 공동	75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105 ~ 1210	보건복지 위원회	고령사회 사회서비스 보장 방안 연구	외부	60p	
1105 ~ 1210	보건복지 위원회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 개선방안	외부	46p	
1201 ~ 1215	보건복지 위원회	위드코로나 방역체계 점검 및 대응방안	자체	4p	

나. 토론회 등 개최(44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토론회	0223	유튜브 생중계 & 문자통역	플랫폼노동	플랫폼 노동의 노동법적 포섭방안 및 자율적 노동이라는 환상에 대해 토론, 플랫폼노동의 권리 보호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모색	
간담회	0325	연구소 회의실	정의당 2.0 구상	정의당 2.0 구상과 전략 및 신임지도부 정치전략	
간담회	0408	연구소 회의실	정의당 2.0 전략보고서	전략보고서 역할분담 및 내용 발표·토론	
토론회	0428	중앙당 회의실 (유튜브 생중계 & 문자통역)	코로나19 극복과 녹색회복을 위한 한국의 정책 제안	녹색 회복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방향과 그린모빌리티, 에너지 및 농업부문에서의 녹색 회복 전환방안과 탄소세 도입	
토론회	0630	국회본청 223호 (유튜브 생중계)	일자리 보장제	코로나 시대 기본소득보다 일자리보장이 필요한 이유와 한국형 일자리보장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	
간담회	0827	중앙당 회의실	플랫폼 노동	플랫폼 경제에서의 신노동법에 대한 토론	
토론회	1019	국회본청 223호	디지털 플랫폼기업	디지털 플랫폼기업의 갑질 사태와 독과점 규제방안	
간담회	1019	연구소 회의실	주거안심	‘주거안심공화국’건설을 위한 주거체제 전환의 방향과 진보정당 주거정책의 철학과 원칙에 대한 제언	
간담회	1028	연구소 회의실	플랫폼경제	한국의 플랫폼경제의 보편성과 차별성, 독점의 위험성과 해법, 알고리즘 편향과 지배, 지역상권 잠식과 공정화, 공공플랫폼의 가능성과 사례, 노동권보장, 여론동향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1117	국회본청 223호 온라인 중계	플랫폼경제	한국의 플랫폼경제 특성과 노동친화형 진화방향	
간담회	1221	중앙당 회의실	20대 대선	20대 대선의제와 정의당의 전략	
간담회	1222	중앙당 회의실	20대 대선	현 시기 정의당 대선운동에 관한 한가지 시각	
토론회	1222	국회본청 223호 온라인중계	소득보장	불평등시대 소득보장의 진보적 대안 모색- 정의당의 '시민평생소득'	
세미나	0730	온라인 줌 회의	진보적 외교 전략의 모색	21.5월 한미정상회담 평가 및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전망, 진보적 외교·안보정책	
간담회	0616	중앙당 회의실	여론Toping( 여론조사 T/F 1차 회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2022 선거 대비 정의당의 과제, 정의당 호감도 추이 분석 등	
간담회	0707	중앙당 회의실	여론Toping( 여론조사 T/F 2차 회의)	7·8월 월간 여론동향 보고 및 정의당 호감도 추이 분석, 20대 여성 지지도 제고 방안 등	
간담회	0827	중앙당 회의실	여론Toping( 여론조사 T/F 3차 회의)	지지자 대상 FGI 결과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간담회	1001	중앙당 회의실	당내 경선 종료 이후 정세 분석	대선 경선 관련 정세 분석 및 정의당의 호감 확대 전략	
간담회	1018	중앙당 회의실	후보 선정 이후 핵심 타기팅과 향후 조사 계획 수립 및 정세 분석	당내 단기 타기팅 및 여론동향 보고, 외부 여론조사 결과 분석으로 살펴본 정의당 타기팅 전략, 청년 및 18~45세 여성 중심 타기팅 전략 제언	
간담회	1119	중앙당 회의실	국민의힘 후보 선정 이후 정세 분석 및 제언	- 현재 정의당 후보 평가 - 양당정치 혁파, 제3지대 공간 확보 전략의 의미 - 부동산 변화 분석 - 하이리턴을 위해 감내할 만한 하이리스크 액션 제언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간담회	1227	중앙당 회의실	양당 집중화에서 정의당의 과제와 지지도 제고 방안	- 박근혜 사면이 끼칠 영향 - 중도층 지지자에게 효능감을 주는 우리 후보의 정책 분야 - 20대 청년 부동층 흡수 방안을 마련할 포인트 - 지지도 제고에 효율적인 전략: 이재명 비판 vs. 윤석열 비판 vs. 양당 후보 모두 비판	
간담회	1230	중앙당 회의실	대선 중간 평가 및 지지도 제고 방안	- 정의당 정책브랜딩에 대한 평가 - ‘백래쉬’ 대응 전략 - 정치적 영향력 있는 정치인 확대	
간담회	0616	연구소 회의실	일자리보장제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보장제 적용 방향	
간담회	0623	연구소 회의실	일자리보장제	청년 일자리보장제 설계 방향	
간담회	0623	연구소 회의실	일자리보장제	그린 리모델링 일자리보장제 적용 방향	
토론회	0630	국회 223호 유튜브 중계	일자리보장제	코로나시대 일자리보장제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간담회	0702	연구소 회의실	일자리보장제	비영리 분야 일자리보장제 적용 방향	
간담회	0716	연구소 회의실	일자리보장제	스마트그린학교 사업 일자리보장제 적용 방향	
간담회	0719	연구소 회의실	청년정책	연공급제 개혁 방안	
토론회	0721	국회 223호 유튜브 중계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관련 세계동향 및 국내 제도 개선	
간담회	1130	연구소 회의실	청년정책	청년부채 해소방안	
간담회	1104	국회 본관 223호	가계부채 위기대책과 서민금융 보호	가계부채 현황, 가계부채 정책 평가, 향후 대응 방안	
학술회의	0730	온라인	공적연금 강화	정의당 공적연금 강화 과제와 기존 입장 검토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학술회의	0806	온라인	국민연금 강화와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강화와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 방안	
학술회의	0819	온라인	국민연금 국가책임	국민연금 법적 쟁점 검토	
토론회	0903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	공동결정제 도입	한국형 공동결정제 도입 가능성 검토	
세미나	0910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구조 개편방안 및 시민사회단체 공적연금 개혁방안 분석	
세미나	0916	국회 본청 223호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와 대응방안 검토	
학술회의	1005	국회 의원회관 724호	연기금 투자	연기금 투자 방안 마련	
학술회의	1029	전주 국민연금공단 세미나실	노인 빈곤 해소	노인최저소득보장방안 및 기초연금 강화방안 마련	
학술회의	1105	국회 의원회관 724호	산재보험 강화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전국민 산재 안전망' 구축	
토론회	1119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무원연금 통합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쟁점과 방향	
토론회	1119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노후소득보장	정의당의 공적연금 및 노후소득보장 종합방안	
세미나	1210	국회 본청 223호	위드코로나 이후	신종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다. 교육.연수활동(3건)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연구소 워크숍	1112 10시~15시	파주	대선의제 검토 및 전략	
당원교육	1116 13시~15시	중앙당 회의실	2021년 젠터폭력 예방교육 -젠터폭력의 이해 -정의당 젠터폭력 해결방안 활동가 기본교육	
당원교육	1223 10시~17시	한국노동 빌딩 13층	-2021년 한국사회와 정의당 -2022년 정의당의 핵심과제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	

라. 정책홍보(40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0801 ~ 0831	페이스북 홈페이지	관련 책 소개	「진보의 상상력」 발췌 소개	
0901 ~ 0930	페이스북 홈페이지	관련 책 소개	「일자리보장」 발췌 소개	
1001 ~ 1031	페이스북 홈페이지	관련 책 소개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발췌 소개	
1101 ~ 1130	페이스북 홈페이지	관련 책 소개	「쇼터」 발췌 소개	
0520	정책브리핑	일일이슈브리핑	기후위기 대응 정책	
0527	정책브리핑	상동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0609	정책브리핑	상동	탄소중립 관련 법안 주요 내용	
0623	정책브리핑	상동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검토	
0712	정책브리핑	상동	신한울 1호기 안전 문제 관련 검토	
0429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시 확대, 사교육 자양분 우려된다	
0514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친정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하나	
0602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원격수업이 미래교육이라더니 결과가 결손, 방안은 나중	
0701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늘어난 7조원, 학급당 학생수 개선에 써야	
0804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초등돌봄교실 개선, 3가지 관건	
0901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학급당 20명 가능한 재정은 있다	
1017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공영형 유치원 중단, 무책임하다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029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교육 일상회복, 학급밀집도 완화 방안 부족하다	
1117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52개 대학 절반에겐 기회마저 박탈	
1210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수능 정답유예 관련.. 교육당국은 1심 판결 승복을 미리 정하라	
0216	정책논평	언론배포 및 당홈페이지 게재	고질적인 스포츠 폭력, 처벌만으로 근절할 수 없다	
0303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	
0330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중앙노동위원회, MBC 방송작가 노동자성 인정 판정	
0514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고 이재학 PD 항소심에서 노동자 지위 인정	
0528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방송제작 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사업 시행	
0528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포털 뉴스서비스 알고리즘 공정회 개최	
0531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미디어 바우처	
0601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문체부 'FTA의 문화서비스분야 활용 가이드' 발간	
0709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문체부, ABC협회 부수공사 정책적 활용 중단 발표	
0304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4차 재난지원금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하라	
0607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다르다. 정부와 여당은 원칙을 지켜라	
0702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코로나 1년 넘었는데, 피해실태 조차 파악 못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추경안	
0708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부 초과세수 활용해 2차 추경 10조원 증액하라	
0715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21년 2회 추경에 대한 정의당 요구안	
0724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피해지원보다 생색내기 급급한 2차 추경, 유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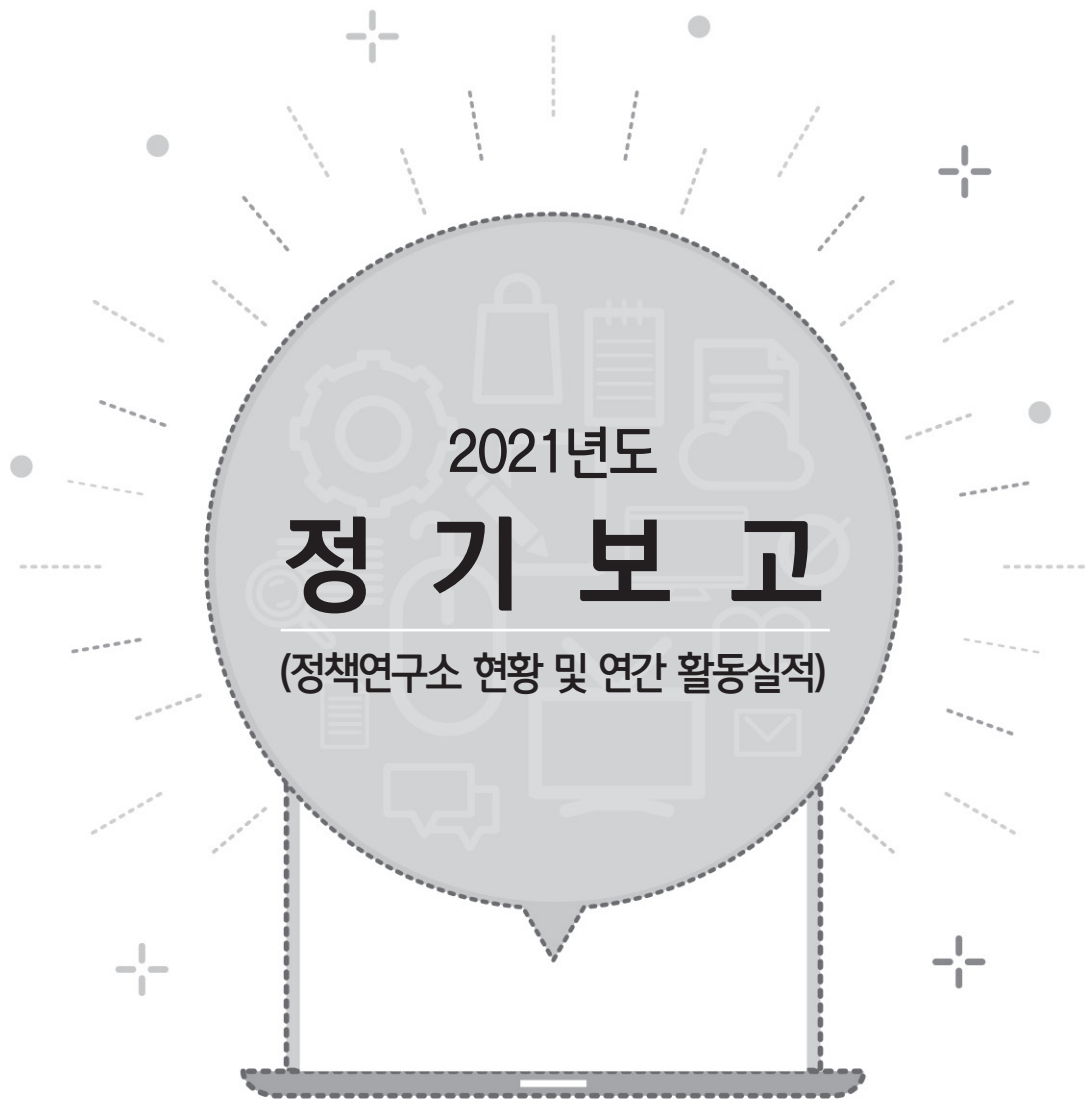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0726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친 재벌·대기업 본색 드러낸 '21년 세법 개정안	
0902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대선·지선용 2022년 예산은 대폭 수정되어야	
1025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자화자찬과 과대표장의 예산안 시정연설	
1104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민생은 없고 선거만 있는 말로만 위드코로나 2022년 예산	
0104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관련	
0121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학대 관련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5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301	정책이론지	‘보다정의’ 창간준비2호- 플랫폼 자본주의의 문제와 대응	자체	100부, 전당원 이메일 발송 및 지도부 및 의원단, 시도당 배부.	
0305	보고서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3월	자체	전당원 이메일 발송	
0603	정책이론지	‘보다정의’ 창간준비3호- 굿바이! 제6공화국	자체	200부, 전당원 이메일 발송 및 지도부 및 의원단, 시도당 배부.	
0901	정책이론지	‘보다정의’ 창간호- 기후위기 시대의 과제와 쟁점	자체	200부, 전당원 이메일 발송 및 지도부 및 의원단, 시도당 배부.	
1201	정책이론지	‘보다정의’ 2호 - 시대진단과 차기정부의 국가전략	자체	200부, 전당원 이메일 발송 및 지도부 및 의원단, 시도당 배부.	

바. 그 밖의 주요활동(3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0122	온라인	24차 이사회	-2020년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 상반기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2020년 하반기 결산안 및 2021년 상반기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기타안건	
0715	온라인	25차 이사회	-이사 선임의 건 -2021년 하반기 사업계획 심의·의결의 건 -2021년 상반기 결산안 심의·의결의 건 -2021년 하반기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기타안건	
1104	중앙당 회의실	26차 이사회	-이사장 선출의 건 -소장 선출의 건 -시행세칙 개정의 건 -기타	



2021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 -





# 국민미래연구원 연간활동실적

## 1. 일반현황

###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IBPIA빌딩 9층			√		

###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7년 이상 :	자체고용: 12명	
석사급:	2년 이상~7년 미만 :	외부파견:	
기 타:	2년 미만 :		
합 계:	합 계 :	합 계: 12명	

###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409,148,472	72,729	126,532,569	535,753,770	482,449,159	53,304,611	

## 2. 주요 활동 실적

### 가. 연구·개발실적(0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 나. 토론회 등 개최(21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간담회	1월 4일	연구원 회의실	서울시 혁신정책 외부전문가 간담회	서울시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간담회	1월 6일	연구원 회의실	서울시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자체장의 권한	
간담회	1월 13일	연구원 회의실	서울 주거 및 부동산 현황	서울시민 주거형태 및 부동산 현황 분석	
간담회	1월 20일	연구원 회의실	경제비전 관련 요약 및 Action Plan	글로벌 자유-혁신-융합 경제도시 구성계획	
여론조사	1월 22~23일	서울	서울시민 동향	서울시민 민심동향 및 해결과제	
간담회	1월 27일	연구원 회의실	복지정책 및 서울시 복지 현황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 모색	
간담회	1월 29일	연구원 회의실	코로나시대 서울경제운영방향 전문가 간담회	코로나19 시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책을 모색함	
간담회	2월 3일	연구원 회의실	서울시 분야별 진단(1차)	도시재생사업 관련 문제점 검토	
간담회	2월 10일	연구원 회의실	서울시 기본 통계+현황 50선	통계로 본 서울시 분야별 문제점과 대안	
간담회	2월 17일	연구원 회의실	여성정책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여성 경력 개발지원	

간담회	2월 22일	연구원 회의실	쓰레기 처리공약	플라즈마 열분해방식 소각장 도입 검토	
간담회	3월 6일	연구원 회의실	서울시 복지정책개발 외부전문가 간담회	서울시 복지정책 및 예산 구조 분석	
여론조사	3월 8~9일	서울	서울시민 동향	서울시 보궐선거 시민 여론조사	
간담회	3월 9일	연구원 회의실	부동산 정책 관련 외부전문가 간담회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본 부동산 정책	
간담회	3월 13일	연구원 회의실	여성정책 관련 외부전문가 간담회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예방 방안	
간담회	3월 16일	연구원 회의실	노인정책 관련 외부전문가 간담회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방안 연구	
여론조사	4월 16~17일	전국	정책개발을 위한 전국 여론조사	정책현안 및 민심동향	
간담회	4월 27일	연구원 회의실	환경 관련 외부전문가 초청 간담회	탄소중립 시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믹스 전략	
간담회	6월 3일	연구원 회의실	공적연금 개혁 관련 외부전문가 간담회	공적연금 개혁방안 -연금 일원화 중심	
간담회	10월 11일	연구원 회의실	화천대유 관련 부동산정책 논의	'화천대유'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	
간담회	10월 30일	연구원 회의실	대북정책 관련 외부전문가 간담회	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방안	

#### 다. 교육 · 연수활동(7회)

교육 · 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세상을 바꾸는 미래 클래스	7월 1일	연구원 페이스북공개	〈한국의 시간〉 저자와의 대화	
세상을 바꾸는 미래 클래스	7월 8일	연구원 페이스북공개	〈ESG 혁명이 온다〉 저자와의 대화	

세상을 바꾸는 미래 클래스	7월 15일	연구원 페이스북공개	〈K를 생각한다〉 저자와의 대화	
세상을 바꾸는 미래 클래스	7월 22일	연구원 페이스북공개	〈경제정책 어젠다 2022〉 저자와의 대화	
세상을 바꾸는 미래 클래스	7월 29일	연구원 페이스북공개	〈넥스트 코리아〉 저자와의 대화	
세상을 바꾸는 미래 클래스	8월 6일	연구원 페이스북공개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미래〉 저자와의 대화	
세상을 바꾸는 미래 클래스	8월 26일	연구원 페이스북공개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저자와의 대화	

#### 라. 정책홍보(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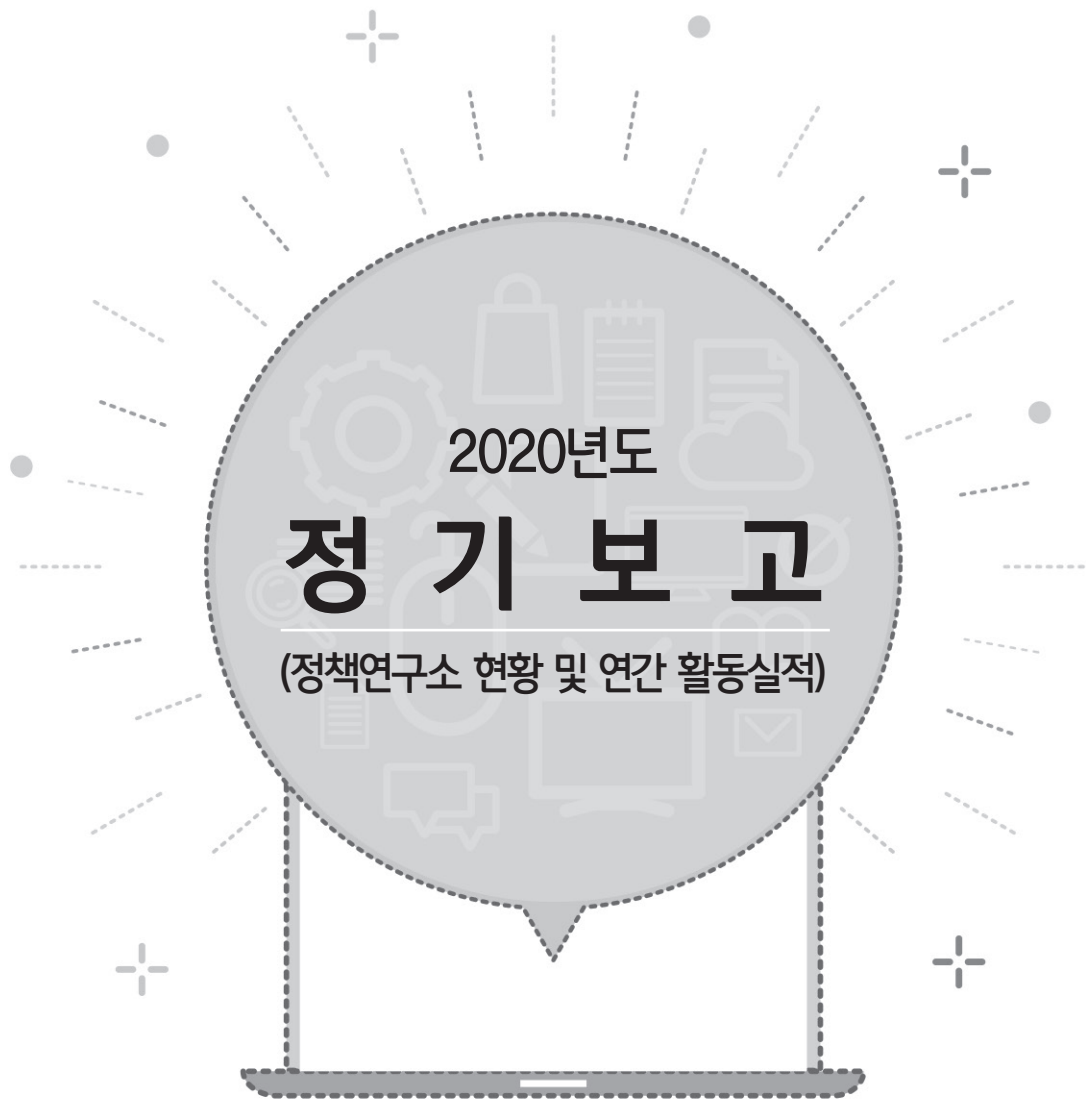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6월 22일	인터넷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재	국가 개혁 기조와 대한민국 미래 어젠다 모색	
7월 15일	인터넷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재	K-방역에 대한 90년대생의 시선, 세대갈등, 교육론 등	

####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0건)

발간일자	종류	제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 바. 그 밖의 주요활동(0건)

일자 (기간)	장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고



2020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열린민주당 열린정책연구소 -



# 열린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 1. 일반현황

###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33,7층 702호 (여의도동, 중앙보훈회관)			√		

###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7년 이상 :	자체고용: 1명	
석사급:	2년 이상~7년 미만 :		
기 타:	2년 미만 :	외부파견:	
합 계:	합 계 :	합 계: 1명	

###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388,236,900	8,936,564	138,033,301	535,206,765	173,753,969	361,452,796	회계기간 (21.1.1 ~12.31)

## 2. 주요 활동 실적

### 가. 연구·개발실적(6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고
2021.03.17	국회운영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미디어정책과제	외부전문가	PDF 146페이지	
2021.05.01.~ 07.20	국회운영	계열사간합병의 불공정논란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외부전문가	PDF 73페이지	
2021.05.02 ~ 07.30	국회운영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전후 회계부정 제재의 변화	외부전문가	PDF 99페이지	
2021.05.02 ~ 07.30	국회운영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외부전문가	PDF 120페이지	
2021.05.02 ~ 07.30	국회운영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이행 현황과 과제	외부전문가	PDF 65페이지	
2021.05.02 ~ 07.30	국회운영	언론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	외부전문가	PDF 74페이지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각1부.

### 나. 토론회 등 개최(1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언론개혁정책토론회	21.4.27	국회본관221호	언론개혁	언론개혁,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 「주」 1. “개최명”에는 토론회, 심포지엄, 학술회의, 포럼, 세미나, 공청회, 진상조사, 여론조사 등으로 기재합니다.  
2. 국제적인 토론회, 컨퍼런스 등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다. 교육·연수활동(7회)

「주」 연구소 집합교육·현지교육·통신교육·정예당원교육·지방당직자교육 등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열린청년아카데미	21.05.03	당사	한국정치 이해와 청년정치	외부(최병천) (통신교육)
열린청년아카데미	21.05.04	당사	청년과 함께 하는 한국사회의 개혁과제	최강욱 대표 (통신교육)
열린청년아카데미	21.05.10	당사	경제정책분석	주진형 원장 (통신교육)
열린청년아카데미	21.05.11	당사	독일민주주의로 본 열린민주당의 미래	외부(최동석) (통신교육)
열린청년아카데미	21.05.17	당사	왜 언론개혁인가?	김의겸 의원 (통신교육)
열린청년아카데미	21.05.25	당사	정치와 검찰개혁	황희석 위원 (통신교육)
열린청년아카데미	21.05.31	당사	국회 제대로 알기	김성희 대변인 (통신교육)

## 라. 정책홍보(00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해당 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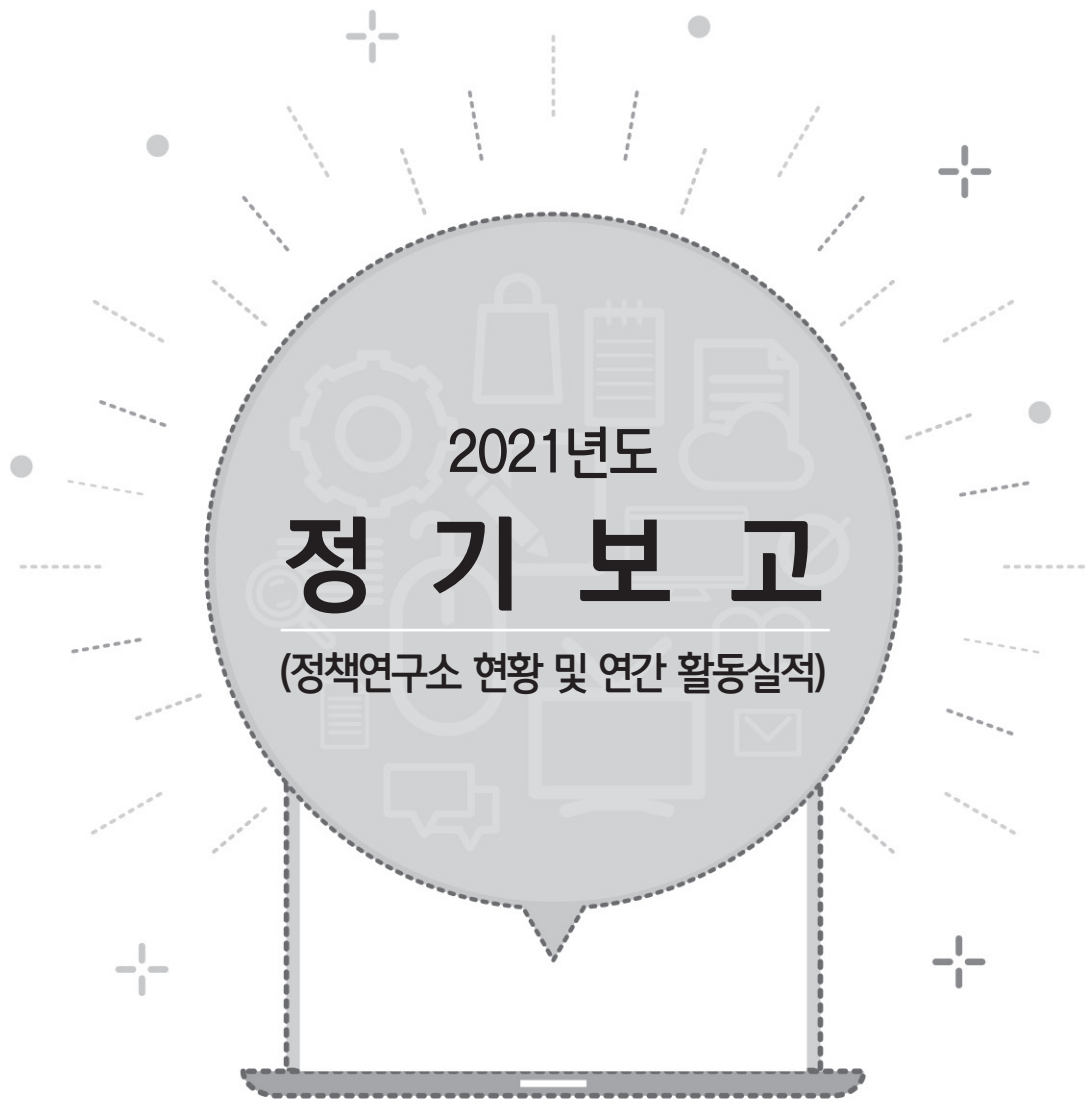
##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5건)

발간일자	종류	제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21.04.27	토론회 자료	언론개혁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책자	200부	
21.09.01	정책대담집	자유만 누리던 한국언론에 책임을 묻는다	책자	1,000부	
21.09.01	정책대담집	가짜뉴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잡는다	책자	1,000부	
21.09.01	정책대담집	세상에 마주 선 한겨레와 KBS	책자	1,000부	
21.09.01	정책대담집	한국언론의 생존 게임	책자	1,000부	

## 바. 그 밖의 주요활동(16건)

- 열린민주당 TV방송 : 열린정책연구원장의 진행으로 당의 주요 정책 공약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담 방송 진행함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출연자
21.01.21	당사	유튜브 홍보	경제개혁	홍순탁
21.02.11	당사	유튜브 홍보	언론개혁	이봉수
21.02.23	당사	유튜브 홍보	언론개혁	최강욱
21.02.25	당사	유튜브 홍보	검찰개혁	황희석
21.02.27	당사	유튜브 홍보	스포츠인권	문경란
21.03.16	스튜디오	유튜브 홍보	언론정책	정준희
21.03.17	당사	유튜브 홍보	부동산정책	정성훈
21.03.29	스튜디오	유튜브 홍보	여론연구	정한울
21.04.14	스튜디오	유튜브 홍보	언론개혁	손병관
21.04.30	스튜디오	유튜브 홍보	농촌회생	박진도
21.05.10	스튜디오	유튜브 홍보	언론정책	이창현
21.05.13	스튜디오	유튜브 홍보	언론정책	이창현
21.05.26	스튜디오	유튜브 홍보	디지털 성범죄	추적단 불꽃
21.06.16	당사	유튜브 홍보	복지정책	양재진
21.06.21	당사	유튜브 홍보	복지정책	양재진
21.07.06	당사	유튜브 홍보	언론개혁	박태웅 김의겸



- 재단법인기본소득정책연구소 -



#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 1. 일반현황

###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23 정원빌딩 705호			√		

###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7년 이상 :	자체고용: 1	
석사급:	2년 이상~7년 미만 :	외부파견:	
기 타: 1	2년 미만 : 1		
합 계: 1	합 계 : 1	합 계: 1	

###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20,700,000	5,464,100	6,953,800	33,117,900	28,839,266	4,278,634	

## 2. 주요 활동 실적

### 가. 연구·개발실적(9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01.30~03.01	보건 복지	지방정부 기본소득도입 논의	자체	p.21	별첨 1
01.30~04.01	농림	동물권 보장과 생태적 한계 연구	자체	p.32	별첨 2
03.01~04.30	기재	순세계잉여금 활용한 전국민재난지 원금 지급 논의	자체	p.13	별첨 3
04.01~06.30	기재/행안	한국판뉴딜의 시사점 및 개선 방안	자체	p.38	별첨 4
05.01~07.31	여성/환노	성별임금불평 등 현황과 개선방안	자체	p.23	별첨 5
07.05~09.15	기재	토지세·탄소 세 기본소득 도입 연구	자체	p.47	별첨 6
08.03~10.01	국토	해외 공공임대주택 사례 문제와 국내 공공임대주택 확대 연구	자체	p.60	별첨 7
09.01~10.25	환노	아동돌봄체계 분석과 성별 분업 문제 및 대안	자체	p.31	별첨 8
10.11~12.15	국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 및 대안	자체	p.54	별첨 9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9 부.

**나. 토론회 등 개최(3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소	주제	주요내용	비고
서울시장 선거 발대식	03.21	기본소득당 중앙당사	서울시장보궐 선거 정책공약	서울형 기본소득과 6대 혁신과제	사전행사
대선 워크숍	10.31	온양관광호텔 사피어어 홀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기본소득 정책 토론 및 공유지분권 기반 정책 논의	(워크숍)
2021 기본소득당 당원총회	12.4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대강당	기본소득 정책설명	기본소득과 동반되는 사회전환 정책 소개	(총회 사전행사)

**다. 교육·연수활동(2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특별강좌	05.19	온라인	대선과 지선의 관도와 기본소득의 시대적 역할	
특별강좌	11.12	온라인	공유지분형 그린뉴딜의 정책적 효과	

**라. 정책홍보(0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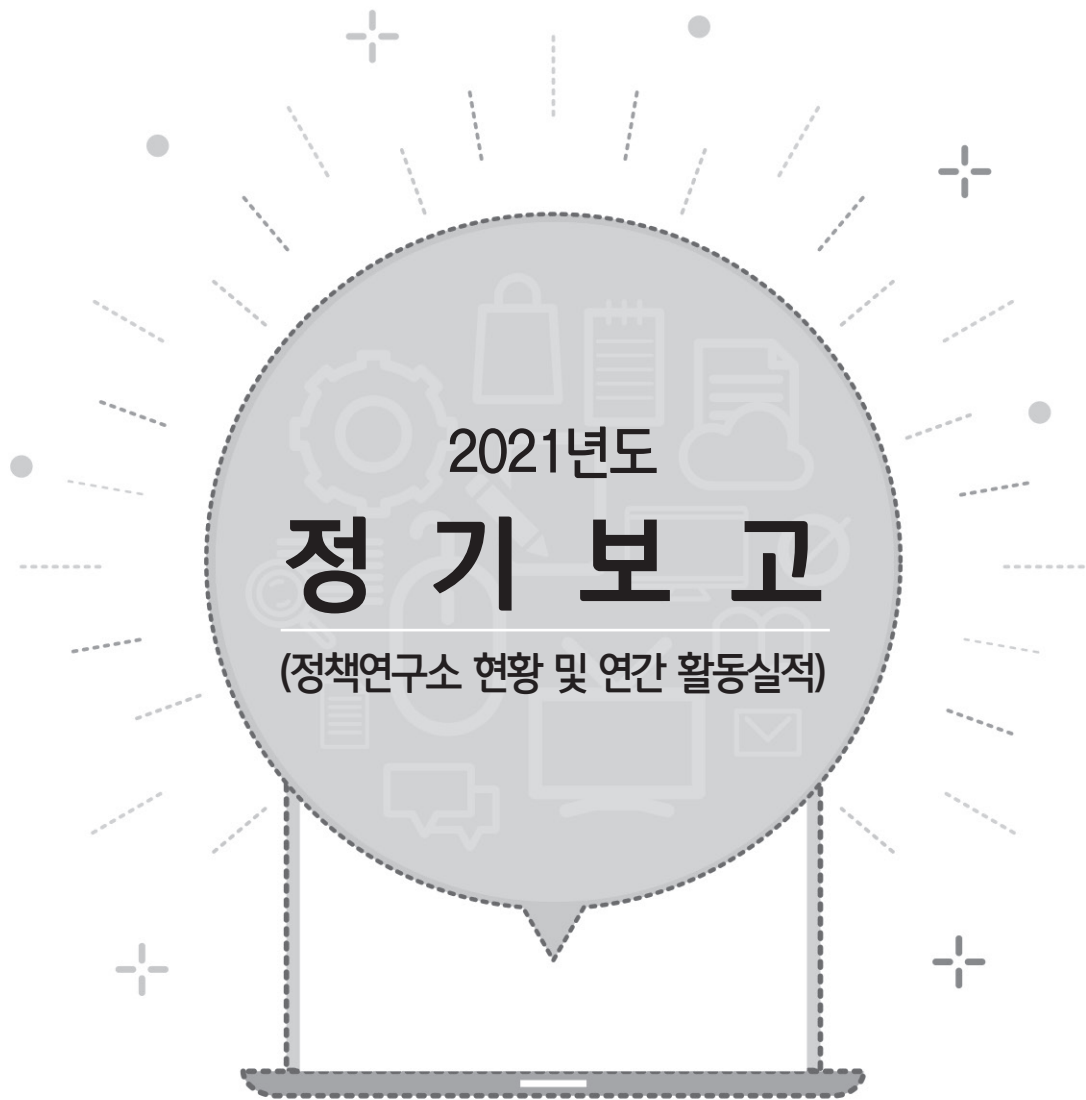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3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서울시장 선거 발대식	03.21	서울시장보 궐선거 정책공약	자체발간	40부, 참가자 배포	
대선 워크샵	10.31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자체발간	20부, 참가자 배포	
2021 기본소득당 당원총회	12.4	기본소득 정책설명	자체발간	50부, 참가자 배포	

**바. 그 밖의 주요활동(00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	-	-	-	-





- 시대전환 시대전환LAB -



# 시대전환LAB 연간활동실적

## 1. 일반현황

###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7, 401호		√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1	7년 이상 : 1	자체고용:	
석사급:	2년 이상~7년 미만 :	외부파견: 1	
기 타:	2년 미만 :		
합 계: 1	합 계 : 1	합 계: 1	

- 「주」 1.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2. 경력은 정당정책연구소,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8,383,172	5,326	4,700,000	13,088,498	3,697,210	9,391,288	

- 「주」 1. 활동경비 관련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 하단에 작성합니다.  
2.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기간 : 2021. 1. 1.~12. 31.)

## 2. 주요 활동 실적

### 가. 연구·개발실적(0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	-	-	-	-	-

### 나. 토론회 등 개최(1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시대전환LAB 창립기념 세미나	2021.4.30	서울하우징랩	'공정'에서 길 잃은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한국사회 부패 본질 진단 및 공정의 제도화 방향, 과제 논의	

### 다. 교육·연수활동(3회)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퍼실리테이터 교육 제1강	2021.10.20	온라인교육	플랫폼정당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중앙당 플랫폼정당과 민주주의위원 회 공동주최
퍼실리테이터 교육 제2강	2021.10.27	온라인교육	참여 퍼실리테이션 및 러닝 퍼실리테이션 교육	
퍼실리테이터 교육 제3강	2021.11.17	온라인교육	퍼실리테이션 실습	

**라. 정책홍보(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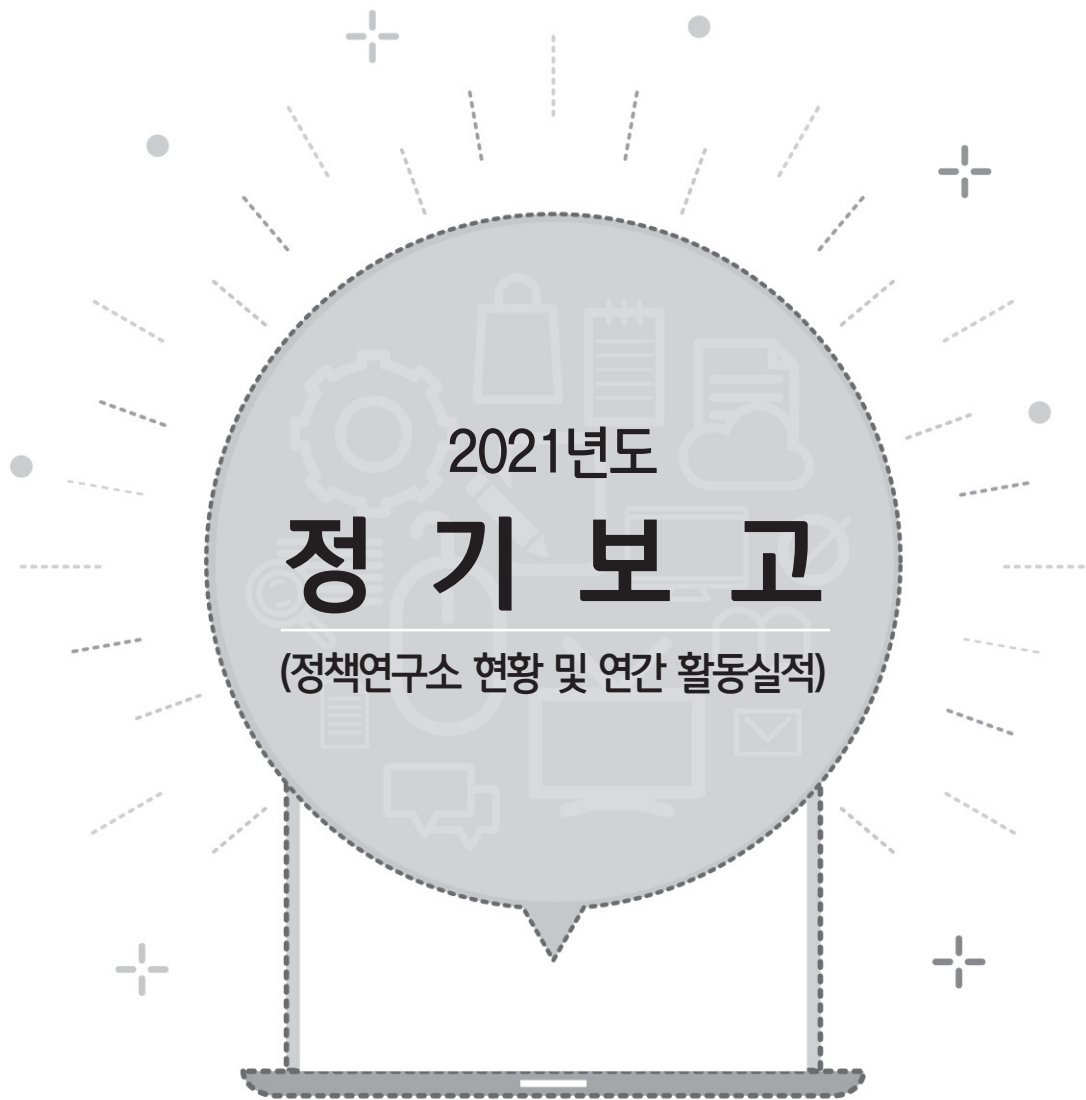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2021.4.30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및 SNS 게재, 보도자료 배포	시대전환LAB 창립기념세미나 : '공정'에서 길 잃은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토론회
2021.10.21	인터넷	SNS 게재	퍼실리테이터 교육	교육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1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2021.4.30	토론회 자료집	'공정'에서 길 잃은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자체발간	10부 현장 배부, 온라인 게재	

**바. 그 밖의 주요활동(5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2021.3.17	온라인	온라인 공론장TF 연석회의	온라인 공론장을 위한 정책 콘텐츠 논의	중앙당 플랫폼정당과 민주주의위원회 참여
2021.6.11	중앙당사	참여형 선거공약개발 연석회의	참여형 선거공약개발 프로세스 구체화	중앙당 정책위원회, 원내 의원실 등 참여
2021.6.24	온라인	제4차 정책기획조정회의	시대전환 제1회 정책경연의 장 정책제안서 예선심의	
2021.9.15	온라인	제6차 정책기획조정회의	시대전환 제2회 정책경연의 장 정책제안서 예선심의	
2021.12.23	온라인	제8차 정책기획조정회의	시대전환 제3회 정책경연의 장 정책제안서 예선심의	



- 민생당 혁신과미래연구원 -





# 혁신과미래연구원 연간활동실적

## 1. 일반현황

###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2			√		

###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7년 이상 :	자체고용: 5	2021.12.31. 기준
석사급: 3	2년 이상~7년 미만 : 3	외부파견:	
기 타:	2년 미만 :		
합 계: 3	합 계 : 3	합 계: 5	

###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277,398,153	2,480,980	3,397,745,603	3,677,624,736	825,464,563	2,852,160,173	

## 2. 주요 활동 실적

### 가. 연구·개발실적(12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1.4.~1.13	행안	주택도시기금 및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개편방향 검토	자체	9p	별첨
1.15~1.20	정치	서울시민 정책 평가 및 관심도 조사	자체	10p	별첨
1.18~1.24	행안	부동산 정책 및 지방세에 관한 서울시장의 권한	자체	11p	별첨
1.18~1.26	행안	사회서비스원 추진배경, 목적 및 기본방향	자체	12p	별첨
2.28~3.4	정치	해외 정권교체사례 조사	자체	13p	별첨
1.2~3.25	정치	서울시장 보궐선거 10대 정책공약 제안	자체	14p	별첨
7.4~7.8	정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법 패러다임 전환	자체	15p	별첨
9.20~9.30	정치	권력분립체계 내에서 법원의 독립	자체	16p	별첨
10.1~10.22	사회	16개 광역자치단체 예산지출 살펴본 청년고용정책	자체	17p	별첨
10.18~11.12	사회	기초연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분석	자체	18p	별첨
11.15~11.26	경제	코로나19 이후, 경제와 노동	자체	19p	별첨
11.29~12.10	정치	외국인의 선거권에 대한 헌법적 소고	자체	20p	별첨

별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12부.

## 나. 토론회 등 개최(13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간담회	2.16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스마트 드론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스마트 드론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간담회	3.3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도심 숲 조성 등 친환경 생태도시 전환	도심 숲 조성 등 친환경 생태도시 전환	
간담회	3.17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독일의 슈뢰더 정부 이후의 노동개혁	독일의 슈뢰더 정부 이후의 노동개혁	
여론조사	3.13~ 3.14	서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판세분석 1차 여론조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판세분석 여론조사	
여론조사	3.14~ 3.15	서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판세분석 2차 여론조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판세분석 여론조사	
여론조사	3.15~ 3.19	서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판세분석 3차 여론조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판세분석 여론조사	
여론조사	3.26~ 3.27	서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판세분석 4차 여론조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판세분석 여론조사	
여론조사	3.28~ 3.29	부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비 판세분석 1차 여론조사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비 판세분석 여론조사	
여론조사	3.28~ 3.29	서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판세분석 5차 여론조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판세분석 여론조사	
간담회	4.12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4.7 재보선의 의미와 결과 분석	4.7 재보선의 의미와 결과 분석	
간담회	5.14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암호화폐(비트코인) 현상과 바람직한 정책	암호화폐(비트코인) 현상과 바람직한 정책	
간담회	6.9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2030세대 갈등과 그 해결방안	2030세대 갈등과 그 해결방안	
간담회	7.6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	

**다. 교육·연수활동(1회)**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해와 통계분석 기법 강의	3.22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해와 통계분석 기법 강의	연구소 집합교육

## 라. 정책홍보(23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7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지구를 위한 법학(권기마 연구원)	발취문
1.28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공정하다는 착각(권기마 연구원)	발취문
2.16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스마트 드론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간담회
2.18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글로벌 그린뉴딜(장평안 연구원)	발취문
2.25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권기마 연구원)	발취문
3.3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도심 숲 조성 등 친환경 생태도시 전환	간담회
3.11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미국 정당 정치사(장윤선 연구원)	발취문
3.17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독일의 슈뢰더 정부 이후의 노동개혁	간담회
3.25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가치전쟁(강동호 수석연구위원)	발취문
4.12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4.7 재보선의 의미와 결과 분석	간담회
4.15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병목사회(권기마 연구원)	발취문
4.22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강동호 수석연구위원)	발취문

4.29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새로운 가난이 온다(장윤선 연구원)	발췌문
5.13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병목사회(권기마 연구원)	발췌문
5.14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암호화폐(비트코인) 현상과 바람직한 정책	간담회
5.21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장윤선 연구원)	발췌문
5.27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다시 촛불이 묻는다(권기마 연구원)	발췌문
6.3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다시 촛불이 묻는다(강동호 수석연구위원)	발췌문
6.9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2030세대 갈등과 그 해결방안	간담회
6.10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다시 촛불이 묻는다(장윤선 연구원)	발췌문
6.17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위대한 과업(권기마 연구원)	발췌문
6.24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권기마 연구원)	발췌문
7.6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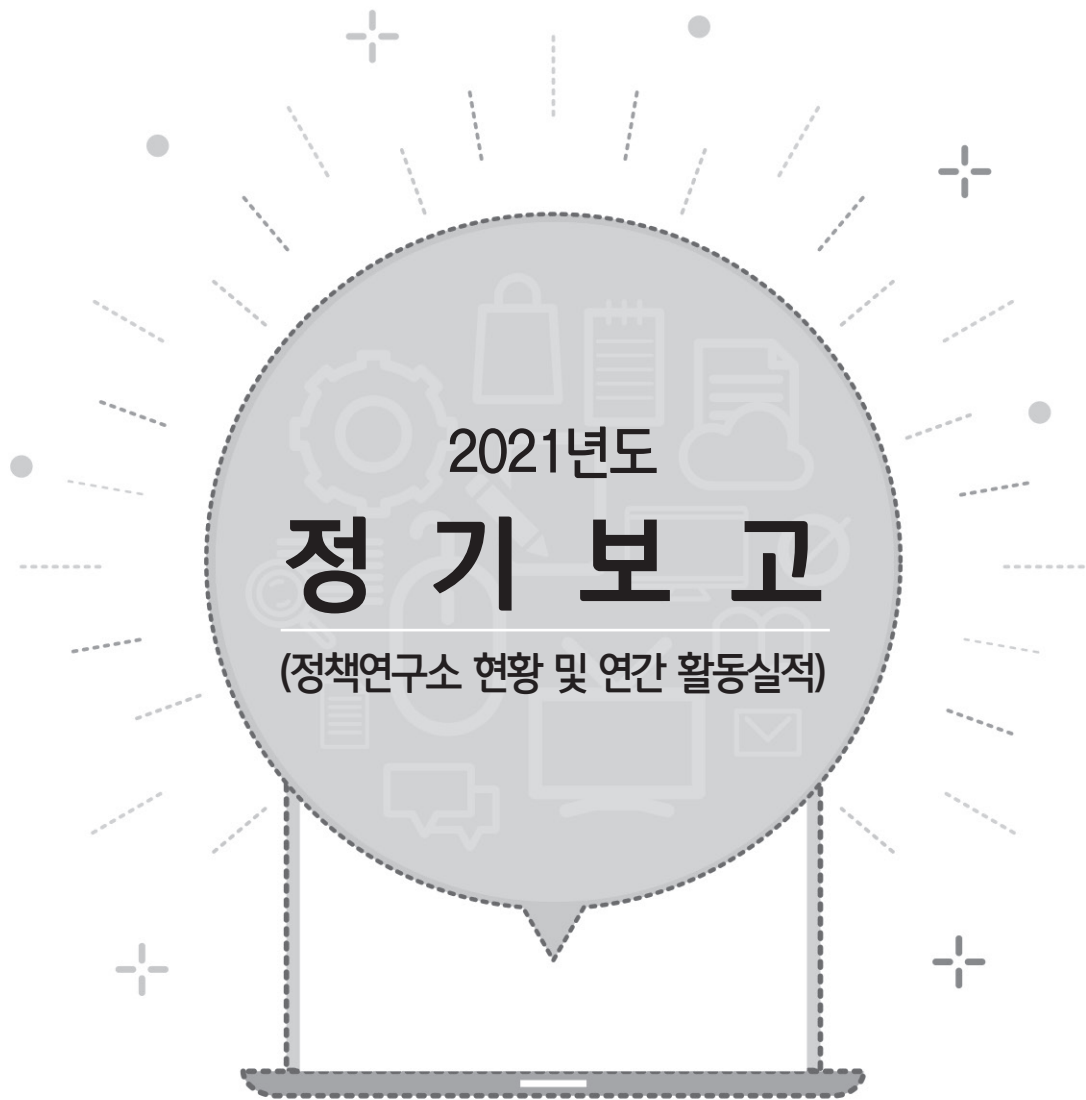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19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6	간담회 자료집	주택도시기금 및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개편방향 검토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13	간담회 자료집	부동산 정책 및 지방세에 관한 서울시장의 권한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20	간담회 자료집	사회서비스원 추진배경, 목적 및 기본방향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2.16	간담회 자료집	스마트 드론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3.3	간담회 자료집	도심 숲 조성 등 친환경 생태도시 전환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3.4	간담회 자료집	해외 정권교체사례 조사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3.11	간담회 자료집	서울시 보궐선거 공약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3.17	간담회 자료집	독일의 슈뢰더 정부 이후의 노동개혁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4.12	간담회 자료집	4.7 재보선의 의미와 결과 분석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5.14	간담회 자료집	암호화폐(비트코인) 현상과 바람직한 정책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6.9	간담회 자료집	2030세대 갈등과 그 해결방안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7.6	간담회 자료집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7.8	간담회 자료집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법 패러다임 전환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1.13	간담회 자료집	미국 뉴딜정치와 21세기 한국판 뉴딜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1.18	간담회 자료집	코로나 시대 생태주의와 그 정책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1.18	간담회 자료집	수소에너지와 수소경제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1.24	간담회 자료집	전국민고용보험, 기본소득, 기초자본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1.30	간담회 자료집	탈물질주의시대 생활정치 녹색아젠다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2.8	간담회 자료집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 전망과 과제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바. 그 밖의 주요활동(1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 28.	달개비(광화문)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주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	토론자 참석	
8. 4.	머니투데이 사무실	대한민국 4.0 좌담회	차기 정부 일자리 정책 발제자 참석	
9. 30.	CCMM빌딩 12층	데일리언 창간포럼	차기 정부 정책과제 발제자 참석	
10. 27.	21세기 북스 스튜디오	2022년 경제 대전망 기자간담회	발제자 참석	
11. 23.	그랜드 워커히호텔	대한민국 100년을 설계	발제자 참석	
11. 26.	렉스턴 호텔(여의도)	20대 대선 고용노동공약 집담회	토론자 참석	





- 민생당 민주평화연구원 -



# 민주평화연구원 연간활동실적

## 1. 일반현황

###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없음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7년 이상 :	자체고용:	
석사급:	2년 이상~7년 미만 :	외부파견:	
기 타:	2년 미만 :		
합 계: 없음	합 계 : 없음	합 계: 없음	

###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0	765	836,922	837,687	238,541	599,146	

## 2. 주요 활동 실적

### 가. 연구·개발실적(0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 나. 토론회 등 개최(0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 다. 교육·연수활동(0회)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 라. 정책홍보(0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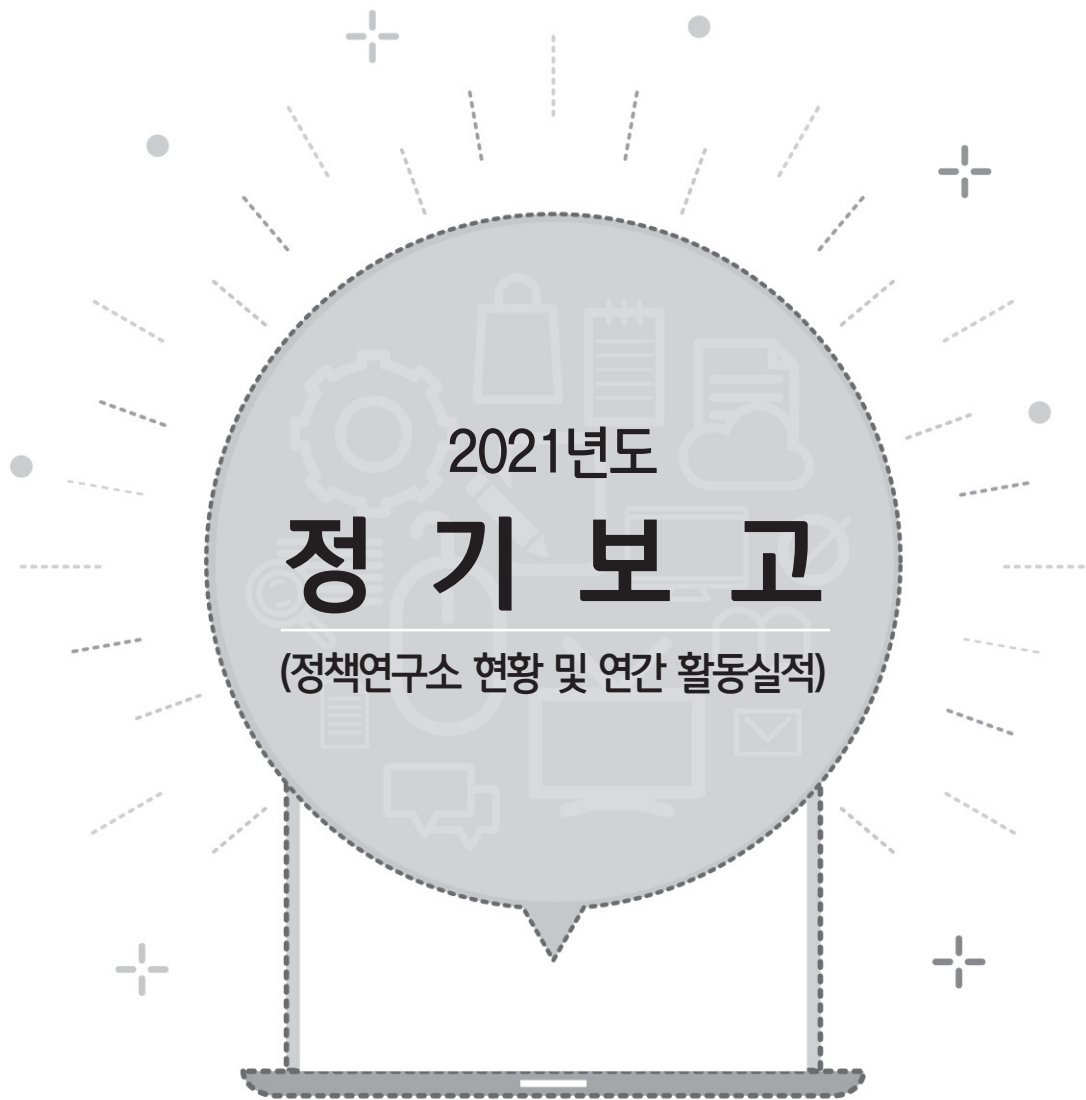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0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바. 그 밖의 주요활동(0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 진보당 정책연구소(원) -





# 정책연구소(원) 연간활동실적

## 1. 일반현황

###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8호			√		

###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7년 이상 :	자체고용: 0	
석사급: 1	2년 이상~7년 미만 : 1	외부파견: 0	
기 타: 1	2년 미만 : 1		
합 계: 2	합 계 : 2	합 계: 0	

###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116,000,000	14,006,320	6,245,855	136,252,175	130,618,812	5,633,363	

## 2. 주요 활동 실적

### 가. 연구·개발실적(26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1.3~9.20	외통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보고서	자체/외부	137	별첨1
1.6~3.15	환노	지방자치단체_노동분야 정책과제	자체/외부	15	별첨2
1.6~3.15	국토/교육	지방자치단체_청년분야 정책과제	자체	10	별첨3
1.6~3.15	국토	지방자치단체_노점상분야 정책과제	자체	7	별첨4
1.6~3.15	국토	지방자치단체_주거분야 정책과제	자체/외부	10	별첨5
1.6~3.15	기재	지방자치단체_자영업자분야 정책과제	자체	3	별첨6
1.6~3.15	교육/보건	지방자치단체_복지분야 정책과제	자체/외부	13	별첨7
1.6~3.15	보건	지방자치단체_장애인분야 정책과제	자체	19	별첨8
1.6~3.15	여성/환노	지방자치단체_젠더·인권분야 정책과제	자체	30	별첨9
1.6~3.15	환노/국토	지방자치단체_탄소제로 시스템전환 정책과제	자체/외부	14	별첨10
1.6~3.15	국토	지방자치단체_교통분야 정책과제	자체/외부	17	별첨11
1.6~3.15	정무	지방자치단체_지방재정·지방자치분야 정책과제	자체/외부	10	별첨12
5.21~8.6	환노/국토	기후에너지 정책비전 보고서 '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치 대전환'	자체/외부	60	별첨13
5.26~8.20	환노	대선 정책비전 제안_노동	자체/외부	28	별첨14
5.26~8.20	여성/환노	대선 정책비전 제안_여성	자체	17	별첨15
5.26~8.20	농림	대선 정책비전 제안_농민	자체	22	별첨16
5.26~8.20	국토/교육	대선 정책비전 제안_청년·청소년	자체	31	별첨17
5.26~8.20	기재	대선 정책비전 제안_자영업자·노점상	자체	7	별첨18
5.26~8.20	보건/기재	대선 정책비전 제안_장애인·소수자	자체	37	별첨19
5.26~8.20	국토	대선 정책비전 제안_부동산·주거	자체	27	별첨20
5.26~8.20	보건/기재	대선 정책비전 제안_교육·복지·의료	자체	37	별첨21
5.26~8.20	환노/국토	대선 정책비전 제안_기후·에너지	자체/외부	11	별첨22
5.26~8.20	기재	대선 정책비전 제안_조세·재정	자체/외부	23	별첨23
5.26~8.20	외통	대선 정책비전 제안_평화통일	자체/외부	10	별첨24
7.29~10.30	교육/환노	20대 능력주의에 관한 보고서	자체/외부	122	별첨25
10.30~12.16	여성	월패드 해킹의 심각성과 정책대안	자체	15	별첨26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26부.

## 나. 토론회 등 개최(11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소	주제	주요내용	비고
세미나	1.21	진보당 대회의실	평화통일포럼 전문가초청세미나①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	
세미나	2.15	진보당 대회의실	평화통일포럼 전문가초청세미나②	-남북합의에 기초한 평화군축의 방향과 전망	
세미나	3.19	진보당 대회의실	평화통일포럼 전문가초청세미나③	-군비증강의 현황과 민주적 군비 통제 방안	
세미나	4.13	진보당 대회의실	평화통일포럼 전문가초청세미나④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 방안	
세미나	8.7	진보당 소회의실	20대 능력주의리포트	-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 20대 남자현상 왜 생겼나 - 능력주의의 역사	
세미나	8.12	진보당 소회의실	20대 능력주의리포트	- 공정성 관련 이슈 사례	
여론조사	8.24	외부	20대 능력주의리포트 (인터뷰조사)	- 20대 여성/남성그룹 인터뷰	
여론조사	9월	외부	20대 능력주의리포트 (설문조사)	- 능력주의, 공정에 대한 담론	
토론회	9.8	진보당 대회의실	기후에너지 정책비전 보고서 '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치 대전환'	-기후에너지정책비전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문제와 해결 방안 -노동자중심의 기후위기대응 -기후위기대응의 전환전 방향과 정치의 역할	
토론회	10.15	진보당 대회의실	20대 능력주의리포트	- 조사결과 분석	
세미나	11.18	진보당 대회의실	월패드 해킹의 문제점과 해결책	-월패드 해킹 문제점 법률적 검토	

**다. 교육·연수활동(2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정예당원교육	3.16	진보당 대회의실	지방자치단체_분야별 정책과제	
정예당원교육	8.20	진보당 대회의실	기후에너지 정책비전 보고서 '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치 대전환'	

라. 정책홍보(26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9.20	정책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보고서	
3.15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지방자치단체_노동분야 정책과제	
3.15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지방자치단체_청년분야 정책과제	
3.15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지방자치단체_노점상분야 정책과제	
3.15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지방자치단체_주거분야 정책과제	
3.15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지방자치단체_자영업자분야 정책과제	
3.15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지방자치단체_복지분야 정책과제	
3.15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지방자치단체_장애인분야 정책과제	
3.15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지방자치단체_젠더·인권분야 정책과제	
3.15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지방자치단체_탄소제로 시스템전환 정책과제	
3.15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지방자치단체_교통분야 정책과제	
3.15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지방자치단체_지방재정·지방자치분야 정책과제	
8.6	정책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기후에너지 정책비전 보고서 '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치 대전환'	
8.20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대선 정책비전 제안_노동	
8.20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대선 정책비전 제안_여성	
8.20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대선 정책비전 제안_농민	
8.20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대선 정책비전 제안_청년·청소년	
8.20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대선 정책비전 제안_자영업자·노점상	
8.20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대선 정책비전 제안_장애인·소수자	
8.20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대선 정책비전 제안_부동산·주거	
8.20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대선 정책비전 제안_교육·복지·의료	
8.20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대선 정책비전 제안_기후·에너지	
8.20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대선 정책비전 제안_조세·재정	
8.20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대선 정책비전 제안_평화통일	
10.30	정책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20대 능력주의에 관한 보고서	
12.6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월패드 해킹의 심각성과 정책대안	

##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26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9.20	연구논문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보고서	자체/외부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15	연구논문	지방자치단체_노동분야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15	연구논문	지방자치단체_청년분야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15	연구논문	지방자치단체_노점상분야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15	연구논문	지방자치단체_주거분야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15	연구논문	지방자치단체_자영업자분야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15	연구논문	지방자치단체_복지분야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15	연구논문	지방자치단체_장애인분야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15	연구논문	지방자치단체_젠더·인권분야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15	연구논문	지방자치단체_탄소제로 시스템전환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15	연구논문	지방자치단체_교통분야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15	연구논문	지방자치단체_지방재정·지방자치 분야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8.6	연구논문	기후에너지 정책비전 보고서 '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치 대전환'	자체/외부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8.20	연구논문	대선 정책비전 제안_노동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8.20	연구논문	대선 정책비전 제안_여성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8.20	연구논문	대선 정책비전 제안_농민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8.20	연구논문	대선 정책비전 제안_청년·청소년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8.20	연구논문	대선 정책비전 제안_자영업자·노점상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8.20	연구논문	대선 정책비전 제안_장애인·소수자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8.20	연구논문	대선 정책비전 제안_부동산·주거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8.20	연구논문	대선 정책비전 제안_교육·복지·의료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8.20	연구논문	대선 정책비전 제안_기후·에너지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8.20	연구논문	대선 정책비전 제안_조세·재정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8.20	연구논문	대선 정책비전 제안_평화통일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0.30	연구논문	20대 능력주의에 관한 보고서	자체/외부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2.6	연구논문	월패드 해킹의 심각성과 정책대안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